
여성농업인의 취업유형별
소득전망과 정책개발

Women's Work and Income of Korean Farms

2001. 11

연구기관
한국여성개발원

농림부

여성농업인의 취업유형별 소득전망과 정책개발

Women's Work and Income of Korean Farms

연구책임자 : 김영옥(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연구자 : 안소영(한국여성개발원 임시연구원)
정금나(한국여성개발원 임시연구원)

2001. 11

이 연구보고서는 농림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한국여성개발원이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내용과 방법 / 2	
3. 농가소득의 개념 / 6	
4. 선행연구의 검토 / 7	
가. 국내의 선행연구 / 7	
나. 외국의 연구 및 정책 동향 / 9	
II. 국내·외 농가소득의 추이와 관련정책	27
1. 우리나라의 농가소득과 관련정책 / 27	
가. 농가소득의 장기변동 추세 / 27	
나. 농가소득의 구조 / 30	
다. 농가소득의 분포 / 38	
라. 농가소득 관련 정책 / 39	
2. 외국의 농가소득 및 관련 정책 / 42	
가. 일본의 농가소득 및 관련 정책 / 43	
나. 대만의 농가소득 및 관련정책 / 49	
다. 외국사례의 시사점: 농가소득정책의 방향/ 53	
III. 농가여성의 취업유형	57
1. 농가인구의 변화 / 57	
2. 농가여성의 취업 현황 / 60	
가. 농업부문 / 60	
나. 비농업부문 / 62	
3. 여성농업인의 농업편입 유형 / 64	
4. 여성농업인의 시간사용 실태 / 67	
가. 「생활시간사용조사」의 개요 / 67	

나. 여성농업인의 시간사용 실태 / 68

IV. 여성농업인의 소득에 관한 실태조사 74

1. 조사방법론 / 74
2. 조사지역의 개관 / 77
 - 가. 부여군 / 77
 - 나. 청양군 / 83
3. 설문조사 결과 / 87
 - 가. 농가의 일반적 특성 / 87
 - 나. 여성농업인의 인적 자본 / 89
 - 다. 여성농업인의 영농 특성 / 93
 - 라. 농가소득 및 그 구성 / 96
 - 마. 여성농업인의 소득 및 그 구성 / 99
 - 바. 여성농업인의 자산 소유 실태 / 103
4. 여성농업인의 소득추정 모형 / 104
 - 가. 모형수립 / 104
 - 나. 추정결과 / 106

V. 여성농업인의 소득에 관한 심층사례조사 110

1. 조사방법론 / 110
2. 심층사례 조사 결과 / 112
 -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12
 - 나. 영농 형태별 농가소득 및 여성농업인 소득 / 123
 - 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수요 / 127

VI. 여성농업인의 소득안정 방안 / 155

1. 주요 분석결과 / 155
2. 향후 농업구조의 전망 / 162
3. 농가소득 안정의 기본방향 / 167
 - 가. 안정적 농업소득의 확보 / 167

- 나. 다양한 농외소득원의 발굴 / 168
- 4. 여성농업인 소득제고 방안/ 170
 - 가. 여성의 농업소득 제고방안 / 170
 - 나. 여성의 농외소득 제고방안 / 175

참고문헌 178

부 록 181

- 부록 1. 마을조사표 / 181
- 부록 2. 여성농업인의 취업유형별 소득전망과 정책개발 조사표 / 183

표 목 차

<표 I-1> 유럽 내 농촌여성의 농업참가 형태	13
<표 I-2> 일본 가정경영협정의 주요 내용	23
<표 II-1> 농가소득의 변동추세	29
<표 II-2> 농산물 가격과 투입재 가격 지수 추이	29
<표 II-3> 한국과 일본의 농가소득 구성비 추이	31
<표 II-4> 농외소득의 추이	32
<표 II-5> 한국과 일본의 농외소득 종류별 구성('99)	33
<표 II-6> 전·겸업별 농가 구성	33
<표 II-7> 전·겸업별 농가소득 비교	34
<표 II-8> 경지규모별 농외소득비중(%)	36
<표 II-9> 경지규모별 농업소득의 가계비충족률(%)	36
<표 II-10> 이전수입	37
<표 II-11> 영농형태별 비교	38
<표 II-12> 전업농가/겸업농가 비교	38
<표 II-13> 경지규모별 비교	39
<표 II-14> 농외소득정책의 변천	41
<표 II-15> 일본의 농외소득률 추이	44
<표 II-16> 대만 농가소득의 구성 및 추이	50
<표 III-1> 연도별 농가 및 농가인구	58
<표 III-2> 연도별 성별 농가인구 추이	59
<표 III-3> 성별 농가인구의 취업 유형	61
<표 III-4> 15세 이상 농가여성의 특성별 취업현황(1995년)	63
<표 III-5> 농가부부의 농업편입 유형	64
<표 III-6> 영농형태별 농가부부의 농업편입 유형	65
<표 III-7> 여성농업인의 하루평균 노동시간 (20세 이상)	69

<표 IV-1> 실태조사의 내용	76
<표 IV-2> 조사대상지역의 인구 현황	77
<표 IV-3> 가구원수, 동거 자녀수 및 영농인구수	87
<표 IV-4> 소유농지의 구성	88
<표 IV-5> 소유면적과 경작면적	88
<표 IV-6> 농가여성과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90
<표 IV-7> 본인의 농업 종사 이유	91
<표 IV-8> 자격증 보유 여부 및 보유 자격증 종류	91
<표 IV-9> 2001년 가구주 직업별 정보화 격차 지표	93
<표 IV-10> 농가여성 및 배우자의 취업유형	94
<표 IV-11> 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경영주 및 영농승계자 여부	94
<표 IV-12> 여성 농업인의 영농햇수와 단체참여 현황	95
<표 IV-13> 추후 영농규모	96
<표 IV-14> 농가소득원 구성	97
<표 IV-15> 이전수입원	97
<표 IV-16> 가구소득, 여성농업인 소득 및 그 비중	102
<표 IV-17> 농가소득 함수식과 추정 결과	107
<표 IV-18> 농업소득 함수식과 추정결과	107
<표 IV-19> 여성의 농업소득 함수식과 추정결과	109
<표 IV-20> 농가여성의 연간 소득 함수식과 추정결과	109
<표 V-1> 심층 사례 조사 내용	112
<표 V-2> 전업 여성농업인의 특성 및 2000년 농업소득	117
<표 V-3> 겸업 여성농업인의 특성 및 2000년도 농업·농외소득	119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5
<그림 I-2> EU 각국의 농업인력 중 여성비율(1997년)	12
<그림 II-1> 농업생산과 농업소득의 변동 추세(1995년 불변가격 기준) 28	
<그림 II-2> 농가소득 구조 변화	30
<그림 III-1> 연도별 총인구와 농가인구	59
<그림 III-2> 여성농가인구와 농업종사자(1999년)	60
<그림 III-3> 농가여성의 연령계층별 비농업부문 종사율(1970년, 1995년)63	
<그림 III-4> 농가 기혼여성의 농업 종사상의 지위	67
<그림 III-5> 여성농업인의 하루평균 시간 사용실태(1999년)	69
<그림 III-6> 농업 및 비농업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구성표(20세 이상) .. 70	
<그림 III-7>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생활시간 구성표(20세 이상)	71
<그림 III-8> 비농업여성취업자의 연령대별 생활시간 구성표(20세 이상) 72	
<그림 III-9> 농업/비농업 취업여성의 연령대별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 73	
<그림 IV-1> 충남 부여군 남면 일대 지도	79
<그림 IV-2> 충남 청양군 정산면 일대 지도	84
<그림 IV-3> 주소등 작목의 분포	89
<그림 IV-4> 컴퓨터 보유 및 활용여부	92
<그림 IV-5> 농가소득원별 농가소득	99
<그림 IV-6> 연평균 농가소득	99
<그림 IV-7> 여성농업인 소득 및 주관적 소득 기여율	100
<그림 IV-8> 여성농업인의 연평균 소득 및 구성	102
<그림 IV-9> 본인 명의 자산 소유 여부	104
<그림 IV-10> 자산종류별 여성명의로의 자산 소유 비율	104
<그림 V-3> 성별 농업노임의 추이	13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소득 및 소득결정요인을 추정하고, 여성농업인의 소득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과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대내외적인 영농환경의 변화는 농업·농촌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최근 농정의 이슈는 어떻게 하면 농업이 기반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와 더불어, 농가와 농촌이 지속되도록 하는 농가의 소득안정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농가소득의 안정이란 것이 새삼스런 정책목표가 아님에도, 최근 들어 그 절박성이 더해지고 있고, 반면 전략적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요구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가여성의 가득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안정적 농가소득의 확보’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2000년 현재 15세 이상 농가여성은 193만명이고, 여성농업종사인구는 152만명으로 전체 농업인력의 51%를 차지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영농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양적인 규모에서 뿐 아니라 1990년대 후반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진 여성농업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김이선 1997; 정기환 1997; 김영옥·김이선 1999; 김영옥·양승주 2000; 이호철외 2001 등) 수행하는 역할측면에서도 여성이 중요인력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가득력 제고는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모두 농가단위의 실태와 방안마련에 머물렀

다.

사실 농가는 하나의 경영체로 생산 및 판매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가족원 개별로 소득을 파악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¹⁾ 남편은 경영주가 되고 부인은 협업배우자로 참가하는 상태에서 부인의 기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따라서 왕왕 무시된다. 노동에 대한 보수와 대가가 없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은 취업여성이라는 정체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노동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진다. 이는 직접적으로 여성노동력의 저생산성을 낳고, 나아가 이농으로까지 연결된다.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에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제까지의 농가 대상 위주의 정책 일변도에서 농가의 개별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진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농가여성의 취업유형별 소득을 추정하고 여성의 기여도를 가시화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나아가 변화하는 영농여건 속에서 농가 여성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우리나라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충남의 2개 郡의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농가여성의 농업 및 농외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제 I 장에서는 연구목적의 소개에 이어 농가소득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농가여성의 취업현황 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정책동향을 탐구한다.

1) 실제로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등의 공식통계조사는 경영주 대상의 가구조사로 가구단위의 소득, 자산, 지출 등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구체적인 농업편입상태와 소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II장은 국내·외 농가소득의 추이와 관련정책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농가소득의 장기변동추세를 본 후 농가소득의 구조와 분포를 분석한다. 이어 농가소득 관련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 본장의 하반부에서는 일본과 대만을 대상으로 외국의 농업·외 소득실태와 관련정책을 정리하였다.

제III장에서는 농가여성의 취업유형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먼저 농가인구의 변화에 대해 개괄한 후 성별 영농인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존 공식통계자료는 농가경영주 중심의 조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협업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에 현재 가용한 자료로서 가장 최신자료인 199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농가여성의 취업유형과 농업편입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외에 가사, 지역사회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여성농업인들의 취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장의 마지막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시간사용 실태를 남성농업인 및 도시취업여성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노동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IV장과 제V장은 본고가 직접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것이다. 먼저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을로 충남의 2개군 9개 마을을 선정하였다.²⁾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마을조사 및 마을내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하여 마을의 영농특성, 농촌마을의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소득자원, 농외소득 자원(일감맞기 사업, 인근 산업체, 농공단지, 부업단지, 관광농원 등) 등을 파악한다. 둘째, 농가여성의 인적자본 특성, 농업편입유형, 영농실태와 농외취업 현황, 자산소유 여부 등을 조사한다. 셋째, 농가 및 여성농업인의 연간소득을 파악한다. 여기서 농업소득은 「농가경제통계」의 방식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작목별 농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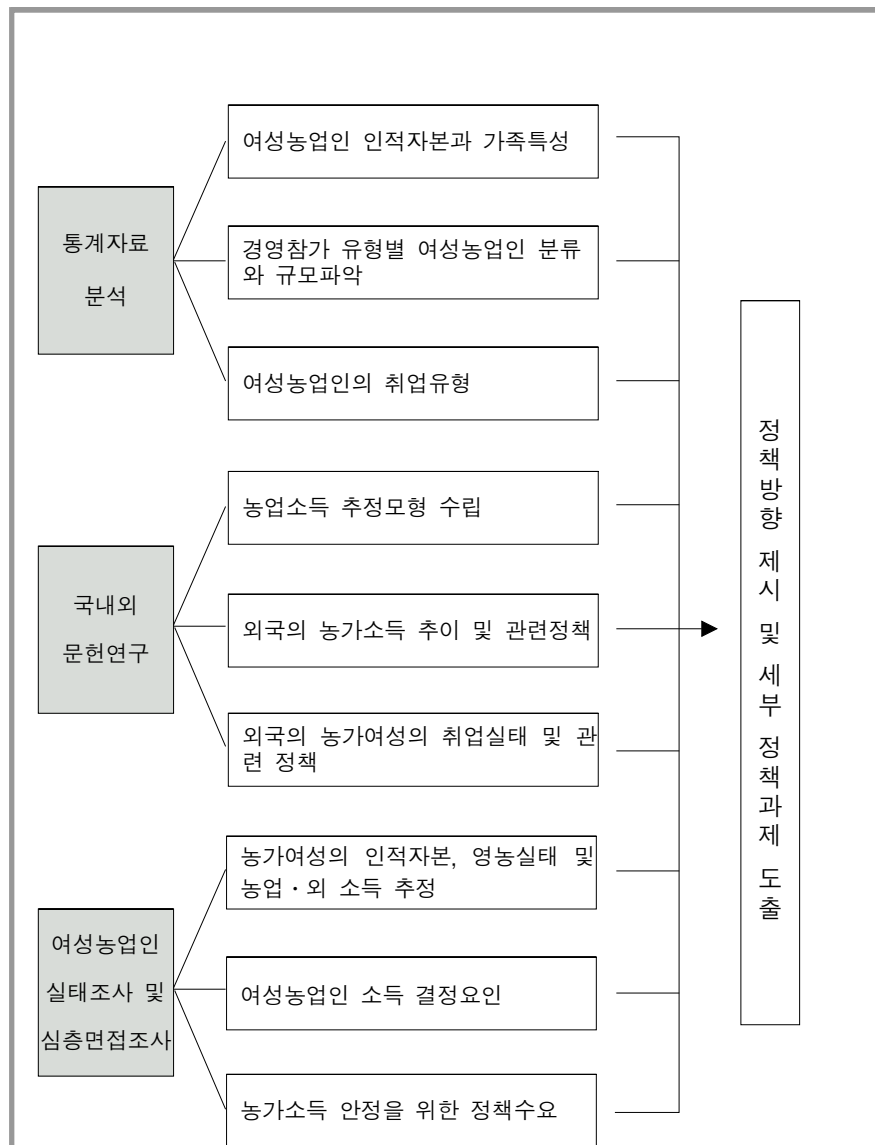
2) “2000년 농어업총조사 잠정결과”를 토대로 농가비중이 높은 충청남도를 1차로 선정한 후, 같은 기준으로 청양군과 부여군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군에서는 농가비중, 농업지대, 일감맞기 사업여부 등을 고려하여 9개 마을을 최종 선정하였다.

산출했으며, 이중 여성농업인의 소득분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투입 시간을 조사하였다.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성농업인 소득추정 모형을 수립하고, 그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제IV장에 이어 제V장도 본 연구가 직접 수행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농가여성의 소득제고의 한 축은 농업소득의 안정화이고 다른 한 축은 농외소득의 확보라는 견지에서,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접조사결과를 분석한다. 즉 과수·채소·화훼·축산농가 등에서 독자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농업 및 농외소득 내역과 농가소득 안정화 대책에 대한 의견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농촌진흥청, 도단위 농업기술원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VI장은 여성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본고가 개발한 정책안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농업구조를 전망하고, 농업 및 농외소득 안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농가여성의 농업소득 제고방안과 농외소득 제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3. 농가소득의 개념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농가경제통계』에서 정의한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 개념을 따른다. 여기서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이외소득), 이전수입의 합계로 계측된다. 사업이외소득은 노임수입, 이자수입, 피증보조수입의 합으로 정의된다. 각각 항목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 농업소득: 농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농가의 당해연도 농업생산활동의 최종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를 의미
- 농외소득: 농가가 농업이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서 겸업소득과 사업이외소득을 합산한 금액
- 겸업소득: 농가가 농사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으로써 임업, 어업, 상공광업, 서비스업에서 얻은 소득과 산나물 채취 및 어류 등을 포획하여 판매한 수입 등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
- 사업이외 소득: 농가가 사업이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써 농가 가구원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노임, 급료 등의 소득과 그 외 임대료, 배당이자, 폐품판매수입 등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
- 이전수입: 농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사례금, 공·사적보조금, 경조비, 퇴직일시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

4. 선행연구의 검토

가. 국내의 선행연구

1) 농가소득에 관한 연구

농가소득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전반에 농가소득을 결정하는 구조가 무엇이며, 도시 근로자가구와 대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농가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가 수행된 이후 소강상태이다. 최근까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농촌의 소득분배 실태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이었고, 미시적 측면에서 농가소득 구조를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가소득원이 다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작물의 특성상 농업소득을 단기간에 상당한 규모로 증가시키는데 따르는 어려움과 그간 수행된 농외소득 제고사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농가소득 제고방안 마련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미 1980년대 초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유병서(1983)의 연구에 따르면, 1981년도 농업경영 활동에 의한 농업소득은 2,476,463원이었고 동년 농가 호당 평균가계비는 2,676,090원으로 추정되어 농업소득에 의한 가계비 충족도는 92.5%에 미쳤다. 가계비 충족도는 영농규모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1.0ha 미만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으로는 가계비를 충족 못하고 있으며 비록 1.0-1.5ha 규모의 농가에 있어서도 농업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64.9%에 달해 도시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보더라도 농업활동에 의한 보수가 너무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영세농뿐만 아니라 중농층에서도 농업소득의 농외활동에 의한 소득원을 찾아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농업소득으로는 농가의 가계비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소득 증대사업으로 농특사업, 복합영농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유

통개선이 요구된다. 농외소득 증대사업으로 부업단지 조성, 새마을 공장을 추진하여 농외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농가소득 증진방향은 이미 1980년대에 수립되었고, 지금까지도 유효할 정도로 농가의 소득보장 방안마련은 오래된 숙제의 하나이다.

한편 농가소득의 배분과 그 결정요인을 밝히는 작업은 농가소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농가간 및 도농간 소득불균형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반성환(1979), 주학중(1981), 권순원(1992) 등이 있으며, 농가 소득 불균등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는 정기환(1992), 박대식(1995), 이장영(1997) 등이 있다. 이 중 정기환(1992)은 농촌빈곤가구의 특성으로 농지소유규모가 대부분 0.5ha 미만인 영세규모이고 부양가족은 많으나 생산적인 노동력이 적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점을 들었고 박대식(1995)은 농촌빈곤을 농업구조 특성, 비농업부문특성, 정치·경제적인 특성에 대해 영남과 호남 등 지역별로 나누어 회귀분석하여 빈곤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한편 이병기(2000)는 1997년 경제위기 전후기간의 농가소득 및 농가소득계층간 불균형의 변화와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1991-99년간 『농가경제통계』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 농가소득불균등은 연령, 농가규모, 학력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경지규모는 경제위기 이후에 소득불균등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여성농업인의 소득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이전까지는 대다수의 농업·농촌관련 연구들에서 성별 변수에 대한 고려가 없어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이 때까지 김주숙(1976, 1987), 한국여성개발원(1987)의 연구가 시도적 연구로서 기여하였고, 1990년 이후 조옥라(1992), 김종숙·정명채(1992) 등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어 김이선(1997), 정기환(1997) 등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이 여성의 농업참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여성농업인의 취업실태에 대한 체

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는 농업생산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또 노동부하량도 증가하여 왔으나 여성은 여전히 영농의 보조자로 머물러 있는 현황을 사례조사 및 거시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김영옥·김이선(1999)은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농업성장을 담보할 전문인력의 확보 차원에서 농가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대상은 크게 농업경영주와 농가부인이면서 농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농업파트너로 나뉘어져야 하며, 특히 젊은 여성농업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전문농업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은 일반적인 농촌여성교육을 탈피해 특화된 목표와 교육내용을 갖춘 전문교육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연구들이 여성의 소득을 파악하거나, 구체적인 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부업소득을 활성화하여 여성농민의 소득향상방안을 제시한 연구를(김현숙, 1999) 제외하면, 여성의 농업소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농업소득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첫째,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 자체의 부진, 둘째, 농업소득 중 여성의 기여분을 추정해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농 체제 하에서 여성농업인의 소득과 그 결정요인을 추정하는 시도적 연구로서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나. 외국의 연구 및 정책 동향

여기서는 최근 유럽과 일본 등에서 이루어진 여성농업인의 취업현황에 대한 연구결과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는 농업종사자의 취업능력 제고와 소득 증대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여성

농업인의 기여도에 대한 연구와 관련정책이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Margret Alston(1995)는 호주 농촌에서 여성들은 과도한 가사노동의 책임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 상품 생산에서도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농업 노동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 상품 위주의 좁은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여성이 직접적으로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가시화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여성의 기여도가 가치절하 되고, 통계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여성농업인의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는 가족농 체계의 효율성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조사대상 여성들이 가사노동, 돌봄 노동, 가구의 농업 참여 등 과도한 노동에 점차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무급 가족종사자라는 지위는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여성의 정체성 형성에도 장애가 된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개발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은 여성중심적인 참여적인 방법(participatory methodology)이다. 즉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성은 농촌의 경제·문화적 구조뿐 아니라 자신의 연령, 가족구조에 따라 상이한 역할과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자의 필요나 이해가 다르다. 앞으로 확인하게 되겠지만, 외국의 여성농업인 정책 개발의 특징은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한 농업정책만이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과 생산성을 높여 농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1) EU의 여성농업인 취업현황에 대한 최근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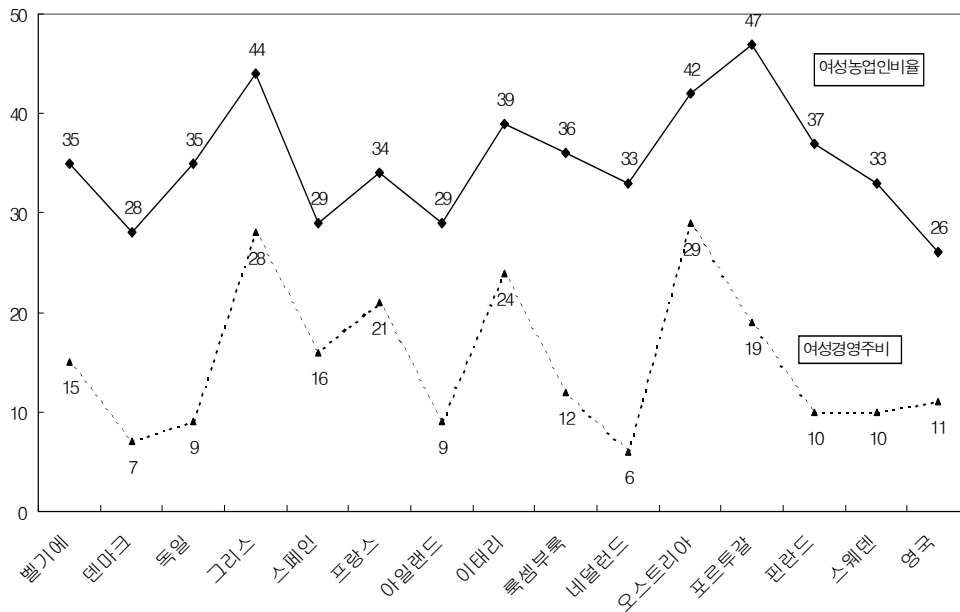
가족농이 중심을 이루는 유럽에서는 여성 농업인의 가치 재평가와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 농업인에 대한 기본조사를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루어진 두 연구결과를 주목할 만하다.

먼저 1997년 유럽의 농가구조 조사(Farm Structure Survey: FSS)에서 EU-15³⁾의 농가에서 총 1,465만명이 피고용인 또는 가족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 농업노동력 중 537만명(37%), 그리고 전체 경영주의 약 19%가 여성이었다. 이처럼 유럽 농촌 인구와 농업의 급속한 감속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안정적인 농업노동력 공급원으로서 농업 생산에 기여해 왔음을 알 수 있다(Jean-Marc Fremont, 2001). 여성농업인 통계수치는 국가별로 적잖은 차이가 있어,⁴⁾ 포르투갈은 1997년도에 47%, 그리스는 44%, 오스트리아는 42%로 평균치 40%를 상회하는 반면에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각각 29%, 덴마크, 영국은 각각 28%, 26%,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인력의 종사상 지위는 남성과 여성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1997년 유럽연합의 여성농업인구 절반이 “배우자”의 지위인데 반해 남성은 60%이상이 “경영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유럽연합 15개국에서 농업경영주는 총 7백만명 정도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여성은 19%이었다. 여성경영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오스트리아(29%),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24%)이고,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네덜란드(6%)와 덴마크(7%)이었다.

-
- 3) 유럽공동체를 포괄하는 범주가 다양한데, 그 중 EU-9라 할 때는 유럽 9개국(B, DK, D, F, IRL, I, L, NL, UK)을 지칭한 것이고, 여기에 EL을 포함시키면 EU-10, 다시 여기에 E, P를 포함시키면 EU-12, 다시 여기에 A, FIN, S를 포함시키면 EU-15이 됨.
 - 4) 또한 여성농업인의 취업내용도 각국별로 상이하다. 최근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 자영업 농장 경영주가 늘어나는 반면, 스페인에서는 임시, 계절노동이 농촌여성의 일이 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2000).

<그림 1 -2> EU 각국의 농업인력 중 여성비율(1997년)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2001. "EU 여성농업인의 취업동향." 세계농업뉴스 제10호.

또 하나의 연구는 유럽연합이 CAP 연구의 일환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4국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이다(EU CAP Studies, 1999).

네 지역 모두에서 규모가 큰 농장일수록 여성의 농사일 참여가 높아 농장규모와 여성의 농업참여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로 농사일을 하는 여성들 중에서 북부 유럽 여성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들이 농사일에 무급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유급노동자로 참여할 것과 여성농업인이 전문적인 농업인으로 인식되는가의 여부와 관련있다. 북부 유럽 여성들은 보다 많은 시간을 농사일에 투여하길 원하는 데, 이것은 농사일이 의무라기 보다는 보다 많은 선택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비교적 (농업관련)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일수록 그러한 성향을 보였다.

<표 1-1> 유럽 내 농촌여성의 농업참가 형태

	그리스 (Fthiotis)	이탈리아 (Udine)	네덜란드 (동서남북 4지역)	노르웨이 (Nord-Trondelag)
주로 농사일	63%	40%	65%	30%
주로 비농사일	14%	29%	8%	38%
복합노동	11%	14%	11%	23%
주로 가정주부	12%	17%	16%	9%
총조사대상수	100%(155명)	100%(150명)	100%(496명)	100%(424명)

주: ()은 각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명임.
자료: EU CAP Studies. 1999.

네덜란드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지난 10년간 농업에서의 고용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은 증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남부 유럽에서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중에서 보건복지, 호텔과 레스토랑, 사업관련 서비스, 교육 분야 서비스업의 성장이 가장 높아 농촌 지역의 관광산업이 여성의 고용을 증가시키리란 것은 확실하다. 네덜란드 여성들이 농사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 지역에서 농업 경쟁력으로 인해 농업에서의 노동력 수요의 집중 때문이다. 노르웨이 여성의 비농사일 종사 비율이 가장 높는데 이것은 1970년대 이후 교사, 보모등 농촌지역의 공공 영역의 증가가 여성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직장과의 평균거리는 13 Km인데, 차로 이동한다. 이탈리아의 농촌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농외일은 재봉, 청소, 미용업, 소매업 등이었다.

이와 같이 여성의 농외취업에는 지역내 노동력 수요 정도, 여성의 유급 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같은 외생적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역 경제의 농업 의존도가 낮을수록, 즉 경제가 다양할수록 여성의 취업기회는 높았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조사지역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고용기회가 비교적 많아 여성들의 비농사일 참여 기회가 높았다. 이러한 취업의 기회와 여성의 비농사일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교통과 양육, 탁아시설 등의 사회적 기반 시설의 여부이다. 또한 네 국가 모두에서 여성들은 농외취업을 하고 싶어했는데, 그러한 일이 안정적인 소득과 보다

나은 직업 조건, 환경으로 삶의 질과 사회적 지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경험은 분명한 목적과 수단이 있을 때, 농촌의 (개발)정책이 여성 경제활동과 지역의 활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정책의 목적은 균형적인 인구정책과 고용과 복지에서의 평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젊은 가족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U CAP 연구(1999)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토대 위에서 두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농촌 여성의 노동 조건을 전문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경영활동과 생산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농촌 여성에 대한 직업 훈련과 자문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농촌 여성은 농업인의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잠재 취업인구로 대해야 한다. 농가 경제에 기여하는 여성은 독자적으로 소득인, 사회복지 피보험자로 대우받아야 한다. 둘째는 농업구조조정 정책에서도 남녀는 평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방식은 농장을 단위로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구조 정책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가구주에게만 아니라 개별 가족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EU의 농촌지역에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의 증가는 여성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덴마크의 경우, 농업은 전통적으로 가족농에 기반하였고 여성은 가족농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일어난 농업 구조조정 과정은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고, 자본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됨으로써 여성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74년부터 1994년간 여성 농외취업자가 2배로 증가하였다(Helene Oldrup, 1999). 즉 50세 이하의 농촌여성중 비농업취업자 비율이 76%로서 전국 평균수준에 육박한다. 이와 같이 농촌여성의 비농업부문 취업 경향이 뚜렷하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적인 농촌발전은 양질의 고용기회를 폭넓게 만들어냄으로써 그렇

지 않으면 도시로 나가버릴 젊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고용에 대한 전망을 열어준다. 이것은 원격통신이나 지역서비스, 관광 및 레저산업, 환경산업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확장과 더불어 그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독일 Hessen 지역에서는 기차 및 버스노선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8명의 여성에게 전일제와 시간제로 일자리를 창출했다. 여성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그것은 또다시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시키는 일이다.⁵⁾

프랑스의 2000년도 농업인구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농업종사인구의 수가 131만 9천 명(계절 및 임시 노동자 제외)에 이르는데, 지난 번 조사시점인 1988년도 이래 35%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세는 기계화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한 생력화, 그리고 여성배우자들의 농외취업으로 설명된다.⁶⁾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농업부문뿐 아니라 서비스, 교육, 관광, 금융 등 새로운 부문에서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농촌지역에서 농업외 취업의 활성화는 이제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농업관련 정책 마련에 있어서 이들 농업외 취업인구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정도이다.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가 1998년 농업경영소득(Estimated Value of Agricultural Operation, EVAO) 22,500\$(호주 달러) 이상의 대규모 농장(곡물, 축산, 낙농업)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총 조사대상 농가 중 농업외 소득활동 농가 비율이 남자 25%, 여자 33%로 전체 30%가 농업외 소득 활동 농가였다. 또한 주요 농업외 소득 활동 분야는 남자는 농림수산업 분야 43%, 건설 12%, 운송·보관업 10%이고, 여자는 교육분야 32%, 보건·지역사회서비스 21%, 소매업 11%로서 남자의 경우 단순 노동 비율이 높은 편이나 여자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사무원, 유통업, 서비스업에 종사하였

5) Women active in rural development(2000), 「Assuring the future of rural Europe」.

6) 농촌경제연구원(2001), “프랑스 농업인구조사 결과요약,” 세계농업정보, 2001.8.8.

다. 한편 농외소득활동을 보면

- 교육수준이 높은 농가에서 농외소득활동의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고
- 농외취업 농가가 92/93년의 20%에서 96/97년의 30%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 낙농농가는 농외소득활동 비율이 낮은 편으로(7%) 낙농농가의 노동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 농외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의 평균 연령이 47세이고 전업농의 평균연령은 53세로 농외소득활동을 하는 농민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⁷⁾

이와 같이 유럽 각국에서 농촌여성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외취업에 참여함으로써 농가소득과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여 왔지만, 여성의 노동가치는 평가절하되고, 이들의 노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인색한 편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여성의 농가소득 기여와 가치는 농촌의 생존능력과 생산성을 정의하는 변수로 간주되어야 한다(Margaret Alston, 1995). EU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평등한 기회와 지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노력의 핵심이 지역 상황과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무엇인지, 각각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 및 평가하는데 두어져야 있다. 성 관점(gender perspective)이 반영된 정책이 더 이상 시범적인 것이 아니라 정규정책이 되어야 한다.

2) 여성농업인의 기여도 측정

여성 농업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 지역의 농가 부부의 농업 노동 참여와 일상생활을 조사한 연구의 방법은 여성농업인의 경제기여도와 노동양태를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준다(Alison Meares, 1997). 연구자는 연구 대상 가정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모두 기록하였다. 이 밖에도 부부 각각에게 매일, 매달

7) 송지봉. 1998. 9. “호주농가의 농외소득 현황.” 농림부 내부자료.

그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내용을 수록한 계절노동 달력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 노동달력에는 노동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학교 스케줄에 따른 보육활동 등 농업 외적인 활동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성 농업인들이 생산노동(수입에 관련된 일과 교환가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 재생산노동(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일), 그리고 공동체 운영활동(공동체에 기여하는 일로 마을 우물 청소, 연소자 돌보기, 교육 등) 등의 영역에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보였다.

3) 여성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개발

복합적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노동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가정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관점과 접근을 떠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농촌여성에게 여유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교육 및 문화활동에의 그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한 이유임을 고려해야 한다. 교통서비스와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고, 남성들이 가족에 관련된 일들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부재는 여성의 취업과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을 막는 주된 장애이다. 1991년에 수행된 덴마크의 한 연구는 농촌지역에 사는 3-6세의 어린이가 공공 탁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동등고용이라는 목적과 지역과 농촌사회의 발전에 대한 지원 사이에는 강력한 시너지효과가 있다. 교통체계와 탁아서비스를 강화하여 여성의 고용 접근도를 높이는 것은 인적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이기도 하다. 여성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그것은 또다시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시키는 일이다.

여성은 언제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공식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개발되지 않은 인적 자원으로 나타난다. 직업자격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직업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본격적인 직업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자

기확신과 기본적인 기술은 여성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발견하도록 해준다.

일례로 여성들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대안적 훈련 프로그램이어야 한다(Sally Shortall, 1996). 농업 교육은 대부분 남성의 노동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내용과 훈련은 여성들이 농장에서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의 복잡한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에게 농사 훈련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다. 농업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사고 방식 역시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농장에서의 일과 생활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사실상 농장에서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 자살 등이 실제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농장 노동과 스트레스 다루기 등은 별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농업생산과정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도록 농촌 여성에 대한 직업 훈련과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 여성을 농업인의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잠재적인 노동인구로 대해야 한다. 또한 농가 경제에 기여하는 여성은 단독으로 소득자, 사회복지 수여자로 대우받아야 한다.

4) 일본의 여성농업인 현황

일본에서 현재 농업 취업 인구의 약 60%가 여성이고, 농업생산에 있어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일본의 여성 농업인들은 농업 이외에 가사, 육아, 간병 등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간병인의 70%가 가족원이고 그중의 50%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 가공품 직매소 등 여성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지역 활성화 기여도도 크다. 하지만 여성은 자신 소유의 자산형성 정도, 농가경영의 참여 정도, 일본 농협(Japanese Agricultural Co-operatives, JA)의 임원 참여비율 등을 볼 때 그 기여도에 적합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농촌생활종합연구센터가 여성농업인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는데(農村生活綜合研究センター, 1999),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40.3%는 “남편을 따르는 입장”이고, 다음으로 “남편과 동등한 입장”이 32.8%이었다. 남성의 80%이상이 자신을 「경영주」로서 자각하고 있다. 여성중 30%이상이 “남편과 같은 입장”이라고 하나, “아내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하는 남성은 4.9%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농업경영상의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을 말하고 있다.

둘째, 인정농업인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49%), 여성은 5.2%이다. 여성은 약 7명 중 1명 꼴로 인정농업인이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남성의 60%는 “아내가 인정농업인이 되는 일에 찬성”이었다. 지금까지는 세대에서 1명이라는 제약이 있었지만, 남성의 3분의 2는 그 점의 개혁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거기에 반대하는 남성의 특징은 50-59세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본인 명의의 농지 소유상황은 여성의 7.3%로, “14명 중 1명”이고, 거기에 비해 남성의 75%는 본인 명의의 농지가 있다. 농지를 소유하고 싶다는 여성은(22.9%), 상대적으로 경영상의 입장이 높고, 가족경영협정체결을 바라고, 농협 정조합원 가입이나 농업이사, 농업위원에의 취임희망도 높다. 그 반면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여성은 68.7%남성은 10.7%로 여성의 약 70%는 농지소유에 대해 소극적이다. 그 이유로는 남녀 모두 “집의 재산이기 때문에”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농지를 소유하는 것의 이점은 여성은 “소유재산이 얻어졌다,” 남성은 “경영의 기반이 굳혀졌다”가 가장 많아 부부간의 뉘앙스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①농협 정조합원의 경험이 있는 비율이 남성에서 75.5%인 반면, 여성에서는 13.4%이다. 여성이 정조합원이 될 수 없는 이유로는 “세대 단위이기 때문”과 “농지가 없기 때문”이 많았다. 희망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그 이유로 “자신에게는 임원이 될만한 충분한 능력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이 62.4%이었다. ②농협위원의 경험은 남성 13.9%, 여성 1.6%로 농협의 정조합원 경험보다도 남편과의 차가 크다. 이후 농협 위원을 희망하는 여성은 11.2%였다. 희망하는 여성의 28.8%가 “이후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남성의 48.3%는 「아

내를 농협위원으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서, 의사결정의 장에서 여성참여를 위해 제도와 의식의 쌍방의 개혁이 필요하다.

마쓰오카 고우메이(2000)는 일본농협(JA)의 남녀 참여비율의 현격한 차이에 대해 이것이 “한가구 한조합원제”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JA의 사업과 운영은 “가구” 만 인식하고 “개인”은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을 대표하는 아버지가 “정조합원”이고, 어머니는 “따라가는 조합원”이었던 것이다. 한편 여성참가가 활발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여성층의 문제로서 JA에서 시키는 대로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여성들 자신이 학습활동 등 각종 활동에 동원되고, JA에 이용된다는 생각이 강했고, 주체성의 발휘와 참가의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酪農經營・果樹作經營における女性の資産形成』(2000) 보고서는 여성이 농지취득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보다는 여성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유동자산을 형성하게 하는 방안을 탐구하였다(農村生活綜合研究センタ, 2000.3). 일본에서는 고령사회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농가여성에게도 노후생활의 경제적 자립이 요구되며 이런 점에서 농업자 연금 가입자격이 여성에게 개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주로 젊은 후계자 여성 세대에서 돌아가고, 농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해온 경영주 세대 여성의 많은 부분은 공적 연금에 따라 개인 자산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노후생활의 경제적 자립에 쫓기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이 개인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노후 생활의 경제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부나 학습활동, 취미, 스포츠 등 자기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세대 걸쳐 확산되고 있고, 특히 젊은 여성의 자기실현이라는 시점에서 개인 자산을 형성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5) 일본의 여성농업인 대책

농업경영체의 발전요인을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첫째, 농업경영에서 복수의 경영주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農村生活綜合研究センタ, 1999). 여성의 높은 의욕을 이끌어내고 남성과 함께 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겸업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노동과 경영의 중심에 있는 여성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개혁, 예를 들어 부부간에 재산이용권 설정의 촉진, 농업기술 연수의 기회 증대 등의 지원조치의 강화이다.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농작업 도우미 제도의 충실, 여성의 발언의 장 확보, 그리고 사회적 방침결정의 장에서 남녀 쌍방이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회적 환경의 정비, 구체적으로는 할당제도의 도입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농업 정책가들은 여성 농업인의 노동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행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농업 가구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여성 농업인의 노력을 반드시 농업 생산성의 정의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젊은 여성 농업인들 스스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은 여성농업인의 소득 기여분을 가시화하는, 즉 유급노동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는 여성을 위한 유동자산의 형성시도와 가족협정 체결을 중심으로 소개한 후 일본농협이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노동보수로서 유동자산의 형성

현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유동자산을 형성해 가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개인자산으로서 유동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주 세대 여성의 노동보수가 농가전체의 가계비에 돌려지거나 농업경영구좌에 환류하는 것도 현 상황에서는 많으므로, 노동보수를 세금대책이 아닌, 개인소득으로서 추구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저축금이나 연금을 여성이 노후의 개인 자산으로 자유로 사용할 수 있는 농가지도나 노후생활설계의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연수가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개인소득도 개인자산도 ‘그림의 떡’으로 되어버리는 건 말할 것도 없다.

과수작에 있어서는 농산물의 직매나 아침·저녁시장, 농산물 가공 등에 여성이 활약하고 거기에서 얻은 수익을 자신 명의의 예금구좌에 저축하고, 개인자산의 형성을 꾀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낙농경영도 이러한 방향성을 추구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더구나 이번 조사대상에서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농산물의 직매에 의한 고객관리와 소비자확대의 부문에서, 여성의 활약이 증가해 가고 있고, 이러한 부문에서 수익을 여성이 개인자산으로 형성해 가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農村生活綜合研究センター, 2000).

나) 가족경영협정의 체결

가족경영협정은 “보수와 휴일, 역할분담 등 경영·생활에 관해 가족 구성원이 의논하여 체결한 약속”이다. 이것은 ① 결정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② 농업위원회 등 제3자의 참석 하에 조인하는 것이다. 농가의 가족 구성원들은 영농 계획과 경영에 관한 계획(경영 규모, 자금, 농법, 시설화, 분담, 취업 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가족간의 협정서를 체결한다. 이 협정서는 경영주와 그 가족이 서로 책임 있는 경영 참여를 통해 근대적 농업 경영을 확립하고, 이와 동시에 건강하고 밝은 농가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농림수산성 부인생활과가 전국의 주무과를 통해 들은 결과, 1996년에 5,608건, 1997년에는 7,301건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협정서의 내용은 지역별, 개별 가구당 상이하지만, 나카사키 현의 한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협정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농가 경영주와 가구는 노동보수와 노동시간, 휴일, 경영 등에 대해 <표 I-2>와 같은 내용을 체결한다.

1999년 농촌생활종합연구센터의 조사에서는 가족경영협정을 약 10%의

농가가 문서로 체결을 끝냈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체결을 안 하고 있다’가 여성 54.5%, 남성 56.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그 이유로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의논하면 된다’가 많았고, 문서로 체결하는 것에 소극적인 자세가 보여진다. 또, 가족경영협정을 ‘모른다’라는 대답은 여성 13.9%, 남성 16%이었다. 이 보고서는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농가의 특징을 함께 조사하였다. 여성의 경영상 입장을 보면 ‘남편과 대등’은 47.5%이고, 덧붙여, 협정을 모르는 여성은 ‘남편을 따르는 입장’이 많다.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여성의 66.7%가 노동보수에 대해서는 ‘매월 정해진 액수의 보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모른다’라는 여성은 노동보수의 실현 정도도 33%로 낮게 나타났다(農村生活綜合研究センター, 1999).

<표 1-2> 일본 가정경영협정의 주요 내용

- 1) 노동보수는 다음과 같이 하고, 경영주가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가족 구성원 개별 통장에 입금한다.
 - 월 액수: 50,000엔
 - 지급일: 매월 25일
 - 특별수당: 사업 실적을 감안하여 연말에 지급한다(12월 20일)
- 2) 노동시간
 - 1일 노동시간은 평상시 8:00-17:00, 농번기는 7:00-18:00 이고, 휴식시간은 오전 10:00-10:15, 오후 3:00-3:15. 이러한 노동시간은 작업의 번한(繁忙)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3) 휴일
 - 원칙적으로 매주 일요일으로 하지만, 농번기 등에는 해당이 안 된다.
- 4) 경영위임
 - 위임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가족끼리 협의해서 한다.
- 5) 그 외
 - 이 협정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일년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 이 협정 이외의 필요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족끼리 의논해서 개정한다.
 - 이 협정서는 서명, 날인한 협정인 만큼 가족 구성원의 수만큼 작성하여 각자 보유한다.

자료: 農村生活綜合研究センター(2001.3), 家族經營協定の實效性と今後の推進に向けて,136쪽

협정 후의 변화에 대해 일본 농업인들은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되었다,

공동 경영자로서의 자각성이 크게 고취되었다, 의욕 향상 등을 장점으로 꼽았는데 특히 경영주의 아내로서만 인식되던 여성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협정에 속박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가족 관계가 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2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 후계자나 후계자의 배우자 발언권이 적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협정의 체제 정비가 검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 일본 농협(JA)의 여성 참여 확대 조치

일본의 농림 수산성은 1992년에 「농산어촌의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을 작성하고,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과 사회적 방침 결정과정의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1995년 2월에는 구조개선 국장과 농산원에 국장의 지침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업 생산과 생활 두 측면에서의 입장을 평가하는 가족 경영 협정의 체결 촉진이 피해졌다. 1996년 4월에는 농업인 연금 기본법의 개정에 의해,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일정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농업인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총리부가 1996년에 작성한 「남녀공동참여 2000년 설계」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農村生活綜合研究センタ, 1999).

1999년에 제정된 일본의 「남녀공동참여사회 기본법」(The Basic Law for Gender equal Society: 양성평등법) 제8조~10조에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국민의 책무로서 남녀공동참가사회 형성에 기여해야 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부속결의사항으로 “각 사업자가 기본이념에 따라 남녀공동참가사회를 형성하는 책무를 자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해야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협동조합도 남녀공동참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北川太一, 2000).

JA운영의 여성참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조직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여성조직활성화를 위한 조건은, ①일정정도(조직의 최저규모)의 구성원으로 조직하는 것, ②서로 다른 입장이나 속성을 가진 여성이 될 수

있는 한 조직에 많이 참여하는 것, ③ 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의 다각화를 하는 일, ④이상을 통해 여성의 JA운영의 참가, 또는 여성조직활동의 사업화를 실현하는 것 등이다.

1999년 JA全中(일본농협 전국중앙회)의 『JA운영의 여성참가추진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까지 여성참가에 대한 방침이 있어도 실천되지 않았다는 반성에 따라 구체적인 수법이나 수치목표의 설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수치"나 "성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최근 여성이사가 탄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광역합병을 계기로 이사정족수의 삭감을 이유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삭감하는 사례, 또는 지원체제의 불비로 인한 여성이사의 고립화,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는 형식적인 여성이사를 등용시키기 때문에 여성이사등용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사례도 보인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직장에서의 여성참가문제는 "향후 검토과제"로 두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의 JA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이 점유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의 위치는 매우 낮다. 더구나 여성 관리직의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경향은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연합조직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이 개선되고 개혁되지 않는 한 JA운동에 본격적인 여성참가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日本 農村生活綜合研究センター(1999)의 『최근 일본농협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는 지금까지의 여성참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으로써 ①구체적인 추진방법이 없었다, ②점검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효율성이 있는 추진방법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003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

- 정조합원 가입 : 정조합원의 여성비율을 25%이상으로 한다.
- 총회 대의원로의 취임 : 총대의 여성비율을 10%이상으로 한다.
- 이사로의 취임 : 합병 JA의 여성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경영관리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여성위원을 2인 이상으로 한다.

- 각종위원회의 참가 : 모든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2인 이상으로 한다.
- 참(參)의 취임 : 參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여성 參을 2인 이상으로 한다.

II. 국내·외 농가소득의 추이와 관련정책

본장에서는 국내·외 농가소득의 추이와 관련정책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농가소득의 장기변동추세를 본 후 농가소득의 구조와 분포를 분석한다. 이어 농가소득 관련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 본장의 하반부에서는 일본과 대만을 대상으로 외국의 농업·외 소득실태와 관련정책을 정리하였다.

1. 우리나라의 농가소득과 관련정책

가. 농가소득의 장기변동 추세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은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을 분기점으로 전혀 다른 변동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85-94까지 농가소득은 연평균 7.0%의 비교적 높은 실질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그 결과 도농간의 소득균형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다.⁸⁾ 특히 농외소득은 연평균 13.1%씩 증가하여 소득성장을 주도하였으며 그 결과 농가소득에서 접하는 농외소득의 비율은 18.5%에서 30.4%로 늘어났다.⁹⁾ 이 시기에는 농업소득도 연평균 4.2%의 비교적 안정된 성장을 하여 소득증대를 뒷받침하였다(오내원·김은순,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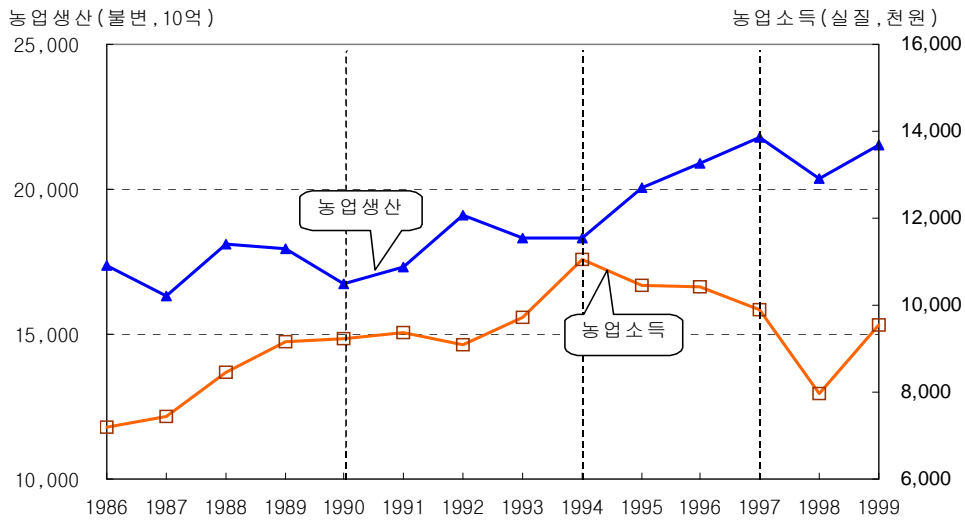
그러나 1995년부터 농가소득은 정체상태를 보여 2000년의 실질소득은 1994년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도시가구소득은 외환위기에 이은 경기불황으로 일시 하락하였지만 1999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도농

8) 도시가구와 농가의 소득은 표본의 선정이나 계측방법에 차이가 있어 평면적인 비교는 문제가 있으나 상대소득의 추세를 보는 데에는 유용하다.

9) 여기에서 농외소득은 이전소득을 제외한 협의의 농외소득이다. 농외소득의 비율은 1997년에는 36.9%까지 올라간 후 감소하였다.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에 대비한 상대비는 2000년 80.5%로 95년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이어간다. 이와 같은 수치는 농가소득의 정체가 외환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며 농업과 농가경제 내부에 이미 소득문제를 일으킨 구조적 요인이 있지 않으나 검토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그림 II-1> 농업생산과 농업소득의 변동 추세(1995년 불변가격 기준)



UR 협상이 타결된 1994년 이후 실질농업소득이 감소로 반전한 것은 농산물가격이 정체된 반면 투입재가격이 상승하고 고정자본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II-1>에서와 같이 1994-2000년간 농산물 실질가격(농가판매가격 기준)은 2.6% 상승이 그친 반면¹⁰⁾ 환율 상승 등으로 사료값과 광열동력비가 올라 농업투입재 실질가격은 9.9% 인상되었으며 농촌임료금도 24.9%나 올랐다. 막대한 농업투자에 의한 농업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상대가격의 하락 때문에 농업소득이 늘어나지 못한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04년까지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1.1%씩 하락하고, 차기

10) IMF 외환위기를 전후한 1997-1999년에는 상당한 정도 실질가격이 하락하였다.

협상 이후인 2004-2011년에는 1.8%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소득의 정체 내지 하락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¹¹⁾ 이와 같이 농업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추이는 <그림 II-1>이 극명하게 보여준다.

<표 II-1> 농가소득의 변동추세

단위: 천원(1995 불변가격)

	1985	1990	1994	2000	연평균 증감(%)	
					1985-1994	1994-2000
농가소득(A)	11,827	16,238	21,775	21,245	7.0	△0.4
농업소득	7,627	9,225	11,067	10,034	4.2	△1.6
농외소득	2,186	4,184	6,628	6,843	13.1	0.5
이전소득	2,024	2,829	4,080	4,368	8.1	1.1
농외소득비율(%)	18.5	25.8	30.4	31.5	-	-
도시가구소득(B)	10,485	16,672	21,882	26,375	8.5	3.2
상대소득(A/B, %)	112.8	97.4	99.5	80.5	-	-

자료: 오내원·김은순(2001)

<표 II-6> 농산물 가격과 투입재 가격 지수 추이

(1995=100)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994-2000 연평균변화율(%)
가격 지수	농산물	91.7	100.0	105.2	102.2	101.9	108.5	109.6	3.0
	중간투입재	93.9	100.0	101.4	100.0	118.7	122.6	127.5	5.2
실질 지수	농산물	98.3	100.0	101.3	95.3	90.5	97.9	100.9	0.4
	중간투입재	100.6	100.0	97.6	93.3	105.4	110.6	117.4	2.6
GDP 디플레이터		93.3	100.0	103.9	107.2	112.6	110.3	108.6	2.6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월보에서 계산, 오내원·김은순(200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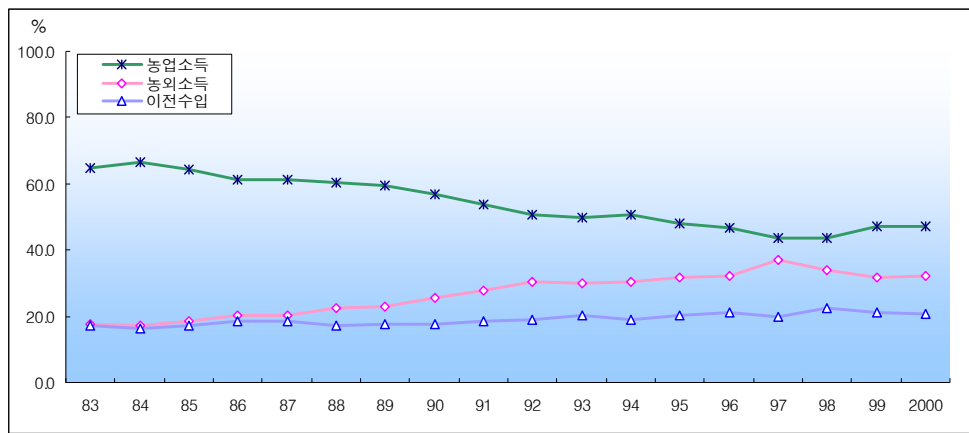
11) 구조정책의 적극 추진과 농업자본 투자로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이 1994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낸 현상을 이정환은 ‘성장과 소득의 괴리’로 명명하고 농산물시장 개방과정에서 각국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7쪽)

나. 농가소득의 구조

1) 농업소득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던 1985-94년간에도 호당 실질 농업소득 증가율은 4.2%로 GNP성장률(9.1%)이나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성장률(8.5%)에 크게 못미쳤다. 특히 과수, 시설채소, 축산 등 성장작목의 수요 포화로 생산확대가 둔화되고 수입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실질농업소득은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오내원·김은순, 2001).

<그림 11-2> 농가소득 구조 변화



자료: 통계청, 「2000년 농가경제통계」

농가소득의 농업의존도(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는 80년대 이후 농외소득 증가에 따라 계속 낮아져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농외소득 부진으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2000년도 농가소득의 농업의존도는 전년과 유사한 47.2%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의존도(47.2%)는 일본(13.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표 II-3> 한국과 일본의 농가소득 구성비 추이

단위: %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한국	농가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업소득	56.8	48.0	43.5	43.7	47.3	47.2
	-농외소득	25.8	31.8	36.9	34.0	31.5	32.2
	-이전수입	17.4	20.2	19.6	22.3	21.2	20.6
일본	-농업소득	13.8	16.2	13.7	14.4	13.5	13.0

자료: 통계청, 「2000년 농가경제통계」

2) 농외소득

농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으로 구성된다. 겸업소득은 농가가 잡화점, 정미소, 음식점, 미용실 등과 같은 농외 사업을 직접 경영하여 취득한 소득이다. 사업외소득은 농가 가구원이 타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취업하여 벌어들인 임금소득과 재산소득을 포함한다.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는 겸업활동이 중요하였지만,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겸업소득은 줄어들고 사업외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띤다.

우리나라의 농외소득 구성을 보면 사업외소득, 그중에서도 급료(농외소득중 비중은 1999년 43.3%, 이하 같음), 기타노임(23.2%) 등 임금소득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겸업소득(21.1%)과 재산소득(10.9%)은 상대적으로 작다. 겸업소득 중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겸업소득 중 49.0%) 다음이 상공광업(28.1%), 수산업(14.5%)의 순서이다. 1997년까지의 농외소득 증가는 건설업 등 도시 일용부문의 호황에 따른 기타노임의 증가가 주도하였다. 1990-1997년간 기타노임은 명목으로 517%가 증가하여 여타 농외소득의 증가율(158%)을 훨씬 앞질렀다. 반면 최근의 농외소득 감소는 경기후퇴에 따른 기타 노임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4> 농외소득의 추이

단위: 천원, %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증 감	
							금액	%
농 외 소 득	2,841	6,931	8,677	6,976	7,034	7,432	398	5.7
○겸업소득	589 (20.7)	1,527 (22.0)	1,823 (21.0)	1,213 (17.4)	1,484 (21.1)	1,435 (19.3)	-49	-3.3
○사업이외 소득	2,252 (79.3)	5,404 (78.0)	6,854 (79.0)	5,763 (82.6)	5,550 (78.9)	5,997 (80.7)	447	8.1

주 1) 농외소득 = 겸업소득 + 사업이외소득

2) ()는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2000년 농가경제통계」

2000년도 농가의 농외소득은 7,432천원으로 전년(7,034천원)에 비해 5.7%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이외의 다른 사업운영에 따른 겸업소득은 49천원(-3.3%)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등 타산업 부문의 경기회복 영향으로 임금 등의 사업이외소득이 447천원(8.1%)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농외소득은 1997년까지 매년 크게 증가해 왔으나, 1998년 외환위기 영향으로 감소한 이후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외소득중 타사업고용 또는 일용노동에 따른 취업소득 비중이 높고 겸업소득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표 II-5>는 '99년 농외소득(협의)중 취업소득비중은 70.1%로서 대만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농외소득중 취업소득비중이 일본 83.6%, 대만 64.3%으로 나타난다.

<표 II-5> 한국과 일본의 농외소득 종류별 구성('99)

	구 분	겸업소득	취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수입	합계
한국	비 율 ¹ (%)	12.6	42.0	5.3	40.2	100.0
	비 율 ² (%)	21.1	70.1	8.8		100.0
일본	비 율 ¹ (%)	7.7	60.6	4.2	27.5	100.0
	비 율 ² (%)	10.6	83.6	5.8		100.0

주: 비율1은 농외소득에 이전수입 포함, 비율2는 이전수입 제외.

자료: 농림부 내부자료

농외소득의 증가는 농가의 겸업화를 의미한다. 오내원·김은순(200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겸업농 비중은 1980년대 전반까지는 20%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6년에는 43.5%까지 늘어났다. 특히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많은 2종겸업농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1997년 이후 농외소득의 감소와 함께 겸업농의 비율도 감소추세로 반전되어 2000년에는 32.9%까지 떨어졌다.

<표 II-6> 전·겸업별 농가 구성

단위: %(천호)

	총농가	전업농	겸업농		
			소계	1종겸업	2종겸업
1980	100.0(2,155)	76.2	23.8	13.7	10.1
1985	100.0(1,926)	78.8	21.2	8.7	12.5
1990	100.0(1,767)	59.6	40.4	22.0	18.4
1995	100.0(1,501)	56.6	43.4	18.5	25.0
2000	100.0(1,384)	67.1	32.9	14.6	18.4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년도.

전업농과 겸업농의 소득구조가 상이한 것은 개념상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의 농가소득 추세를 보면 특징적인 현상이 발견된다. 전업농의 소득이

겸업농에 비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절대액수도 감소하고 있어 겸업농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00년의 전업농 농가소득은 1종 겸업농의 66%에 지나지 않으며 농업소득조차 1종겸업농의 69% 수준에 불과해 상식적인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전업농의 농가소득이 겸업농보다 낮은 것은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농업소득조차 겸업농보다 낮은 것은 무엇때문인가?

겸업농에 대비한 전업농의 상대소득이 감소한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계속된 현상이지만 최근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2000년의 전업농 평균 농업소득은 1995년에 비해 18.4% 감소하여(실질로는 24.8% 감소) 소득 감소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1, 2종 겸업농은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도 소폭이지만 상승하여 전업농과 대비되고 있다.

<표 II-7> 전·겸업별 농가소득 비교

단위: 천원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1982	전업농(A)	4,536	3,540	57
	1종겸업(B)	5,245	3,426	881
	2종겸업	4,844	1,045	2,960
	A/B	0.86	1.03	0.06
1995	전업농(C)	20,292	14,436	1,658
	1종겸업(D)	25,385	15,957	5,363
	2종겸업	23,251	4,194	15,048
	C/D	0.80	0.89	0.31
2000	전업농(E)	18,658	11,548	2,253
	1종겸업(F)	28,256	16,689	6,998
	2종겸업	27,029	4,933	17,537
	E/F(%)	0.66	0.69	0.32

자료: 오내원·김은순(2001)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전겸업농 개념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통계상의 전업농은 ‘가구원중 비농업활동에 연간 30일 이상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농가'로 정의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에 전문화된 규모화된 농가뿐만 아니라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가구까지 포함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전업농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전업농 중에 이러한 노령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1종 겸업농은 단순히 '농업과 비농업을 겸하고 있는 농가'라기 보다는 농업을 주로 하면서 농한기 등을 활용하여 가족원 중의 일부가 비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적 젊은 농가로서 농업경영 면에서는 사실상 전업농과 다름없는 농가집단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으로 농외소득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농가의 노동력 취약화를 감안할 때 공장이나 회사에의 상시 농외취업은 한계가 있고, 그보다는 부업적 민박, 농산물가공업 등의 계절적 겸업이나 취업이 농업경영과 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이 농촌공업화의 필요성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을 통하여 지역 인구를 유지시키는데에는 공업화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지, 농가의 농외소득이란 측면에서는 농업과 연계된, 또는 병행할 수 있는 소득원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이다(오내원·김은순, 2001).

농외소득비중('99년)은 1ha미만 농가 76%, 0.5ha 미만 농가 84%이며 경영규모가 클수록 낮아진다. 즉 1.0ha미만 농가의 농외소득은 전체 평균(1,176만원)보다 높은 1,365만원이며, 5ha 이상 농가는 1,124만원이다. 2.0ha 미만(전체농가의 90%) 농가는 농업소득으로 가계비('99년 1,712만원)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농규모가 작을수록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아 농외소득 확대가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외소득 한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농가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취업가능인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내부적 요인에 유의해야 한다. 농가의 총 인구가 감소하는 중에 활발한 농외취업이 가능한 20-49세 사이의 인구는 1994년의 호당 0.99명에서 1999년에는 0.84명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농외취업자는 1995년의 호당 0.37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0.22명으로 40.5% 감소하였다. 물론 농외취업자의 감소는 최근의 경기

불황과 관련이 있지만, 농촌지역의 노령화된 인력구조를 감안할 때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농외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8> 경지규모별 농외소득비중(%)

구 분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99금액 (만원)	年증가율(%)	
								'96/'90	'99/'96
농가 전체	43.2	52.0	53.5	56.6	56.3	52.6	1,176	17.4	△1.9
1.0 ha미만	64.3	68.5	72.4	73.7	76.8	76.4	1,365	17.4	△3.2
1.0-2.0 ha	34.8	42.3	46.4	48.6	50.3	47.1	1,100	18.3	△0.2
2.0-3.0 ha	26.8	31.0	36.5	37.8	37.9	34.0	1,005	17.3	△1.4
3.0-5.0 ha			33.7	28.0	29.7	28.7	1,026		△2.5
5.0 ha 이상			23.3	23.5	31.7	19.9	1,124		10.7

<표 II-9> 경지규모별 농업소득의 가계비총족률(%)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3.0ha
농업소득(만원)	285	606	1,136	1,452	1,950
가계비총족률(%)	16.6	35.4	66.4	84.8	113.9
농가수(천호,%)	508 (36.8)	388 (28.1)	217 (15.7)	116 (8.4)	90 (6.5)

자료: 농림부 내부자료

최근 농외소득 증대방안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앞으로 수입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소득의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¹²⁾ 그러나 농외소득의 증대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가 가구원의 노령화로 비농업부문에 취업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고, 주로 중소기업인 농촌지역 소재 2·3차 산업체들의 낮은 경쟁력과 고용구조조정으로 중고령층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동안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되어 온 농공단지 개발, 특산단지 및 관광농원 육

12) 2000-2011년의 농업소득 연평균 성장률은 0.9%로 전망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성, 농산물가공사업 지원 등의 정책사업도 불리한 경제여건 속에서 누적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서구의 추이를 감안할 때,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추세이고, 농외소득 제고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기대된다.

3) 이전수입

이전수입은 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외환위기 영향으로 감소한 이후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도 농가의 이전수입은 4,743천원으로 전년(4,723천원)에 비해 소폭(0.4%) 증가하였다. 이는 도시거주 출타가족 보조금(-80천원)의 감소와 퇴직자 감소로 퇴직일시금(-64천원)은 줄어든데 비해 타인보조금(164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10> 이전수입

단위: 천원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증 감	
							금 액	%
이전수입	1,921	4,403	4,607	4,563	4,723	4,743	20	0.4
○가족보조	484	706	592	457	470	390	-80	-17.0
○타인보조	1,406	3,469	3,881	3,688	4,011	4,175	164	4.1
- 축조의금	-	-	1,564	1,323	1,366	1,372	6	0.4
○퇴직일시금	31	228	134	418	242	178	-64	-26.4

주: 가족보조는 출타가족의 보조금이며, 타인보조는 친인척 및 공적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2000년 농가경제통계」.

다. 농가소득의 분포

영농형태별로 볼 때, 농가소득은 특작농가의 소득이 32,572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전작농가의 소득은 18,920천원으로 가장 낮다.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논벼농가의 소득은 19,598천원으로서 전국 평균 소득에 비해 낮은 상태이다.

<표 II-11> 영농형태별 비교

단위: %, 천원

	전국	논벼	과수	채소	특작	축산	전작	화훼
구성비 ¹	100.0	57.2	10.9	18.3	2.8	5.4	4.5	0.7
농가소득	23,072	19,598	28,609	19,950	32,572	29,816	18,920	19,588

주 1) 1999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영농형태별 농가의 구성비임. 농가소득은 통계청의 「2000년 농가경제통계」 자료임.

농가소득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가 많았고 그 가운데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농가(제1종 겸업)의 소득이 28,256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업농가의 소득은 「제1종 겸업농가」의 66.0% 수준이다. 또한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5.0ha이상」 농가의 소득은 「0.5ha미만」 농가의 2.5배 수준이다.

<표 II-12> 전업농가/겸업농가 비교

단위: 천원, %

	전국 (A)	전업농가 (B)	겸업농가		전국평균 대비		
			제1종(C)	제2종(D)	B/A	C/A	D/A
구성비 ¹	100.0	63.6	12.5	23.9	-	-	-
농가소득	23,072	18,658	28,256	27,029	80.9	122.5	117.2

주 1) 1999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전·겸업별 농가의 구성비임. 농가소득은 통계청의 「2000년 농가경제통계」 자료임.

<표 II-13> 경지규모별 비교

단위: 천원, %

	전 국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3.0ha	3.0~5.0ha	5.0ha 이상
구성비 ¹⁾	100.0	36.7	28.1	15.7	8.4	6.6	3.3	1.2
농가소득	23,072	17,566	19,121	22,703	26,607	29,451	36,022	44,713

주 1) 1999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경지규모별 농가의 구성비임

라. 농가소득 관련 정책

우리나라는 ‘80년대 말 이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농정이 강조되면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 유통기반 확충과 전업농, 후계자 육성이 적극 추진된 반면, 농가소득 자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농업소득의 가계비중족률이 저하하면서 안정적 농가소득 확보의 차원에서 정부는 농외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공단지, 특산단지, 농어촌 휴양지, 임가공, 농산물 가공에 대한 재정과 금융 등 정책지원을 해왔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외소득 정책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¹³⁾ 농외소득 정책은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심시책과 추진방법, 사업규모가 변천을 겪는데 크게 보아 <표 II-14>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농외소득정책의 시초는 1960년대 후반 시작된 부업단지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농촌의 광범위한 잠재실업과 그로 인한 절대빈곤에 대응하여 농가의 유희노동력과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득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조성된 부업단지에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농산자재나 생활필수품을 제작하는 가내공업 형태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13) 이 부분은 오내원·김은순(2001)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소규모 유희지를 활용한 과수와 약초 재배, 양봉이나 토끼 등 중소가축의 사육과 같은 농축산부문도 포함되어 있었다.¹⁴⁾

1972년부터는 농공병진의 이념에 따라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새마을 공장건설사업이 추진되었다. 1983년까지 총 1,357개의 공장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는데, 지역에서 원료를 조달하거나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새마을공장은 농촌의 고용증대와 수출진흥, 농외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분산입지로 인해 중소기업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침체함에 따라 농공지구 개발사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농외소득정책의 틀이 마련된 것은 1983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이다. 이 법은 1970년대 말부터 제기된 개방농정론과 농업소득한계론에 대한 대응으로 농촌공업화와 관광소득원 개발을 통하여 농가 소득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핵심정책으로서 ‘농공지구’와 ‘관광농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 부업단지 및 농산물가공공장, 농어촌휴양지 등 농외소득원 사업체를 지정하고 농어촌직업훈련을 강화하는 시책을 포함하였다. 이들 사업은 그 후 시행규모와 방식에서 약간의 변화를 거쳤지만 1990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수용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농정의 중심에 서면서 농외소득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쇠퇴하게 된다. 그동안 농림부의 농외소득 관련업무를 총괄해 온 ‘농촌소득과’가 폐지되고(1994년) 관련 업무가 농촌정비과와 식품산업과로 분산되었다. 농외소득 개발 예산의 비중도 1990년 6.3% 수준에서 계속 축소되어 1992-1998에는 평균 1.1%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업별로 보더라도, 농공단지는 1987-1991년중 연간 30-40%까지 조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연 1-2개로 축소되

14) 따라서, 부업단지 사업은 엄격한 의미에서 농외소득에 한정된 정책은 아니었다. 1978년에 농축산단지가 농어촌소득증대특별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부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1990년에는 농어촌특산단지로 명칭과 사업방식이 조정되었다.

었으며 특산단지와 관광농원의 경우 기존 지정업체의 상당수가 부실화되는 한편 새로운 사업체 육성도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제4기에 등장한 주요사업으로 전통식품 산지가공이 있는데, 농촌여성 일감갓기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농외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99년 18개소에 432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90년부터 총 85개소의 농촌여성일감갓기 사업지역을 육성하였다. 생산제품 홍보를 위해 농진청 홈페이지에 DB 마련과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감갓기 사업 담당 실무자 기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00년에는 일감갓기 사업장 20개소 (600백만원, 개소당 30백만원)를 육성하고 인터넷을 통한 생산제품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314대의 컴퓨터 지원 및 70개소의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할 예정이다.

<표 II-14> 농외소득정책의 변천

	제1기(1967-1972)	제2기(1972-1983)	제3기(1983-1990)	제4기(1990-현재)
주요 사업	· 부업단지	· 새마을공장 · 부업단지	· 농공지구 · 관광공원 · 부업단지	· 농공단지 · 관광농원, 민박 · 특산단지 · 전통식품, 산지가공
정책 배경과 특성	· 유희노동력과 부산물을 활용하여 빈곤문제 해소 · 가내공업 중심	· 개별분산입지 방식의 공업화 추진 · 가내공업형 부업단지와 중소기업형 새마을공장으로 이원화	· 집단입지의 공업화 · 관광농원등 농외소득원의 다양화 ·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정	· 농업구조정책으로 농외소득에 대한 관심 저하 · 새로운 농외소득정책 필요성 제기되었으나 실행부족

주: 오내원·김은순(2001)을 재구성.

2. 외국의 농가소득 및 관련 정책

최근 세계각국의 농정에서 최대 이슈는 농가소득의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가소득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의 소득문제는 그 성격이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종래의 소득 문제는 고도성장과정에서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성 향상 등으로 소득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패턴이었다. 즉, 고도성장기의 농정은 공업부문의 고도성장에 의해 확대되는 도농간 소득격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모확대 등 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외소득원의 개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농외소득원의 개발은 농촌공업화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와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소득문제는 WTO 체제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가격변동이 확대되어 소득의 감소와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소득의 변동과 감소에 대응하여 각국은 일종의 소득안전망제도(safety-net)로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즉, WTO 체제에서는 가격지지를 비롯한 시장개입이 축소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 내지 소득은 일단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소득안전망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은 도농간 격차가 확대되는 동시에 소득이 감소한 다든가, 변동폭이 확대되는 등 앞에서 언급한 2가지 양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에 대하여 농외소득의 실태와 정책전개의 특징을 살펴보고, 또 최근 농가단위 또는 지역단위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소득증대 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통하여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과 대만은 한국에 비해서 비교적 농외소득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농외소득률이 높다는 것은 최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농산물가격의 하락 내지 변동에 대응하여 완충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¹⁵⁾

15) 이하 내용은 김태곤·정정길(2001)을 요약·정리한 것임.

가. 일본의 농가소득 및 관련 정책

1) 농가소득의 구성 및 추이

일본의 농가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1999년도 판매농가¹⁶⁾ 호당 농업조수익은 전년보다 12만 3천엔(3.3%) 감소한 358만 2천엔 이었다. 내역을 보면 공예작물수입이 5.7% 증가한 반면에 채소수입이 7.5%, 수도작 수입과 과수수입이 각각 3.5% 감소하였다. 농업경영비는 전년을 1만 7천엔(0.7%) 하회하는 244만 1천엔 이었다. 내역은 임차료 및 요금이 4.1% 증가, 농약비가 2.9% 증가한 한편, 사료비가 8.7%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조수입의 저하가 농업경영비 감소를 상회하였기 때문에 농업소득은 전년에 비해 10만 5천엔(8.4%) 감소한 114만 1천엔이 되었다. 또, 농외소득도 전년보다 18만엔(3.4%) 감소하였기 때문에 농업총소득은 2.5% 감소한 845만 9천엔이 되었다. 그리고 2000년은 공예작물, 채소 등의 수입이 감소하여 전체 농업조수입이 2.6%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0.9% 감소에 그쳐 농업소득은 전년에 비해 6.4%나 하회하고 있다.

농업총소득의 6할 정도를 차지하는 농외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면, 불경기가 1991년 이후 1993년부터 95년까지 감소, 96년과 97년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98년은 다시 감소로 전환, 2000년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단지 감소율은 둔화되고 있다.

16) 판매농가는 경영경지 면적이 30a 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50만엔 이상인 농가, 자급적 농가는 경영경지면적이 30a 미만인면서 농산물 판매액이 50만엔 미만인 농가를 말한다.

<표 II-15> 일본의 농외소득률 추이

단위: 천엔, %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외소득률
1980	4,515	952	3,563	78.9
1985	5,503	1,066	4,437	80.6
1990	6,602	1,163	5,439	82.4
1995	6,895	1,442	5,453	79.1
1996	6,850	1,388	5,462	79.7
1997	6,675	1,203	5,472	82.0
1998	6,557	1,246	5,311	81.0
1999	6,271	1,141	5,130	81.8

주: 농외소득에는 이전수입을 제외하였음.

자료: 김태곤·정정길(2001)에서 재인용.

2) 농가소득의 확보 시도

소득확보 대책으로서 최근의 동향은 농업소득이나, 농외소득이나라는 양자택일적인 접근방법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전체의 고용창출과 소득확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배경에는 농촌공업 도입이 초래한 문제점이 있다.

일본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농산물 생산활동만이 아니라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농가 민박, 도시농촌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다. 지역활성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농업을 6차산업화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농업의 6차 산업화라는 것은 농업이라는 1차 산업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 등의 2차 산업과 농산물 직판장이나 음식점, 숙박시설의 경영 등 3차 산업을 농촌이라는 특정지역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의 농업은 농업생산, 식품원료 생산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2차 산업적인 분야인 농산물 가공이나 식품 가공은 식품제조 기업의 영역으로,

또 3차 산업적인 분야인 농산물 유통, 농업관련 정보 및 서비스, 관광 등도 대부분은 도소매업, 정보산업, 서비스산업 및 관광업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결과 농업에서 파생하는 부가가치와 고용이 농업부문에서 떨어져 나간 결과, 농업은 점차 축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에서 농업의 6차 산업화란 농업이 가지는 산업적인 특징을 1차 산업×2차 산업×3차 산업=6차 산업이라는 도식에서 성립한 것이다. 농촌이 주체가 되어 농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을 회복하여 농업의 종합산업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을 단위로 농업생산자가 적극적으로 2차 산업, 3차 산업의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 고용기회 확대로 파급되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즉, 생산활동 뿐 아니라, 가공, 판매, 교류 등의 분야까지 일관되게 농촌이 담당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동시에, 전업농은 물론 고령자와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례에서 볼 때, 농업을 6차 산업화하는 경우에 중시해야 할 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6차 산업으로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으로서 크게 다음 세가지 유형이 있다. 즉, ① 특산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1차 산업인 농업의 진흥을 중심으로 하여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발전해 가는 유형, ② 농산물 가공 등 2차 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그 원료의 공급기반인 1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농산물 가공품의 판매 등 3차 산업도 전개하는 유형, ③ 도시농촌 교류, 농촌 관광 등 3차 산업을 진흥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1차 산업, 2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유형 등이다.

둘째, 추진주체에 의한 유형화이다.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데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추진주체로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그룹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① 전업농가·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 그룹, ② 농촌여성 그룹, ③ 고령자 그룹, ④ 부락 등의 지연 그룹, ⑤ 지자체·농협 등 기존 조직, 그리고 ⑥ 농업공사 등 제3섹터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두가지 관점에서 유형화하는 경우, 전부 $3 \times 6 = 18$ 가지의 유형이 제시될 수 있다. 현재까지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지리적 특징 등을 감안하

여 확산되고 있는 6차 산업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생산자 주도에 의한 농업진흥을 출발점으로 한 유형, 여성·고령자에 의한 농업진흥을 기점으로 한 유형, 지자체·농협 주도의 농업진흥을 기점으로 한 유형, 도농교류를 바탕으로 한 유형, 제3섹터에 의한 유형 등 다섯가지가 있다.

생산자 주도에 의한 6차 산업화는 전업농이나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가 농업진흥을 중심으로 하면서, 판매전략으로 소비자와의 교류, 도시 농촌 교류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달성하는 것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사례이다.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생산자 주도에 의한 시설원예, 화훼, 특산품, 농산가공, 유기농업 등 고부가가치 농업을 추진하고, 다음에 농업경영체가 육성·발전하여 산지가 형성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교류·현지견학, 직거래, 도농교류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高知縣 東津野村의 사례를 보면, 이 지역에서는 쌀, 채소, 축산을 연계,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도시주민과 직거래를 축으로 한 산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농약 쌀 또는 유기 채소의 직거래, 닭의 뽕나무밭 방목, 비육우 방목 등을 시도하고 있다. 또 목재가공, 주택건설을 하는 제3섹터 설립 등을 통하여 지역 전체가 성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여 지역 전체가 활성화하는 점이 특징이며, 유기농업용 퇴비 공급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판매면에서는 생협 등 조직화된 도시주민·소비자와 연계하고 있으며, 도농 교류는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인 **여성·고령자에 의한 6차 산업화**를 보면, 이 유형은 첫 번째와 비슷하나, 농촌 여성·고령자 등 반드시 농업만으로 생계를 꾸려갈 필요성이 적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착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계기로 하여, 여성·고령자들이 농업에 대한 열의가 살아나고 활동이 활발해져 그것이 농산물 가공으로 발전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음식 제공, 농가 민박으로 발전하는 것이 전형적인 발전 패턴이다. 아오모리현 나가와정(靑森縣 名川町)의 사례를 보면, 지역 여성들이 농산물 직판장을 이용한 농산물, 농산가공품을 특산화하고 있다. 여성과 고령자가 농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촉진하고 있

다. 다수의 여성들이 참가함으로써 성공하는 사례가 많고, 쌀만이 아니라 채소, 과수 등 원예작물에 의해 실현하는 점이 특징이다. 오이타현 구니사키정의 사례, 기후현 메이호촌의 사례도 유명하다. 메이호촌에서는 여성 27명이 회사를 설립, 케첩을 제조하고 야채를 가공하여 관내 스키장과 온천내의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등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성공하고 있다.

지자체·농협의 의한 6차 산업화의 발전과정은 첫 번째, 두 번째와 큰 차이가 없다. 단지 농촌주민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닐, 지자체 또는 농협 등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기후현 시라카와촌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쌀의 생산조정 작물로서 메밀을 장려하고, 지자체 직영의 메밀가공 시설을 설치, 메밀가공품을 제조하고 있다. 또 메밀꽃으로 경관형성을 도모하고, 메밀가공품 만들기 체험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한편, 특별촌민제도를 도입, 농산물 택배를 실시하고 있다. 茶工場을 각 부락별로 설치하여 차생산을 장려하고 있고, 햄을 특산물화하는 것도 성공사례로서 평가되고 있으며, 임업진흥에 주력하여 삼나무의 목재, 주택건설산업을 진흥하는 등 6차 산업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경우는 정부 보조사업을 활용하여 농산물 가공시설이나 교류시설을 활용하는 경구가 많고, 1차·2차·3차 산업이 동시에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제3섹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자금 투하규모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또 농협이 주도하는 경우는 고부가가치 농업이나 산지형성에 주력하는 경향이 강하다.

도농교류를 중심으로 한 6차 산업화의 경우, 추진주체가 행정기관이나 농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활용되는 지역자원은 농촌지역의 자연환경, 역사·전통문화 등이 있다. 이 유형은 행정기관·농협이 주도하기 때문에 정부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교류시설 등을 거점으로 교류를 전개하고 있는 곳이 많다. 최종적으로는 특산물 개발, 현지 판매에 의한 직접적인 농업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유형은 3차 산업에서 출발하여 1차 산업·2차 산업으로 향하는 것이 많으며, 활용하는 지역자원에 따라서 강도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생산과 관련하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추진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관광농원, 농산물 직판장, 농가 민박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는 농업생산자·농촌주민과 소비자·도시주민 간에 개인적인 인간 관계가 쉽게 형성되어, 그만큼 농업진흥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구마모토현 우부야마촌(能本縣 産山村)은 체재형 도농교류를 추진하는 경우로서, 교류시설, 숙박시설, 농산물 가공시설, 캠핑장 등을 정비하여 지역 전체를 테마파크로서 정비하고 있다. 교류인구를 증가시켜, 이를 대상으로 한 산업의 진흥을 기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며, 행정기관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3) 시사점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소득확보를 위해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에만 승부를 걸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을 전제로 하면서 어떻게 지역 전체의 판매액을 늘릴 것인가 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이 ‘농업의 6차 산업화’이며, 대표적인 사례를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에서 소득확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농가단위’ 보다는 ‘지역단위’로 소득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② 지역별로 개성을 살려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자원이 소득확보에 활용되고 있다. ③ 전반적으로 시설은 국가보조 등에 의해 지자체, 농협의 설치하고, 운영은 생산자 그룹 또는 제3섹터가 주로 하고 있다. ④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농산물 가공, 지역 특산품 판매, 농촌관광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⑤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도로변에 농산물 직판장과 음식점이 결합된 시설, 또는 여기에 농업정보, 지역관광정보, 농업 체험 등의 사업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6차 산업화의 발전과정을 보면, ① 농업이 가지는 1차 산업적인 성격에서 출발하여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경우, ② 2차 또는 3차 산업에서 출발하여 1차 산업을 진흥하여 결과적으로 지역 전체를 활성화하는 패턴이 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는 일본

과 유사한 소득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사례를 더욱 철저히 분석하여 확산시킬 가능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나. 대만의 농가소득 및 관련정책

1) 농가소득의 구성 및 추이

대만의 농가소득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만의 농가 호당 평균소득은 1966년에 32,320NT\$(US\$808)에서 1998년에는 881,853NT\$(US\$24,516)로 단순히 금액면에서 보면 27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 중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21,000NT\$에서 148,997NT\$로 7배 증가하였지만, 농외소득은 10,000NT\$에서 571,086NT\$로 57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농가총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69.1%에서 35.2%로 감소한 반면 농외소득 비중은 30.9%에서 64.8%로 대폭 증가하였다. 1998년의 농외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임금소득(노임 및 급여)이 64.3%, 재산소득이 12배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겸업소득이 10배, 그리고 임금소득이 8배 증가하였다.

<표 II-16> 대만 농가소득의 구성 및 추이

단위: NT\$, %

구분 연도	농가 총소득	농업 소득	농외소득				농외 소득률
			계	임금소득	재산소득	겸업소득	
1980	219,412	54,436	154,728	111,146	22,814	20,768	75.2
1985	310,582	76,888	213,114	153,309	30,532	29,274	75.2
1990	503,830	101,265	357,978	253,870	49,008	55,101	79.9
1995	871,082	172,083	533,505	358,515	101,218	73,773	80.2
1996	885,469	176,837	545,365	359,273	109,688	76,404	80.0
1997	907,221	154,919	587,485	384,091	121,126	82,269	82.9
1998	881,853	148,997	571,086	367,056	119,998	84,032	83.1

주: 농외소득에서 이전소득(송금 및 피증)을 제외하였음.

자료: 김태곤·정정길(2001)에서 재인용.

2) 농외소득 확보 정책과 시사점

대만에서의 농외소득 확보방안은 휴한농업발전계획으로 알려진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 및 농촌공업화를 통한 농외취업 증가 등이 있다. 이중 휴한농업발전계획과 지방공업지구 육성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휴한농업발전계획

대만의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국제화 등 시장개방 추세에 따른 농업경영 형태 개선의 수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국민관광 수요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990년부터 휴한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휴한농업 계획 및 건설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총 31개 휴한농업거점을 계획하였으며, 이미 계획 수립이 완성된 휴한농업거점에 대해서는 공공건설 보조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휴한농업을 체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WTO에 가입하면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가소득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전통적인 ‘생산형 농업’에서 ‘서비스형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의 풍부한 생산, 생태 및 생활 자원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농업관광을 제공하고, 나아가 농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민을 안내하는 휴한농업 발전 지도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여 왔다.

대만은 국민소득이 이미 13,000달러 수준을 넘어섰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관광기회와 의욕이 크게 증가하여 물질생활의 여유를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정신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더욱 풍부한 시간과 경제능력을 구비함에 따라 여가 활동은 이미 대만 국민의 생활 중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으며, 그 중 옥외 오락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휴한 농업의 발전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휴한농업 육성책을 실시하는 것은 각종 자원을 결합하여 농촌을 건설함으로써 휴한농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경영과 농업경영 이념에 부합하는 휴한농장을 설립하며, 농촌주민이 휴한농업 경영능력을 갖추도록 배양하여, 그 서비스 수준 및 경영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활동의 흥미와 취미를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만은 그동안 휴한농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휴한농업 설치관리법, 휴한농업 지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중앙정부의 휴한농업지구(휴한농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즉, 정부는 관련법령에 의거 매년 일정수의 휴한농업지구 또는 휴한농장을 선정하여 중점 지도를 하는데 선정된 휴한농업지구에 대해서는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 건설을 지원하며, 개별 휴한농장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정된 휴한농장주에 대해서는 휴한농장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일정 기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도 하며, 부녀자에게는 식당 및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효과 또한 매우 크다. 농업위원회 홈페이지, 대중매체, 각종 관측활동 등을 통한 휴한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대만의 휴한농업의 실태에 근거하여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세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첫째, 정부지원이다.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적 지원(보조, 융자)보다는 관광농업지구 등 지역을 단위로 도로, 주차장, 가로등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관광농원 경영농민에 대한 교육훈련(위탁가능) 실시가 중요하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농업관광의 수요창출을 강화하고, 농민단체(농협 등)의 지도기능을 강화하여 관광농원의 자립의 도와야 한다.

또한 대만의 녹색박람회와 같이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농업축제를 개최하여 도시민 및 학생들에게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이해 증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농민에게는 농외소득 제고기회로 활용해야 하며,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조사·연구하는 농업교육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처의 협조를 받도록 해야한다.

둘째, 농민의식의 문제로 정부가 마련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한 학습을 통해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농원 설치와 운영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아울러 사회적 여건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5일 근무제의 실시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원휴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 지방공업지구 육성

대만은 비록 우리나라의 농공단지와 같이 특수한 정책목적을 지닌 농공단지는 없으나 취약지역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고, 또 도시와 농촌이 인접해 있어서 도농교류가 매우 용이한 실정이다.

대만에는 국가 지정 대규모 공업지구(공단)가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농촌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농촌노동력의 농외취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 현재 대만의 전체 농가 중 겸업농이 84.4%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많은 농민이 농업이외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작업의 기계화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주말기간을 이용한 농업활동이 충분히 가능하여 농민의 대부분은 겸업농이다. 또한 농촌지역도 농업이외의 각종 산업의 노동력이 필요하여 농민의 취업기회가 풍부하다.

현재 전국에 약 30여개의 정부가 지정한 국가급 주요공단과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업지구가 형성되어 있다. 경제개발 초기에 농촌지역에 무계획적으로 건립된 공장은 대부분 경제발전이 따른 임금상승으로 임금이 낮고 노동력이 풍부한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현재 대만 농촌 지역에는 대규모 공단은 거의 없다. 단, 각 지역별 소규모 공업지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지역의 농특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의 농민 또는 농가자녀를 고용함으로써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 소규모 공업지구는 경제개발 초기부터 농촌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공장에 대해, 환경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제조업을 양성화하기 NDLGO 정부에서 약 2-3ha 규모의 공업지구를 지정한 것이다. 일단 공업지구로 지정되면 농지전용이 가능하며 인근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 외국사례의 시사점: 농가소득정책의 방향

농가소득이 정체 내지는 감소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 대만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정책가격의 감축 등으로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한편, 농외소득도 농촌공업화가 가지는 한계 등에 의한 취업기회의 제약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같은 소득의 감소가

최근의 농가소득문제이며, 이러한 문제가 누적된다면 부채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일본은 1971년도 농공법에 의한 농촌공업화는 안정적인 겸업농가의 육성
성과 이농의 촉진에 의한 취업구조 개선효과와 이를 통한 전업농의 규모확
대를 도모하는 농업구조 개선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기
대했던 만큼은 달성되지 않았다. 농외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그동안 농외소
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소득이 감소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또 경지감소, 지가상승에 의한 규모확대 곤란, 노동력이 공업에 흡수됨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저하 등 농업 구조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이 컸던 것이
다.

또, 농촌공업화는 지속적으로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즉, 정부가 농공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투자
를 하더라도 진입과 퇴출의 의사결정은 기업이 하는 한 재산이 맞지 않으
면 퇴출해 버리는 문제와 기업의 이익은 본사에 회수되어 그 지역에 투자
되는 사례가 적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반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근 보급 확대되고 있는 것이 농촌지
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전체의 고용창출과 소득확보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농촌지역은 농산물 생산활동만이 아니라,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농가 민박, 도시농촌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확보하는 소위
농업의 6차 산업화이다. 이점은 대만의 경우도 유사하다.

소득확보의 사례를 통하여 양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는,
먼저 ‘농가단위’ 보다는 ‘지역단위’로 소득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지역별로 개성을 살려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례 등 다양한
자원이 소득확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농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농산물가공, 지역특산물 판매, 농촌관광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
득증대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대만에서의 농외소득 확보방안으로는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 농
산물 가공 산업의 발전 및 농촌공업화를 통한 농외취업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비지원의 경우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보다는 ‘지역단위’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관광농원 경영농가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농업관광에 대한 수요창출을 도모하고, 농민단체의 지도기능을 강화하여 관광농원의 자립확보를 중시하고 있다. 또, 관광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 농원 설치와 운영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원휴가 문화 정착을 강화하는 점도 특징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도 농외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공단지, 특산단지, 농어촌 휴양지, 임가공, 농산물 가공에 대한 재정과 금융등 정책지원을 해왔다. 1984-90년중 총지원금 1조원의 약 87%를 농공단지조성에 집중 투융자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허가도 간소화시켰다. 그러나 농공단지개발에 의한 농외소득은 단지 임금소득에 불과하므로 이 사업이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과거 농외소득원 사업은 농공단지 위주의 불균형적 정책 지원, 농업구조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타부처 유사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는 신규단지 조성보다는 기존단지의 내실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긍정적 여건이 성숙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방화시대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한편, 기계화와 자본집약적 농업이 진전되면 경영규모가 낮은 소규모 농가의 농한기 여가시간을 활용한 농외소득원을 찾는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지역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취업위주 사업에서 농민과 생산자 단체들이 자본주와 경영주로서 임가공산업 또는 특산단지,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등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어촌의 한계농지와 배후 임지에 주말농장, 시민농원, 고령자를 위한 실버타운 등을 건설하여 도시민에게 임대, 분양해주는 레저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농어촌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역시 완전히 새로운 시도가 아니며 과거 유사한 형태로 시행해본 경험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려 하기보다는 이제까지 도입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관

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수익성 등 경영상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문서작성법, 회계처리방법, 판로확장법, 법령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 요령, 친절교육 등 경영자질 및 경영기법에 대한 체계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 일부 성공사례는 홍보, 판촉에 대한 農消政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보여준다. 농산가공품을 지역특산물로 지정하고 자치단체와 농협은 홍보 및 판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유통시킨다면 유통비용의 절약 뿐 아니라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져 판로확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농가내부의 역할분담까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민은 음식마련, 청소, 판매 등 가구원의 일원으로 단순 참여하는 정도에 그친다.

Ⅲ. 농가여성의 취업유형

제Ⅲ장에서는 농가여성의 취업유형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먼저 농가인구의 변화에 대해 개괄한 후 성별 영농인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존 공식통계자료는 농가경영주 중심의 조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협업배우

자인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에 현재 가용한 자료로서 가장 최신자료인 199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농가여성의 취업유형과 농업편입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외에 가사, 지역사회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여성농업인들의 취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장의 마지막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시간사용 실태를 남성농업인 및 도시취업여성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노동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농가인구의 변화

2000년 12월 현재 농가수는 1,384천 가구로, 영세 및 고령농가의 탈농(脫農)과 일부농가의 타산업 전업(轉業) 등으로 농가의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둔화되고 있다. 즉 5년 주기의 「농업총조사」 결과, 농가 증감률이 '90/'85에서 -8.2%, '95/'90에서 -15.1%, '00/'95에서 -7.8%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감소폭의 둔화는 논농업직불제 등과 같은 정부의 농업지원정책으로 농촌지역의 이농가구가 감소하였고, 도시가구의 귀농이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 연도별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가구, 명, %

	농 가	농가인구			
		연평균증감률	총인구대비	연평균증감률	
1960	2,329,128	-	14,242,489	57.0	-
1970	2,483,318	0.6	14,421,730	45.8	0.1
1980	2,155,073	-1.4	10,826,748	28.9	-2.8
1990	1,767,033	-2.0	6,661,322	15.3	-4.7
1995	1,500,745	-3.2	4,851,080	10.9	-6.1
2000	1,384,468	-1.6(-2.4)	4,031,065	8.7	-3.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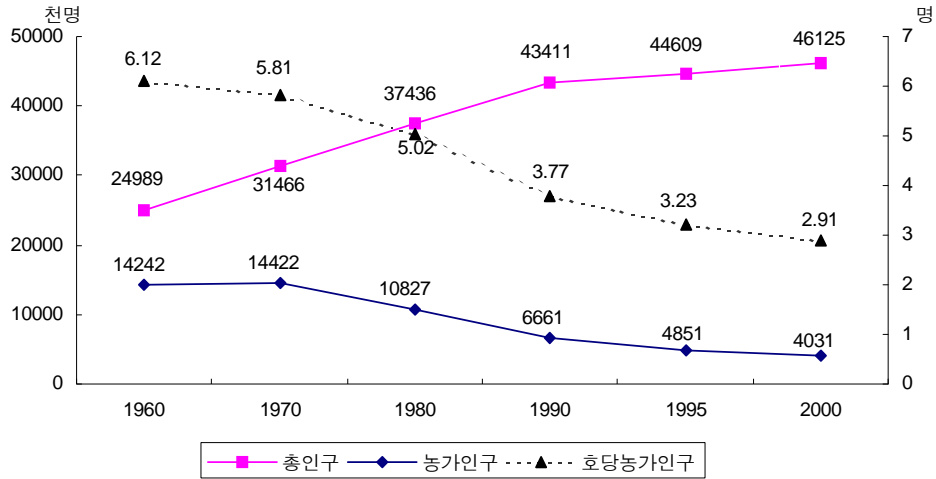
주: ()는 1990~2000년의 연평균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2000년 농어업 총조사」

지난 30년간 농가인구는 1천만 명 이상 감소하여, 해마다 약 35만 명씩 감소한 셈이다. 2000년말 현재 농가인구는 4,032천명으로 '95년보다 16.9% 감소하였고, 지난 5년간 819천명이 감소하여, 매년 평균 3.6%씩 감소해 왔다. 농가인구의 감소는 계속되고 있으나, 경기둔화에 따른 도시 취업여건의 악화로 도시 전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감소폭은 '85~'90에 -4.7%에서 '90~'95에 -6.1%로 그리고 '95~'00에 -3.6%로 크게 둔화되고 있다.

또한 농가인구가 해마다 줄어들어 따라 농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2.91명으로 90년의 3.77명과 비교하여 10년 전보다 약 0.9명이 감소하였다. 총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90년 3.82명에서 '00년 3.22명으로 0.6명이 감소함으로써, 농가 가구원수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 연도별 총인구와 농가인구



주: 총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임

지난 30여년간 농가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인구구성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1970-98년 사이에 농가인구는 14,421천명에서 4,399천명으로 -69.5%가 감소하였다. 농가 여성인구도 동 기간에 7,258천명에서 2,270천명으로 -68.7%가 감소하였는데 여성의 감소비율이 남성보다 약간 적어 총농가 인구중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3%에서 51.6%로 증가한다.

<표 III-2> 연도별 성별 농가인구 추이

단위: 명, %

	농가인구	남 자		여 자	
			구성비		구성비
'70	14,421,730	7,163,515	47.9	7,258,215	50.3
'80	10,826,748	5,414,805	50.0	5,411,943	50.0
'85	8,521,073	4,246,286	49.8	4,274,787	50.2
'90	6,661,322	3,278,764	49.2	3,382,558	50.8
'95	4,851,080	2,372,999	48.9	2,478,081	51.1
'00	4,031,065	1,970,989	48.9	2,060,076	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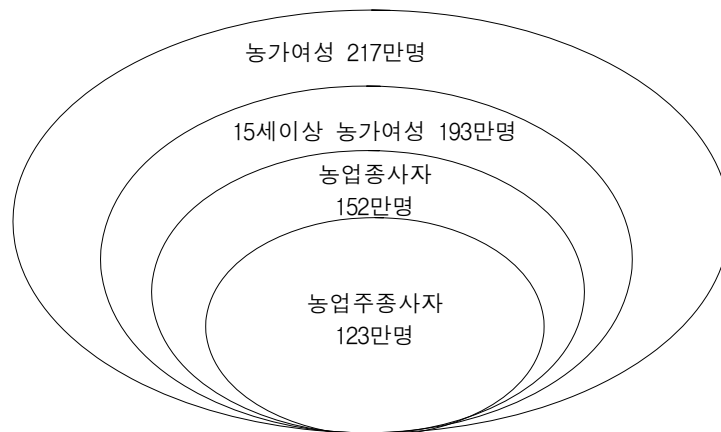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1995년 농업총조사」, 통계청 「2000년 농어업총조사」

2. 농가여성의 취업 현황

가. 농업부문

1999년 현재 농가여성은 <그림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17만명(2000년 206만명)이며 이중 15세 이상 농가여성은 193만명(2000년 184만명)이다. 또한 여성농업종사인구는 152만명이고 농업주종사인구는 123만명으로, 농가여성중 농업취업자 비율이 78.8%에 이룸으로써 농가여성의 주된 취업유형은 농업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 여성농가인구와 농업종사자(1999년)



자료: 통계청, 「1999년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15세 이상 농가인구를 취업유형에 따라 농업주종사자, 겸업주종사자, 기타(학생, 주부 등)로 나누어 보면, 여성의 농업주종사 비중¹⁷⁾은 1970년도의

17) 농업종사인구 중에서 종사기간을 기준으로 농업에만 종사하였거나 또는 농업이

27.6%에서 1995년도에는 61.8%로 급증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76.8%에서 59.9%로 감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겸업주종사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증가하나 남성의 증가폭이 월등하게 커서 남성농업인의 겸업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여성농업인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결과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농촌여성인구중 농업주종사자 비율은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1995년 현재 전체 농업주종사자중 여성비율이 52.4%로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도 여성은 남성주종사자 수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농업주종사인력으로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응하는 정도로 농촌여성의 인력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양적인 의미 뿐 아니라 질적인 의미에서 여성농업인이 중심인력화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저해요인이 있는지 규명해야 할 과제이다.

다른 하나는 15세 이상 농가인구중 학생이나 주부 등 무직자 비중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수작물 중심의 상업농, 전작 등의 증가는 여성인력에 대한 긴박도를 높여, 가사에 종사하면서 부분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던 농가의 여성노동력을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농업 노동력으로 편입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3> 성별 농가인구의 취업 유형

단위: 천명, %

	1970		1980		1990		1995		1999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5세 이상 농가인구	4,218 (100.0)	3,932 (100.0)	3,835 (100.0)	3,762 (100.0)	2,711 (100.0)	2,580 (100.0)	2,150 (100.0)	2,021 (100.0)	1,929 (100.0)	1,771 (100.0)
농업주종사 비율	27.7	75.1	32.7	65.7	54.7	61.6	61.8	59.9	63.6	62.8
겸업주종사 비율	3.2	9.8	6.1	10.4	11.7	17.9	14.9	23.4	12.7	20.5
기타(학생, 주부)	69.1	15.1	61.2	23.9	33.6	20.5	23.3	16.7	23.7	16.7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년도, 통계청(2000) 「1999년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외의 일에 종사하였어도 농업종사기간이 농업이외의 일에 종사한 기간보다 많은 농가인구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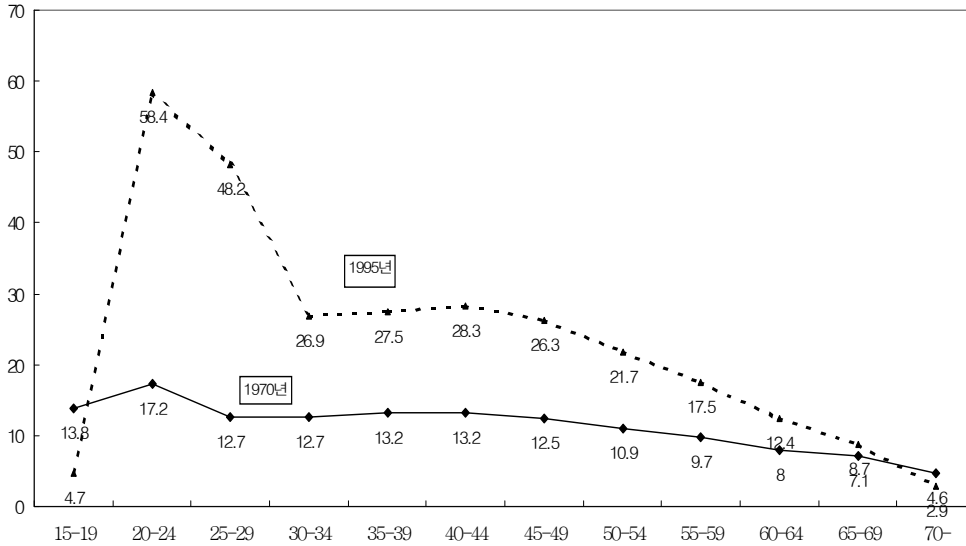
나. 비농업부문

1995년 「농업총조사」 결과에서, 15세 이상 농가여성중 비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은 20-24세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며 30세를 전후하여 축소되지만 35세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낸 후 하강한다. 30세 경에 비농업부문 종사자가 줄어드는 것은 출산·육아의 시점으로 비농업부문의 경우 가사와의 병행이 어려운 것을 반영한다. 반면 1970년의 경우, 비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15-24세 연령층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결혼·출산시기인 25세를 전후하여 축소되다가 30세 이후 다시 증가하지만 증가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지난 25년간 농가여성의 취업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비농업부문의 취업률이 15-19세층을 제외한 전 연령구간에서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20대 여성층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50세 후반에 이르기까지 비농업부문 종사자 비율이 20%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그만큼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음을 암시한다. 특히 농가의 20대 초반 여성의 비농업부문 취업률이 6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농업부문이 학교졸업한 신규취업자를 유인하지 못함을 입증한다. 또한 1995년 농가여성의 비농업취업률의 고점과 저점이 나타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여성의 평균학력의 증가, 만혼화 경향을 반영한다.

이제 비농업 부문 취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농업부문에 취업하고 있는 농가여성중 사무직 종사자는 주로 20대 연령층이고, 반면 생산직이나 판매직, 서비스직 종사자의 대부분은 30대 이후 연령층이다. 사무직 종사자의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부분은 미혼여성으로 결혼·출산과 함께 취업을 중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 농가여성의 연령계층별 비농업부문 종사율(1970년, 1995년)



<표 III-4> 15세 이상 농가여성의 특성별 취업현황(1995년)

단위: %

	15세이상 농가인구	농업 주종사자	겸업 주종사자								기타
			계	1종	2종	사무	생산	상업	어업	기타	
남자	100.0	59.9	23.4	(21.5	78.5)	(21.1	28.6	11.5	5.5	33.2)	16.7
여자	100.0	61.8	14.9	(26.7	73.3)	(28.0	27.8	16.3	6.5	21.4)	23.3
□ 연령											
-29세	31.6	3.0	43.9	59.4	37.8	92.4	7.0	12.9	3.6	24.8	55.3
30-39세	9.2	11.8	14.6	10.8	16.2	5.6	15.3	25.1	17.4	16.8	4.7
40-49세	12.4	17.8	18.0	12.7	20.1	1.3	23.1	29.0	28.2	21.7	2.7
50세+	46.7	67.4	23.5	17.2	25.9	0.8	23.9	33.1	50.8	36.7	37.4
□ 학력											
초졸	64.1	80.5	36.5	27.5	39.9	0.7	41.9	45.6	80.4	52.7	38.8
중졸	13.2	12.4	14.4	11.2	15.6	1.8	18.8	25.1	14.3	15.9	14.9
고졸	18.6	6.6	40.0	49.3	36.5	72.1	36.9	26.2	5.1	24.8	37.0
전문대+	4.0	0.5	9.1	12.0	8.0	25.4	2.5	3.1	0.2	6.7	9.7
□ 혼인상태											
미혼	18.8	1.0	40.7	56.5	43.5	90.9	35.5	8.2	1.2	21.7	51.8
기혼	81.2	99.1	59.3	34.6	65.4	9.1	64.5	91.8	98.8	78.3	48.2

자료 : 농림부, 「1995년 농업총조사」.

3. 여성농업인의 농업편입 유형¹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가여성중 농업종사자는 대부분 중장년층의 기혼여성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영농구조가 소규모 가족농이므로 여성농업인은 가족농 체제에서 공동경영주 또는 협업배우자로 영농활동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 영농구조 상의 특징을 포착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본고는 여성농업인의 가족내 위치(즉 농사일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주인지의 여부)와 농업종사 여부를 기준으로 농업참가 유형을 분류하여 보았다. 이 기준으로 「농업총조사」의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는 <표 III-5>와 같으며 여기서 우선 우리 나라 농가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79.5%이고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농가가 20.5%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I-5> 농가부부의 농업편입 유형

단위 : %(천가구)

	합계	무배우	부부농업	농업+농외	배우자무직	농외+농업	부부농외
계	100.0(1,499)	20.5	58.5	5.1	5.0	5.7	5.2
남자경영주	100.0(1,276)	8.1	68.6	5.0	5.6	6.7	6.0
여자경영주	100.0(230)	92.2	0.9	5.3	1.3	0.1	0.3
여성경영주비율	15.3	66.9	0.2	15.5	3.9	0.3	0.9

주: ‘농업+농외’는 경영주가 농업주종사자이고 배우자가 농외취업자를 말하며, ‘농외+농업’은 경영주가 농외취업자이고 배우자가 농업주종사자를 말한다.

자료: 김영옥·김이선(1999).

유형1: 먼저 전체 농가를 경영주의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자 경영주가 85.7%이고 여성이 경영주인 농가는 15.3%이다. 여성경영주 농가의 절대 다

18) 이 부분은 김영옥·김이선(1999)에서 요약·정리하였음.

수인 92.2%가 남성배우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부재하기 때문에 경영주가 되었으며¹⁹⁾, 5.3%는 배우자가 존재하나 겸업종사자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같이 농업종사자이면서 여성이 경영주인 비율은 0.9%에 그친다. 농가부부의 농업종사 유형을 영농형태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부부 양쪽이 모두 농업주종사자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영농형태는 특용작물, 화훼, 축산, 과수 등으로 전형적으로 부인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업생산부문이다. 반면 전작, 채소, 논벼 등은 무배우자 농가의 주된 영농형태로 나타난다.

<표 III-6> 영농형태별 농가부부의 농업편입 유형

단위 : %(천가구)

	합계	무배우	부부농업	농업+농외	부부농외	배우자 무직
계	100.0(1,499)	20.5(308)	58.5(877)	10.8(162)	5.2(78)	5.0(75)
논벼	100.0(823)	21.2	56.4	11.5	5.3	5.6
과수	100.0(144)	17.4	64.2	10.7	3.8	3.9
채소	100.0(246)	21.4	62.0	8.4	4.8	3.4
특용	100.0(46)	15.9	70.8	6.4	3.3	3.5
화훼	100.0(10)	13.9	66.7	9.1	3.6	6.6
전작	100.0(70)	34.3	39.0	12.0	10.3	4.4
축산	100.0(156)	14.0	64.5	11.3	4.6	5.5
기타	100.0(4)	28.1	35.8	14.4	13.3	8.5

주 : '부부농업'은 부부 모두 농업주종사자, '농업+농외'는 부부중 일방은 농업주종사자이고 다른 일방은 농외취업자인 조합, '부부농외'는 부부 모두 농외취업자를 말함.

자료: 김영옥 · 김이선(1999).

유형2 : 이번에는 전체농가에서 무배우 농가를 제외시키고 유배우 농가만을 대상으로 부부의 농업참가 형태를 살펴보면 부부 모두 농업주종사자인 농가는 73.6%이다. 경영주는 농업주종사자이나 배우자는 겸업종사자인 농가는 6.4%이며 반대로 경영주는 겸업종사자이고 배우자가 농업주종사자

19) 이와 같은 여성독거농가는 전체 농가의 13.7%에 해당한다.

인 가구는 7.2%, 부부 모두 겸업주종사자인 가구는 6.5%이다. 배우자가 가사 등으로 무직인 비율은 6.3%에 지나지 않는다.

유형3 : 마지막으로 남성을 제외시킨 채 농가여성의 농업편입 상황을 규명해 보았다. 그 결과 <그림 III-4>와 같이 여성경영주는 16.0%이고 나머지 84.0%는 남편이 경영주이었다. 여성이 경영주인 농가의 대부분(89.9%)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경영주인 경우이며, 나머지 10.1%의 여성경영주가 남편이 있음에도 여성이 경영주였다. 후자의 경우는 대체로 남편이 농외취업자로 나타났다. 남편이 경영주이고 자신은 비경영주로서 농업주종사자인 비율은 68.8%²⁰⁾, 겸업주종사자(농외취업자)인 비율은 10.1%²¹⁾이다. 농가여성의 나머지 5.1%는 가사 등 비경제활동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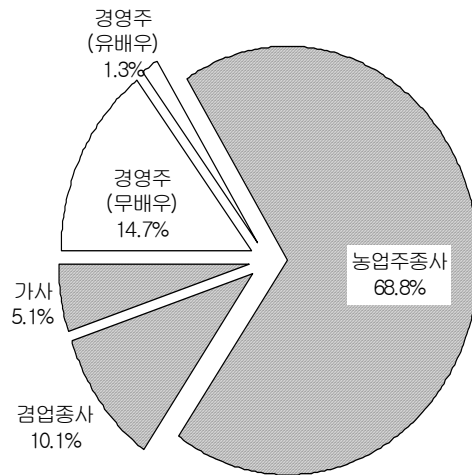
농가여성의 농업편입상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우리 나라 농가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은 부부 모두 농업주종사자이나 남편이 경영주라는 것이다. 심지어 부인은 농업주종사자이고 남편이 농외취업자인 경우에도 남편이 농가의 경영주로 간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여성이 경영주인 경우는 무배우일 때이며 셋째, 농가부인으로서 가사에만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 농가여성중 5.1%에 그친다.

요컨대 농가 기혼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는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의 78.9%가 무급가족종사자이고, 16.0%는 경영주로서 농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5.1%는 가사 등 비경제활동상태이다. 또한 여성경영주의 대부분은 독거가구의 고연령층이다.

20) 이 비율은 다시 부부 모두가 농업주종사자인 62.7%와 남편은 겸업종사자이고 부인이 농업주종사자인 6.1%로 나뉘어진다.

21) 이 비율은 남편은 농업주종사자이고 부인이 겸업종사자인 4.6%와 부부 모두 겸업종사자인 5.5%를 합친 것이다.

<그림 III-4> 농가 기혼여성의 농업 종사상의 지위



출처: 김영옥 · 김이선(1999).

4. 여성농업인의 시간사용 실태

가. 「생활시간사용조사」의 개요

「생활시간조사」는 1980년대부터 한국방송통신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조사의 목적이 주로 방송관련 행태로 제한되어 있어 결과의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통계청에서는 시간사용조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사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여 새로이 조사를 설계하여 1999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여성농업인은 농사일에 더하여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활동도 담당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평균적인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통계청이 1999년에 실시한 「제1차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재분석하였다.²²⁾

이 조사는 응답 가구당 2일씩 9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시간일지를 기입하게 되어 있다. 전국 17,000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46,109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고, 최종 분석에는 42,973명의 유효응답 자료가 사용되었다. 조사항목은 가구관련사항으로 주택종류, 입주형태 및 미취학 아동 보유형태 등이고, 개인관련사항으로 성별,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 개인특성 및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느낌 그리고 시간활용관련 사항으로 시간일지(time-diary)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가구 및 개인관련 사항의 경우 면접조사, 시간일지(time-diary)의 경우는 2일(48시간) 동안의 행동과 시간을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다. 기입해야 할 내용은 어떤 행동을 언제 몇 분 동안 했는지, 주된 행동 및 동시행동을 10분 간격으로 기입하고, 집안밖 여부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행동은 9개 대분류, 51개 중분류, 125개 소분류체계로 정리하였다. 조사는 매 10분단위로 자계식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나누어 조사함으로써 요일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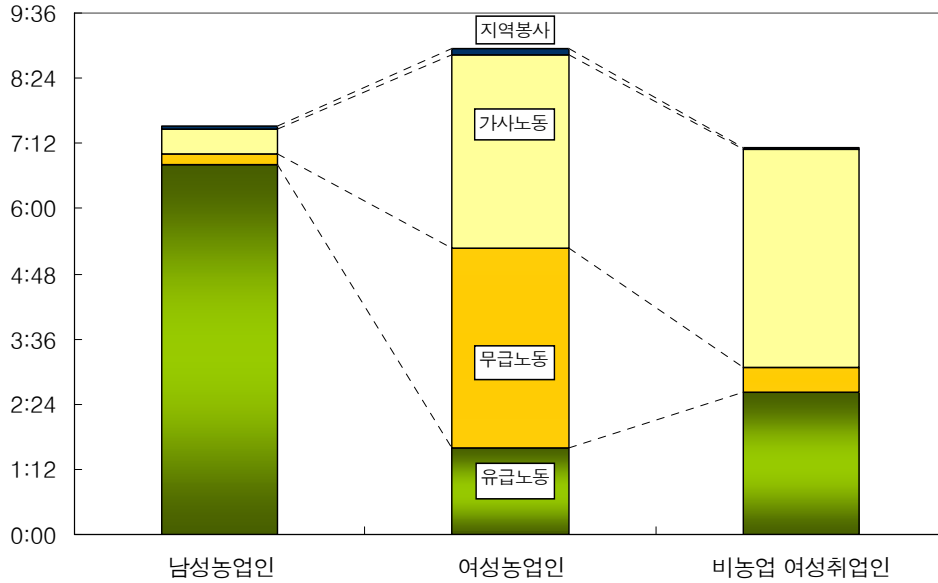
나. 여성농업인의 시간사용 실태

여성이 농업생산부문에 담당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농촌여성의 노동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력 투하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과 1998년의 경우 각각 48.2%, 46.6%로, 남자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여성농업인은 이와 같은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및 지역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총 노동시간이 남성농업인보다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정도 더 많다. 도시취업여성보다는 총노동시간이 1시간 49분 더 많다. 반면 여가시간은 가장 짧다.

22) 이 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림 III-5> 여성농업인의 하루평균 시간 사용실태(1999년)

단위: (시간: 분)



주: 대상자는 모두 20세 이상 성인이며, 평일과 토·일요일을 합친 평균값임.

자료: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표 III-7> 여성농업인의 하루평균 노동시간 (20세 이상)

단위: (시간: 분)

	유급	자가소비 및 무급	가사	지역봉사
남성농업인	6:49	0:12	0:27	0:03
여성농업인	1:36	3:41	3:32	0:08
비농업 여성취업인	2:37	0:27	4:01	0:03

자료: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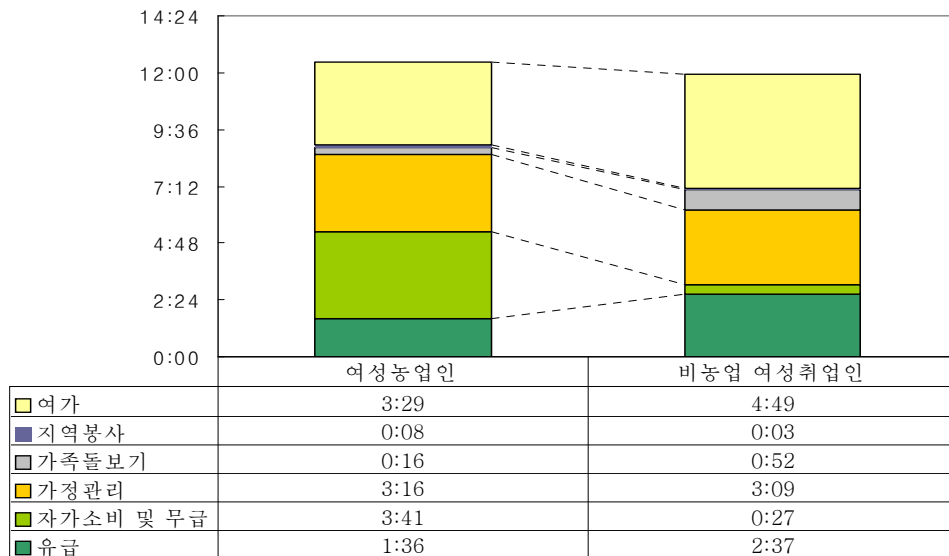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내역별로 분해하면, 유급노동에 1시간 36분, 무급노동에 3시간 41분, 가사노동에 3시간 32분이다. 남성농업

인의 유급노동시간수가 6시간 49분인 것에 비해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남녀가 같은 농업일에 종사하더라도 남성농업인은 농가 경영주로서 유급노동시간으로 간주되는 반면 여성은 가족종사자이기 때문에 농사일이 무급노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의 내역별 시간사용을 도시 취업여성과 비교하면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과 미미한 여가시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의 유급 및 무급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17분인 반면 비농업 취업여성은 3시간 4분으로 여성농업인이 2시간 13분이나 더 많다. 가사노동시간에서도 여성농업인의 투여시간이 도시 취업여정보다 더 많고, 지역봉사에 할애하는 시간 역시 더 길다. 그러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3시간 29분으로 도시 취업여성의 4시간 49분보다 1시간 20분이나 짧다. 여가가 삶의 질을 대변하는 변수임을 감안할 때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위기 상황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과 장시간 근로에 대한 완화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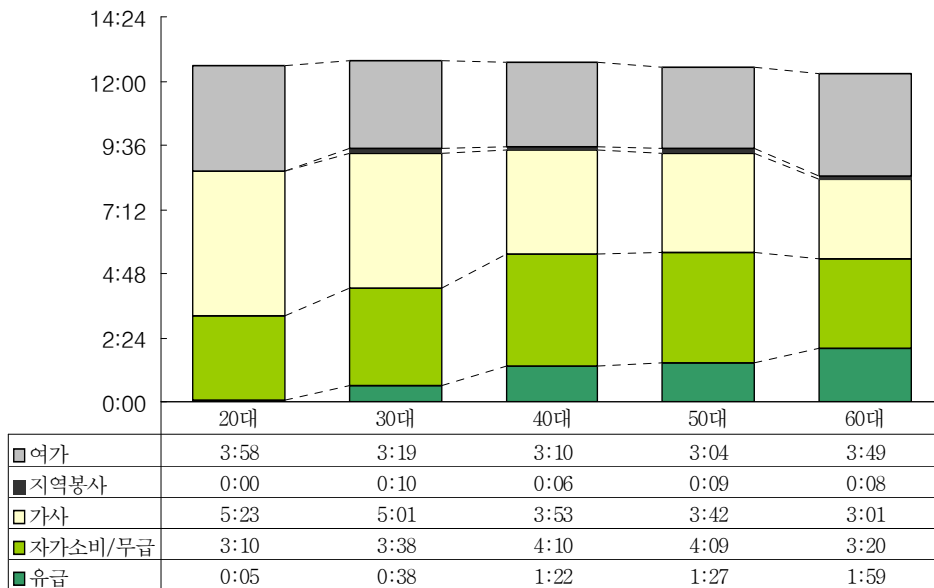
<그림 III-6> 농업 및 비농업 취업여성의 생활시간 구성표(20세 이상)

단위: (시간: 분)



<그림 III-7>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별 생활시간 구성표(20세 이상)

단위: (시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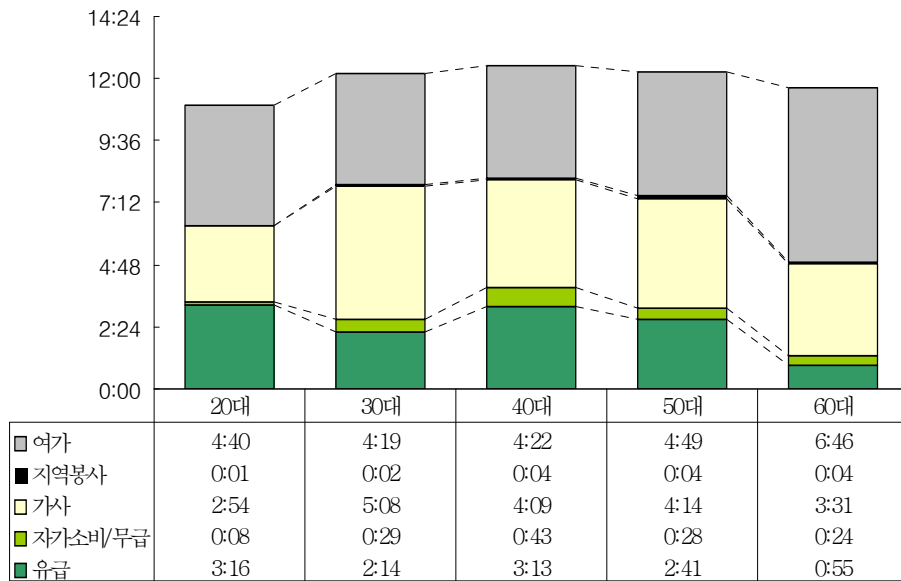
특히 여성농업인 노동부담이 갖는 문제의 심각성은 은퇴연령이 되어도 완화될 기미가 약하다는데 있다. 도시취업여성은 <그림 III-8>과 <그림 I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무급 및 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이 40대에 8시간 5분으로 가장 많아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 60대에는 4시간 50분이 된다. 반면 여가시간은 정확하게 반대모습을 나타낸다 60대의 총여가시간은 6시간 46분으로 총노동시간을 2시간 가까이 증가한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의 경우 첫째, 연령별로 변화하는 모습이 도시 취업여성만큼 극적이지 않다. 총노동시간만 하더라도 20대에 8시간 38분을 기록하고 40대에 9시간 25분으로 극대점에 도달한후 감소하여 60대에 8시간 20분인데, 변화정도가 매우 완만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가시간도 마찬가지로이다. 20대 여성농업인의 여가시간이 3시간 58분으로 가장 길고, 50대 여성의 여가시간이 3시간 4분으로 가장 짧는데 그 차이가 54분 정도이다(50대

여성이 40대여성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데도 여가시간 역시 짧은 것은 지역 봉사 시간 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60대 여성농업인의 여가시간이 3시간 49분으로 도시 취업여성의 여가시간인 6시간 46분의 거의 절반수준이다. 이는 농업의 특성상 농업노동의 내용과 시간이 여성농업인의 연령에 맞춰 변화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농업, 농촌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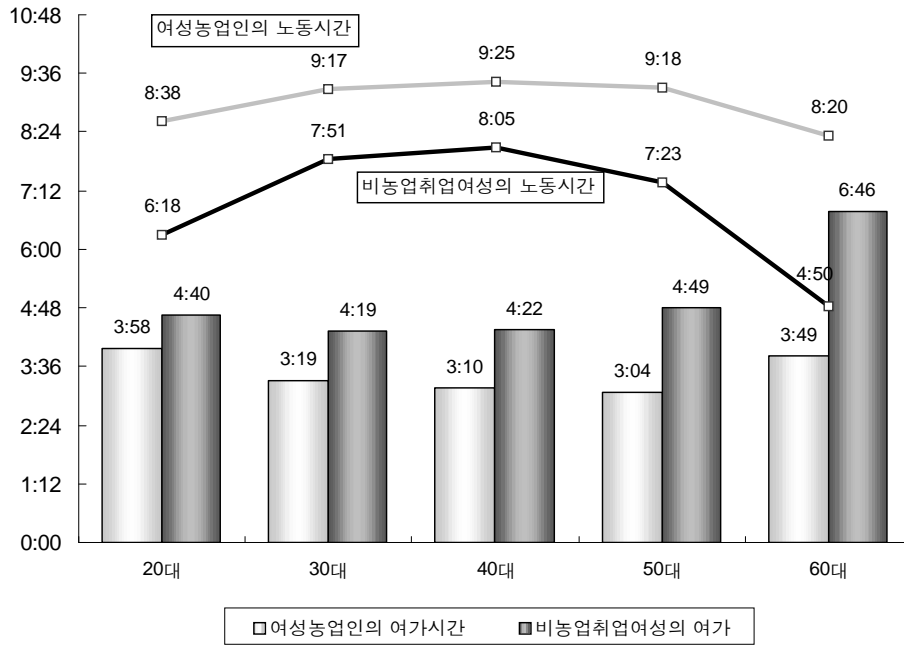
<그림 III-8> 비농업 여성취업자의 연령대별 생활시간 구성표(20세 이상)

단위: (시간: 분)



<그림 III-9> 농업/비농업 취업여성의 연령대별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단위: (시간: 분)



IV. 여성농업인의 소득에 관한 실태조사

제IV장과 제V장은 본고가 직접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것이다. 먼저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을로 충남의 2개군 9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마을조사 및 마을내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하여 마을의 영농특성, 농촌마을의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소득자원, 농외소득 자원(일감갓기 사업, 인근 산업체, 농공단지, 부업단지, 관광농원 등) 등을 파악한다. 둘째, 농가여성의 인적자본 특성, 농업편입유형, 영농실태와 농외취업 현황, 자산소유 여부 등을 조사한다. 셋째, 농가 및 여성농업인의 연간소득을 파악한다. 여기서 농업소득은 「농가경제통계」의 방식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작목별 농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함으로써 산출했으며, 이중 여성농업인의 소득분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투입시간을 조사하였다.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성농업인 소득추정 모형을 수립하고, 그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1. 조사방법론

조사대상지역으로 “2000년 농어업 총조사 잠정결과”를 토대로 전국에서 농가비중이 높은 충청남도를 1차로 선정한 후, 같은 기준으로 충남에서 청양군과 부여군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군에서는 농가비중, 농업지대, 일감갓기 사업여부 등을 고려하여 9개 마을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 지역들은 수도작이 중심을 이루지만, 취나물 시설재배, 딸기, 수박, 고추, 담배, 표고버섯, 산나물 채취 등의 특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농업소득원을 파악하고 또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노동내용을 살펴보는데 비교적 적합

하였다.

설문조사는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2001. 8. 27. - 2001. 9. 5.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같은 시기에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이장을 통한 마을현황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의 목적과 주제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 10명이 여성농업인과의 면대면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아 적으면서 이루어졌다.

본 설문조사가 진행된 시기는 농번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논이나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서로의 생활형편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 한 설문은 조사원이 개별여성을 단독으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설문을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었다. 바쁜 농사일정이나 외부인에 대한 초기의 경계심, 그리고 ‘자랑스럽지 않은 일(예를 들어, 집안형편이 아주 어렵다거나 여성 자신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경우 등)’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은 심리 등으로 여성농업인은 정확한 응답을 꺼려했고, 이때마다 마을 여성들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설문내용은 개별 농가의 농작물 현황 및 농가여성들이 어떠한 노동을 얼마만큼 수행하고 있는지와 농가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설문내용 중 소득활동에 대한 것은 각 작물별 총 판매액과 비용, 농업소득액을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가 8월과 9월에 걸쳐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2000년의 소득액을 질문하였다. 농작물의 가격이 해마다 달라지고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이 농가 소득안정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이 연구는 정확한 소득액 산출이 목적이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취업유형별 소득과 증대방안과 기여도 측정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조사의 내용은 마을의 지리적 입지, 도로 및 교통상황, 마을의 인구구조, 산업현황으로 구성되었다. 가구조사는 조사대상 마을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사내용은 크게 가구관련 사항과 여성농업인 관련 사항으로 이분될 수 있다.

가구관련 사항으로 가구원 현황, 가구의 토지소유 현황, 임대차 현황, 경작면적 및 작목별 식부면적, 농업소득, 농외소득 등 가구소득을 조사하였다. 여성농업인 관련 사항으로는 먼저 대상자의 연령, 학력, 영농했수, 농업취업계기, 경영자 여부, 컴퓨터 보유 및 활용능력, 소지하고 있는 기술 등 인적자본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취업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외취업 여부와 소득 등 농외취업일 특성, 작목별 노동투입시간, 생산자 조직 등의 참여정도 등을 질문하였다. 농업소득의 경우 부부가 같이 협업하는 경우 여성의 기여도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구의 농업소득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를 추정하는 대리변수로 작목별로 여성노동투입 비중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아울러 본인명의로의 자산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영농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향후 계획도 질문하였다.

<표 IV-1> 실태조사의 내용

	내용	세부사항
마을조사	지리적 위치	지형 및 지세(산, 강, 저수지 등 지리적 특성), 생활권(교육, 의료, 금융, 문화 시설 등)
	도로 및 교통	대중 교통수단, 자가용 보유율
	인구 및 가구	면단위 인구 및 가구 동향, 마을의 인구 구조 및 동향, 마을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농업 등 산업 동향	주요 작물, 영농시설 및 기술, 생산자조직 및 이용실태, 마을의 농외 소득자원(농공단지, 일감갓기 사업, 관광농원 등)
가사	가구원 현황	동거가구원, 가구원 인적사항(성별, 연령, 취업, 학력, 농업 및 농외취업 종사 현황 등)
	토지소유 및 임대차	소유농지, 농지 임대 및 임차, 경작규모
	농업경영	작목별 식부면적, 주작목별 판매액, 경영비 등
	가구소득	농업·농외·이전소득 등 소득원별 소득액
여성농	인적자본	연령, 학력, 영농했수, 농업취업계기, 소유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취업활동과 소득	작목별 노동투입시간, 농외 취업일과 소득, 생산자 조직 참여
	자산소유 정도	본인명의로의 자산소유 실태
	향후 전망 및 제언	향후 영농규모에 대한 계획, 소득 안정을 위한 제언

2. 조사지역의 개관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여군 남면 5개 부락과 청양군 정산면 4개 부락의 개략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가가 월등히 많았고, 비교적 여성 성비가 남성에 비해 높은 편으로 농촌 전반의 여성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농가의 평균가구원수는 2.8명으로 2000년도 전국농가 평균가구원수인 2.91명보다 약간 적었다(통계청, 2001).

<표 IV-2> 조사대상지역의 인구 현황

행정구역		전체				전체			
		가구수	농가수	비농가수	농가비중	인구	남	여	여성비중
충남 부여군 남면	내곡 1리	60	41	19	68.3	126	53	73	57.9
	내곡 2리	29	24	5	82.8	61	30	31	50.8
	송암 1리	72	53	19	73.6	187	87	100	53.5
	송암 2리	64	45	19	70.3	182	86	96	52.7
	삼용 1리	88	45	43	51.1	202	87	115	56.9
충남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72	57	15	79.2	205	103	102	49.8
	송학리	58	55	3	94.8	163	74	89	54.6
	남천리	61	58	3	95.1	227	102	125	55.1
	역촌 1리	78	51	27	65.4	270	130	140	51.9
계		582	429	153	73.7	1,623	752	871	53.7

가. 부여군

1) 지리적 위치 및 도로여건

충남 부여군은 행정구역상 1읍 15면으로 되어 있으며, 군 소재지는 부여읍이다. 이 중에서 남면은 동쪽으로는 장암면, 남쪽으로는 충화면, 서쪽으로는 홍산면, 북쪽으로는 구룡면에 둘러싸여 있다. 남면에서 부여읍까지

는 버스로 30-40분 정도 걸린다. 부여군에는 은산면, 홍산면, 임천면, 장암면의 4개 면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홍산면에 있는 농공단지에는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남면 삼용1리에서 1-2명 일하러 다니기도 한다. 조사대상지역인 남면에는 농공단지가 없다. 부여군에는 관광농원이 3개 있으며, 각각 홍산면, 은산면, 남면(금천리)에 위치하고 있다.

남면 전체에 강이 없으므로 부여의 백마강에서 양수하여 농사를 짓는데, 이것은 1년에 2회 정도 모내기철에 이루어진다. 백마강에서 양수해 오지 않으면 천수답이라서 물 사정이 열악한 지역이지만 현재는 수리안정지역이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대상인 내곡1·2리와 삼용1리는 바로 옆 마을이며, 송암1·2리는 이들 마을보다 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들 마을은 보건소나 농협 등을 이용할 때는 면소재지인 회동리로 가지만, 큰 기관을 찾을 일(은행, 병원, 장)이 있을 때는 부여군의 읍 소재지인 부여읍으로 간다. 부여로 나가는 대중노선은 홍산-부여행 버스가 있다. 이 버스는 1시간에 1대 꼴로 있고, 7시-9시 정도까지 있어서 하루에 14회 운행된다. 한번 버스를 놓치면 1시간 기다려야 하므로 교통편이 불편하다. 게다가 내곡1리는 군도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는 하루에 2회만 있다. 내곡2리는 내곡1리보다 도로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을 앞을 지나가는 버스길이 준공중이며, 내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송암1·2리 마을 앞으로 홍산-장암간 面道가 나 있고 버스 정류장에 인접해 있어 교통편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

삼용1리는 마을 내에서 부여로 가는 버스가 하루 1회 운행한다. 500미터 정도 걸어나가서 국도로 가면 40분 간격으로 6시 2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다. 면소재지에 있는 보건소와 농협, 우체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침 7시 40분에 있는 하루 1회뿐인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버스를 타고 나갈 경우, 관공서는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시간이라서 이용하는 데 매우 불편하다. 그렇지 않으면 3.5킬로미터를 걸어나가서 홍산면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홍산으로 보건소 등을 가야 한다. 하지만 홍산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다시 갈아타고 하는 시간만 거의 4시간이 걸리는데다가 홍산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남면 사람이 홍산으로

<그림 IV-1> 충남 부여군 남면 일대 지도



왔다고 해서 홀대를 한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기도 어려워 교통편이 매우 불편하다. 결국은 마을 사람 중 목적지와 시간이 맞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현재 마을의 88가구중 12가구가 트럭을, 10가구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다. 자가용 보유자 중 절반 정도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데 차를 이용한다. 대중교통편이 매우 불편한 이 마을에 대한 보상책으로 정부보조로 현재 건강관리실이 신축 중에 있다.

2) 가구 현황 및 생활여건

5개 마을 중 유치원이 있는 곳은 없다. 면소재지인 회동리에 세광유치원이 있다. 학교는 내곡리에 남면 초등학교, 남성중학교가 있다. 고등학교는 부여에 있는 부여고등학교나 인접해 있는 규암면에 소재한 규암상고에 다닌다. 옆면인 홍산면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삼용1리의 경우 홍산면에 있는 장수초등학교에 다닌다.

의료시설은 면소재지인 회동리에 보건소가 있으며, 인접해 있는 홍산면에 약국과 의원이 있고 병원은 부여읍까지 나가야 한다. 농업관련 유통·저장시설은 내곡2리에 농기계 창고가 있으며, 송암1리에는 정부지원으로 만든 농산물집하장이 있다.

이 중에서 삼용1리의 경우 마을 내 대중 교통편이 불편한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건강관리실을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짓고 있으며 9월 중순에 완공 예정이다. 정부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마을자본을 1,000만원 대기로 했다.²³⁾ 건강관리실이 완성되면 마을사람들에게서 유지비 정도의 이용료는 받을 계획이다.

5개 마을 중 송암1·2리는 남면 전체에서 생활형편이 상위에 속하며,

23) ‘마을자본’은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①마을에서 혼인이나 장례가 있는 경우 마을사람들이 도와주는데 대해 도움받은 집에서 내놓는 사례비 ②마을에서 성공한 사람이 내놓은 기여금 ③청년회 및 부녀회 회비중 일부 등으로 구성된다.

삼용1리는 중상위 정도 그리고 내곡1·2리는 하위에 속한다고 평가한다. 그 이유는 송암1·2리는 특작을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반면 내곡 1·2리는 여성고령 인구가 많고 소규모로 벼농사만 짓기 때문이라고 한다.

3) 농업형태 및 소득원

내곡 1리 : 주로 벼농사를 짓고, 하우스에 취나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많다. 하우스에서 복수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2-3가구 있다. 그전에는 대부분 벼농사만 지었으나 5-6년 전부터 취나물을 시설재배하고 있다. 마을 내에 ‘농촌여성 일감갹기 사업’으로 ‘참실 콩나물’ 공장이 있으며, 여기에 마을여성 2명이 오전에 일한다. 마을에 취나물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서 취나물을 포장할 비닐이나 박스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대개 남성이 참가하고 있다.

내곡 2리 : 주로 벼농사를 한다. 담배를 재배하는 집이 2가구이다. 예전에는 담배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았으나 지금은 2집으로 줄었다. 과거에는 담배잎을 그냥 말리기만 해서 판매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매청에서 찌는 담배를 하라고 하는데 담배를 찌는 것은 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했다. 그래서 담배 대신에 콩, 고추, 들깨, 취나물 등을 특작으로 조금씩 하는데 이것으로 벼농사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다. 취나물은 200평에 순수입이 200-300만원이 남는데 비해, 벼농사는 70만원이 남는다. 취나물은 겨울, 봄, 여름 내내 하다가 요즘은 취나물 잎이 세어져서 잠시 쉬고 있다. 취나물 시설재배는 대개 아주머니들의 일이다. 남자들은 물 대주고, 농약 치는 일 외에는 취나물 재배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여자들은 김매기, 취나물 뜯기 등 전반적인 일을 한다. 이 마을에도 취나물 작목반이 있다. 그리고 내곡 2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 유난히 여성 고령인구가 많았고, 반면 영농후계자는 없었다.

송암1리 : 주로 논농사를 짓고, 총 72가주중 하우스에서 수박, 딸기를 하는 가구가 30집 정도 된다. 16집 정도가 밤나무를 기른다. 이 마을에서 수박과 딸기 농사를 지은 지는 꽤 오래 되었다. 생활형편으로 볼 때 남면 전체에서 상위에 속하며,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지면적이 넓은 편이다. 이밖에 다른 소득원은 없으며 취로사업을 하는 영세민이 2-3명 있다. 이들은 모두 여자이며 58-60세 정도의 나이이다. 취로사업을 하면 일당 2만 2천 원이 나오는데, 취로사업을 하는 이유는 일당금액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농사일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딸기 작목반, 수박 작목반, 산채 작목반(하우스 재배)이 있다. 이 마을은 남녀 구분 없이 작목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송암 2리 : 주로 논농사를 짓고, 64가구중 21집 정도가 하우스에서 수박, 딸기를 재배하고 16집 정도가 밤나무를 기른다. 수박과 딸기는 다른 땅에서 따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우스 시설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1년에 1번씩 농사짓는다. 딸기를 재배하는 것이 소득면에서 낮지만 딸기는 잔손질이 너무 많이 가고, 유통기간이 짧아서 보관상의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어떤 농가는 딸기를 재배하고 나서 늦게 복수박을 하기도 하고, 수박을 1년에 2번 짓는 농가도 있다. 수박은 하우스 1동에 평균 20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한다. 딸기는 하우스 1동에 350만원-400만원 정도 남는다. 농외 소득원은 없으며, 농한기에 부업거리가 거의 없다. 딸기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하는 사람은 20명 정도 된다. 일년에 5-6번 정도 모이고, 비닐 주문 정보나 농자재 구입 상의, 업체선정, 딸기 상자 구매 정보를 교환하고, 토의한다. 작목반은 대부분 남자들이 참여한다.

삼용 1리 : 총 88가구중 대부분의 농가는 논농사만 짓는다. 3가구가 하우스에서 딸기, 수박, 채소 등을 재배한다. 그 밖에 별다른 특작을 하는 경우는 없다. 논농사만 짓는 가구가 많은 이 마을에는 작목반이 운영되지 않는다. 마을에서 하우스를 하고 있는 3가구는 인근 마을의 작목반과 어울린다. 현재는 별다른 농외 소득자원이 없다. IMF 전에는 마을사람들이 공사현장

노가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동네에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3-4명 되어서 그들을 따라다니며 돈벌이를 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하우스 같은 시설재배도 거의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IMF 후에는 건설경기가 나빠져 건설 현장으로 품팔러 가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그래서 마을의 수입 또한 감소되었다. 부녀자들은 다른 마을 하우스 (부여의 수박밭이나 무밭 등)로 품 팔러 다니기도 한다. 품팔러 다니는 사람은 남녀 합해서 30여명이다. 남자의 경우 공사현장에 갔을 때, 일반 잡부의 경우 5만원이고 기술인부의 경우 8-10만원 정도를 받는다. 50-60대의 남성이 대부분이다. 여자의 경우 비닐하우스에 품팔러 가면 2만원 정도를 받으며 대개가 60-70대이다. 젊은 부인들(50대)은 품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홍산의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2명 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내수공업은 없다.

나. 청양군

1) 지리적 위치 및 도로여건

대박리는 버스가 하루에 3번 운행되는데,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서정리에 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서 그곳에 있는 가게에서 각종 물건을 배달시켜 온다. 송학리는 큰 도로를 따라 1.5km-2km 정도의 구간에 농가가 산재해 있다. 대박리에 비해 논이 비교적 적고 산에 밤나무를 많이 심었다. 시내버스가 하루에 3회 운행된다. 남천리는 대략 2-3km에 걸쳐 마을이 산재해 있다. 6개 반이 있는데, 마을간 거리가 매우 멀다. 아침 저녁 7시, 하루 2회 버스가 운행되는데 정산면에서 교통편이 가장 불편하기로 유명하다. 마을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20대이다. 역촌1리는 정산읍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평지마을로 마을 주변이 논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림 IV-2> 충남 청양군 정산면 일대 지도



2) 가구 현황 및 생활여건

대박리와 송학리는 마을 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전무하다. 두 마을 모두 30분 거리에 있는 면소재지인 서정리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한다. 보건소와 병원이 서정리에만 3곳인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병원에 전화하면 차가 와서 환자를 실어가고, 진료 후 집까지 데려다 준다. 정산면 서정리에는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청양군 전체에서 유일하게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등 비교적 교육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별다른 불편은 없다. 대박리에는 공동집하장이 있으며, 현재 정부 지원금으로 노인정을 준비중이다.

남천리는 공주시와 도로 하나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공주시의 시장이나 편의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정산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산읍(서정리)과는 매우 먼 거리에 있어 학생들도 정산면과 이웃해 있는 공주시 우성면으로 많이 통학한다. 정산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스쿨버스로 통학이 가능하긴 하지만 개인 당 한 달에 4-5만원의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구 부담이 많이 되는 편이다.

이에 비해 역촌리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서정리의 편의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데 용이하다.

3) 농업형태 및 소득원

대박리 : 논벼가 주 농사이고, 고추(하우스, 풋고추), 표고를 특작으로 하는 집이 다른 마을에 비해 많다. 담배농사를 짓는 가구는 5집이고, 축산하는 농가도 12-13가구 있다. 이 중에서 2가구는 대규모 축산농가라 할 수 있고, 10여 농가는 5마리 이하의 소규모로 기르고 있다. 농사 외에 ‘농촌여성 일감갹기 사업’으로 생활개선회와 부녀회가 함께 구기자차를 생산했다. 하지만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각종 투자금이 계속 필요하지만 참여자가 적어서 현재는 개인이 단독으로 하고 있다. 이외 여타의 농

외 소득 자원은 전무하다. 작목반으로는 고추, 표고 작목반이 있다. 다른 마을에 비해 논밭 소유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롭게 사는 편이다.

송학리 : 주로 논농사를 짓고, 특작으로 밤, 고추, 담배, 표고 등을 재배하지만 규모가 그리 크진 않으며 겸업을 하는 농가는 거의 없다. 부녀회에서 비누 만들기를 공동으로 했지만 소득이 적고 폐기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이밖에 일감깎기 사업 등 기타 농외 소득은 전무하다. 고추 작목반이 있으며 하우스 시설지원금으로 올해 1천만원을 받았다. 대박리와 비교해 볼 때, 논이나 밭 소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산지가 많아서 밤농사를 많이 하는 것이 특징이다.

남천리 : 주농사는 벼농사와 밤농사이다. 다른 마을에 비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밤농사로 돈을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지만, 설문조사 당시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밤을 따러 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설문조사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 고추, 한우, 표고, 느타리버섯 작목반이 있다. 젊은 농업인들이 버섯(표고), 밤 등의 특작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고령 가구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다. 남천리 전체 논 면적은 8만8천평이고, 밭은 6만평으로 가구당 평균 논면적은 1,443평이고 밭면적은 984평이다.

역촌 1리 : 주로 논농사를 짓고, 표고와 구기자를 몇 집에서 재배한다. 주변 땅이 거의 논이기 때문에 밭농사가 거의 없다. 특작하는 농가가 거의 없어서 작목반 또한 없다. 역촌 1리 안에 애경산업의 대규모 농공단지 있지만, 실제로 역촌리 주민 중에서 이곳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면사무소 직원에 의하면, 초기에는 애경산업에서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차츰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마을 여성들을 해고시키고 도시의 젊은 여성들을 고용하여 기숙사에 머물면서 일을 하도록 한다고 한

다.

3. 설문조사 결과

가. 농가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2.81명으로, 2000년도 「농어업총조사」에서의 평균가구원수인 2.91명에 비해 약간 적다. 동거자녀수는 0.64명으로 농가인구의 고령화 및 열악한 농촌의 교육 및 취업환경으로 인해 많은 자녀가 진학 및 취업을 위해 농촌을 떠나는 추이를 반영한다. 한편 농가의 평균 영농인구수는 2.05명이고 여성 영농인구수가 1.08명, 남성 영농인구수가 0.96명으로 여성 영농인구가 더 많아 영농인구의 여성화 추이를 뒷받침하고, 대부분의 농가가 부부단위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3> 가구원수, 동거 자녀수 및 영농인구수

가구원수		동거 자녀수		평균 영농인구수	
1명	27명 (9.4%)	0명	194명 (67.4%)	남자	0.96명
2명	147명 (51.0%)	1명	32명 (11.1%)	여자	1.08명
3명	40명 (13.9%)	2명	38명 (13.2%)	계	2.05명
4명	28명 (9.7%)	3명	20명 (6.9%)		
5명	29명 (10.1%)	4명	3명 (1.0%)		
6명 이상	17명 (5.9%)	5명	1명 (0.3%)		
계	288명 (100.0%)	계	288명 (100.0%)		
평균 가구원수 2.81명		평균 동거자녀수 0.64명			

농가가 소유한 농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V-4>와 같이 소유지가 없는 농가가 25가구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조사대상 농가에서 가장 보편적인 소유형태는 논과 밭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 전체가구의 41.7%가 이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논만을 소유한 농가가 30.6%이었고,

논, 밭, 과수원 등 복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가도 14.1%에 이르렀다.

농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총 소유면적은 가구당 3,641평이며, 총 경작면적은 5,029평으로 약 1,400평 정도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소유농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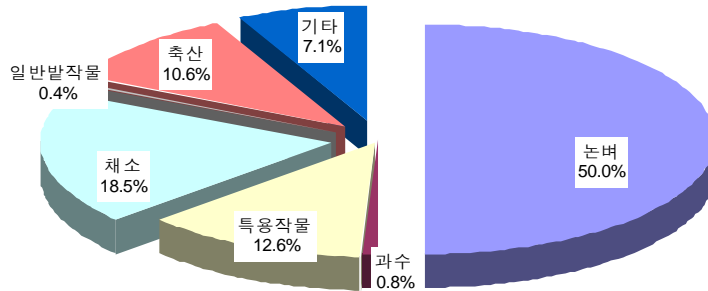
	빈도
소유지 없음	25명 (8.7%)
논	88명 (30.6%)
밭	14명 (4.9%)
논, 밭	120명 (41.7%)
논, 밭, 과수원, 임야	41명 (14.1%)
계	288명 (100.0%)

<표 IV-5> 소유면적과 경작면적

	총 소유면적	총 경작면적
없음	25명 (8.7%)	3명 (1.0%)
1000평 미만	33명 (11.5%)	24명 (8.3%)
1000평 ~ 2000평 미만	44명 (25.7%)	57명 (19.8%)
2000평 ~ 3000평 미만	45명 (15.6%)	50명 (17.4%)
3000평 ~ 5000평 미만	47명 (16.3%)	62명 (21.5%)
5000평 ~ 10000평 미만	37명 (12.8%)	51명 (17.7%)
10000평 이상	27명 (9.4%)	41명 (14.2%)
계	288명 (100.0%)	288명 (100.0%)
평균	3,641평	5,029평

2000년도에 가장 판매금액이 많은 주소득 작목을 조사한 결과, 논벼가구가 가장 많아 50.0%이었고, 그 다음으로 채소, 특용작물, 축산의 순이었다. 수도작 농가가 절반에 해당함으로써 향후 쌀시장 개방압력이 거세짐에 따른 대응전략의 모색이 매우 시급하다. 과수농가가 적은 것은 조사지역의 지대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그림 IV-3> 주소득 작목의 분포



주: 판매금액이 없거나 자급농 34명 제외

나. 여성농업인의 인적 자본

농가여성의 1/3이 60대이고, 평균연령이 57.4세로(배우자의 평균연령은 59.6세) 농업인력의 고령화 추이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40세 미만 여성은 전체의 11.1%에 그치고, 40대 연령층의 비중이 13.9%이다. 50세 이상이 전국 평균에서는 53.2%로 나타나는데(2000년 농어업총조사) 비해 본조사 대상지역에서는 74.9%로 본연구 대상지역은 수도작 중심의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을 보면 초졸 이하가 81.6%이고 중졸과 고졸이 각각 9.2%, 8.8%이다. 또한 조사지역내 여성은 모두 기혼여성인데, 이중 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18.8%이고 나머지 81.3%는 유배우 상태이다. 이로서 조사대상 지역내 대다수 여성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수도작 지역의 고령, 저학력 여성이며 1/5에 가까운 여성은 배우자가 사망한 고령노인임을 알 수 있다.

<표 IV-6> 농가여성과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농가여성	배우자
연령	30세 미만	7명 (2.4%)	1명 (0.4%)
	30세 ~ 39세	25명 (8.7%)	11명 (4.7%)
	40세 ~ 49세	40명 (13.9%)	29명 (12.4%)
	50세 ~ 59세	73명 (25.3%)	61명 (26.1%)
	60세 ~ 69세	96명 (33.3%)	86명 (36.8%)
	70세 이상	47명 (16.3%)	46명 (19.7%)
	계	288명 (100.0%)	234명 (100.0%)
평균연령		57.4세 (12.13)	59.6세 (11.06)
학력	초졸 이하	231명 (81.6%)	160명 (69.3%)
	중졸, 중퇴	26명 (9.2%)	35명 (15.2%)
	고졸, 고퇴	25명 (8.8%)	32명 (13.9%)
	전문대졸, 퇴	1명 (0.4%)	4명 (1.7%)
	계	283명 (100.0%)	231명 (100.0%)
혼인상태	배우자 무	54명 (18.8%)	
	배우자 유	234명 (81.3%)	
	계	288명 (100.0%)	

또한 여성농업인이 농사짓게 된 동기는 ‘남편과 결혼해서’, 혹은 ‘농촌 출신이어서’ 등 어쩔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경우가 93.3%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표 IV-7> 참조). 이러한 진입 과정은 여성농업인이 지역공동체에서나 농업경영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거나 농업관련 사항을 주도적으로 판단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것임을 예고한다. 앞으로도 농업조건이 변화가 없는 한 여성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농업후계세대의 단절을 의미하고 농업농촌의 유지를 위협할 것이므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농업·농촌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표 IV-7> 본인의 농업 종사 이유

	빈도
결혼을 하여	170명 (60.3%)
농촌출신이어서	93명 (33.0%)
기타	19명 (6.7%)
계	282명 (100.0%)

주: 비해당(농사 안지음) 6명 제외

특수한 인적자본의 하나인 기능의 습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 보유 여부를 질문한 결과, 자격증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13.9%에 그친다. 이들이 소유한 자격증의 종류를 보면 오토바이 운행 자격증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운전면허증과 원동기면허증이 각각 28.3%, 13.0%이었다. 간호조무사, 정보처리 자격증, 식당면허증,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각각 1명씩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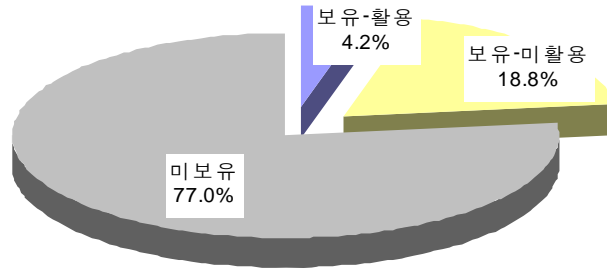
<표 IV-8> 자격증 보유 여부 및 보유 자격증 종류

		빈도
있다		40명 (13.9%)
	오토바이자격증	23명 (50.0%)
	운전면허증	13명 (28.3%)
	원동기면허증	6명 (13.0%)
	간호조무사	1명 (2.2%)
	정보처리, 워드	1명 (2.2%)
	식당면허증	1명 (2.2%)
	미용사자격증	1명 (2.2%)
	계 ¹⁾	46명 (100.0%)
없다		248명 (86.1%)
계		288명 (100.0%)

주: 복수응답 문항임

조사대상 농가중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가 총 66가구로 22.6%를 차지한다. 이중 여성농업인이 컴퓨터를 활용해 본 여성은 12명으로 전체 여성의 4.2%에 그친다. 어떤 용도로 컴퓨터를 활용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5명은 농업정보를 활용하는데 그리고 2명은 회계장부 등 영농경영관련 작업을 위해, 1명은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중 농업과 관련하여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해본 여성은 8명이었고, 홈페이지가 개설된 농가는 3가구에 그쳤다. 영농활동을 위한 정보화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수준은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4> 컴퓨터 보유 및 활용여부



주: 무응답 1명 제외

통계청이 2001년 3월에 실시한 정보화실태조사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컴퓨터 보유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53.8%로 2가구 중 1가구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주의 직업별로는 전문직(80.1%)과 사무직(75.0%)이 높은 반면, 농림어업직은 26.7%로 가장 낮아 전문관리직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세 이상 인구중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58.7%이나, 농림어업직은 11.2%에 그쳤고, 기타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시간 등의 측면에서도 다른 직군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같은 자료에서 여성의 정보화 수준은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²⁴⁾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격차가 영농활동의 생산성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여성농업인 대상 정보화 지원사업을 조속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표 IV-9> 2001년 가구주 직업별 정보화 격차 지표

24) 통계청(2001.12), 「2001년 정보화실태조사결과」

단위: %, 시간

	컴퓨터 보유 가구	컴퓨터 ¹⁾ 사용가능	인터넷 ¹⁾ 이용가능	인터넷 ²⁾ 이용시간	인터넷 ³⁾ 접속가구
전 국	53.8	58.7	52.9	10.2	74.1
전문관리	80.1	87.3	84.7	12.3	82.9
사무	75.0	89.6	86.9	13.5	74.6
서비스판매	54.7	44.2	38.9	9.1	75.1
농림어업	26.7	11.2	8.3	7.3	58.5
기능노무	54.4	40.5	34.4	8.6	69.4

주1) 6세이상 인구 비율 2) 일주일에 1시간이상 인터넷 이용자 시간 3) 컴퓨터 보유
가구중 비율

다. 여성농업인의 영농 특성

농가여성의 89.9%는 지난 1년간 3개월 이상 영농활동을 한 농업주종사자이다. 배우자의 경우 주종사비율은 94.9%로 더 높다. 1개월 이상 농업의 일에 종사한 여성은 35명으로 전체 여성의 12.2%를 차지한다. 이들 농외취업 여성중 46.9%는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고, 31.3%는 농업외 자영업에 종사하였다. 사무직 및 서비스직에 종사한 여성의 비율은 각각 9.4%이었고, 판매직 비율은 3.1%이었다. 배우자중 농외취업자 비율은 여성에 비해 떨어지지만, 취업내용은 거의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 여성의 90%는 농업주종사자이고 1개월 이상 농외취업자 비율은 12%로서 농가의 농업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10> 농가여성 및 배우자의 취업유형

		농가여성	배우자
영농기간(지난 1년)	계	287명 (100.0%)	234명 (100.0%)
	없음	17명 (5.9%)	10명 (4.3%)
	3개월 미만	12명 (4.2%)	2명 (0.9%)
	3개월 이상	258명 (89.9%)	222명 (94.9%)
농업외일	계	287명 (100.0%)	234명 (100.0%)
	1개월 미만	252명 (87.8%)	213명 (91.0%)
	1개월 이상	35명 (12.2%)	21명 (9.0%)
농업외 일	계	32명 (100.0%)	20명 (100.0%)
	자영업	10명 (31.3%)	7명 (35.0%)
	임금 - 생산직	15명 (46.9%)	11명 (55.0%)
	- 사무직	3명 (9.4%)	2명 (10.0%)
	- 서비스직	3명 (9.4%)	-
	- 판매직	1명 (3.1%)	-

농가 여성중 경영주는 13.5%인데 이들의 대다수는 고령이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경영주가 된 경우로서 진정한 경영주로 보기 어렵다. 남성의 경우 93.8%가 경영주이었고 경영주이면서 영농승계자인 경우가 2.7%로 여성과 정반대 그림을 그린다. 여성농업인의 절대 다수는 가구원으로서 농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 IV-11> 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경영주 및 영농승계자 여부

	농가여성	배우자
경영주	39명 (13.5%)	210명 (93.8%)
영농승계자	3명 (1.0%)	3명 (1.3%)
경영주이면서 영농승계자	-	6명 (2.7%)
둘다 아님	246명 (85.4%)	5명 (2.2%)
계	288명 (100.0%)	224명 (100.0%)

여성농업인의 평균 영농했수는 무려 36.2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추이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지표이다. 다른 직종에서의

근속년수와 평면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비농업부문에서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긴 근속년수이다. 비농업부문에서 근속년수는 증가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농업부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농업적이 단순생산직이 아니라 영농했수에 따라 숙련이 향상되는 전문직일 때 비로서 신규노동인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중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전체의 71.5%에 이르지만, 부녀회,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등에서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고, 작목반이나 농협과 같은 직능단체에서의 참여 정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총 288명의 여성중 작목반원 및 농협조합원인 여성의 비율이 각각 13.2%에 그친다. 농가여성은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만이 생산자단체에 참여하는 등 아직 대다수 여성은 농업생산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 네트워크시대에 돌입하면서 각종 생산, 판매, 유통관련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고, 정보가 곧 자산이 되고 있으므로 여성의 생산자 네트워크의 참여는 전략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표 IV-12> 여성 농업인의 영농했수와 단체참여 현황

영농했수		생산자조직등 단체활동	
10년 미만	19명 (6.8%)	작목반	38명 (18.4%)
10년 ~ 19년	26명 (9.3%)	농협조합원	38명 (18.4%)
20년 ~ 29년	37명 (13.2%)	부녀회	175명 (85.0%)
30년 ~ 39년	59명 (21.1%)	생활개선회	15명 (7.3%)
40년 ~ 49년	66명 (23.6%)	농가주부모임	5명 (2.4%)
50년 ~ 59년	60명 (21.4%)	기타	6명 (2.9%)
60년 이상	13명 (4.6%)		
계 ¹⁾	280명 (100.0%)	계 ²⁾	206명 (134.5%)
평균영농했수	36.2년	비가입 여성	82명

주: 1) 무응답 8명 제외, 2) 복수응답항목임.

향후 영농규모에 대해 63.0%는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축소하겠다는 여성의 비율이 21.8%로 확대하겠다는 여성비율(7.4%)을 능가한다.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의 대다수는 향후 농업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전망하지 않는다.

<표 IV-13> 추후 영농규모

	빈 도
현재 규모 유지	179명 (63.0%)
확대	21명 (7.4%)
축소	62명 (21.8%)
잘 모르겠다	22명 (7.7%)
계	284명 (100.0%)

주: 무응답 4명 제외

라. 농가소득 및 그 구성

농가소득은 크게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및 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농업외소득은 다시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으로 나뉜다. 조사대상 여성의 가구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모두 있다는 가구가 4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농업소득만 있다는 비율로 41.0%이다. 농업소득이 없고 농외소득만 있는 가구가 10.1%이었고, 이전수입만으로 생활하거나 아예 가구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5%, 2.7%이었다. 이번 조사대상자중 농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83.7%에 이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농촌은 크든 작든 농업소득이 여전히 중요한 소득원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소득만으로 영농생활비가 해결되지 않아 절반이상의 농가가(52.8%) 부업사업을 하거나, 품일 또는 농공단지에 취직하는 등 농외취업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25) 경북여성농민회연합(2000)이 경북 안동등 7개 시군 여성농민 188명을 대상으로 2000년 1-2월에 걸쳐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농업소득으로 농가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농가의 2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농가소득원 구성

	빈도
농업소득	118명 (41.0%)
농업소득 + 농외소득	123명 (42.7%)
농외소득	29명 (10.1%)
이전수입	10명 (3.5%)
소득 없음	8명 (2.7%)
계	288명 (100.0%)

이전수입만으로 생활하는 농가는 전체의 3.5%에 불과하지만, 이전수입이 있는 농가는 총 112가구로서 38.9%에 이른다. 이전수입원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있는 농가중 73.2%에 해당하는 농가가 자녀송금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자녀송금이 가장 보편적인 이전수입원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수당 및 교통비를 받는 가구가 20.5%, 연금 및 정부의 영농관련지원금이 각각 14.3%, 8.9%로 그 뒤를 잇는다.

<표 IV-21> 이전수입원

	빈도	
자녀송금	82 가구 (61.7%)	(73.2%)
정부 영농 지원금	10 가구 (7.5%)	(8.9%)
연금	16 가구 (12.0%)	(14.3%)
교통비, 노인수당	23 가구 (17.3%)	(20.5%)
기타	2 가구 (1.5%)	(1.8%)
계	133 가구 (100.0%)	

주: 복수응답 문항으로 두 번째 백분율은 112가구에 대한 비율임.

<그림 IV-5>는 2000년도 연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농가가 농업과 농외소득이 모두 있는 겸업농(123가구)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농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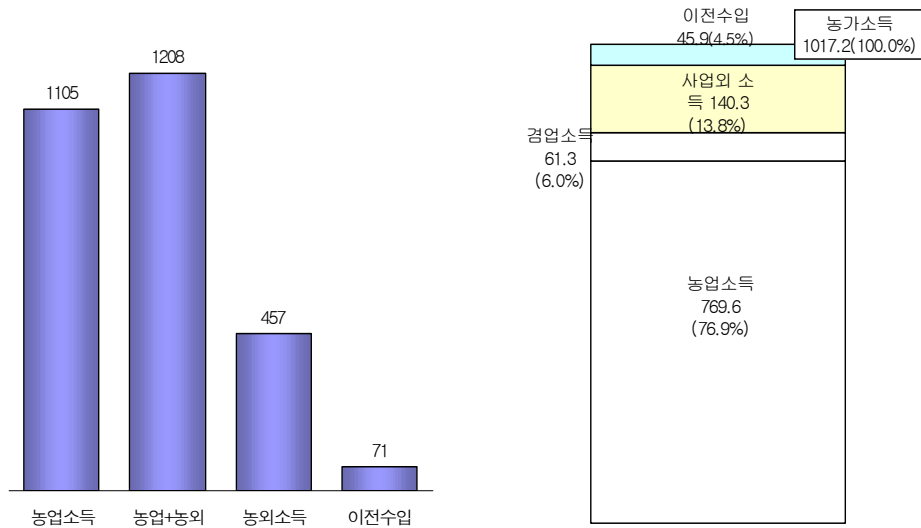
연소득은 1,208만원이었다. 농업소득이 주소득원인 전업농(118가구)의 소득은 1,105만원으로 그 다음이다. 농외소득만 있는 가구의 소득은 456만원으로 나타났고, 최저소득을 갖는 가구는 이전수입만 있는 경우로, 연평균 소득이 71만원에 그쳤다.

전체 조사대상가구(288가구)의 연소득은 평균 1,017.2만원으로 나타난다. 농가소득을 분해해보면, 농업소득이 769.6만원으로 총농가소득의 75.7%를 차지한다. 농외소득은 201.7만원으로 19.8%를 차지하고, 이전수입은 45.9만원으로 4.5%에 해당한다. 농외소득의 ⅔이상이 사업외 소득이었고, 나머지가 겸업소득이었다. 이로써 본 조사대상 가구는 농업소득이 총가구소득의 ⅔에 해당하는 아직은 전업농에 가까운 농가가 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가 농외소득인데, 농외소득에서는 자영업보다는 농외취업을 통한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결과는 향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몇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농가소득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므로 농가소득 제고방안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농업소득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겸업농의 가구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므로, 농가소득의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소득을 안정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농외소득원 발굴이 필요하며, 셋째, 다양한 농외소득원 중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원을 발굴하되 사업외 소득원의 발굴이 보다 현실성있다는 것이다.

<그림 IV-5> 농가소득원별 농가소득

<그림 IV-6> 연평균 농가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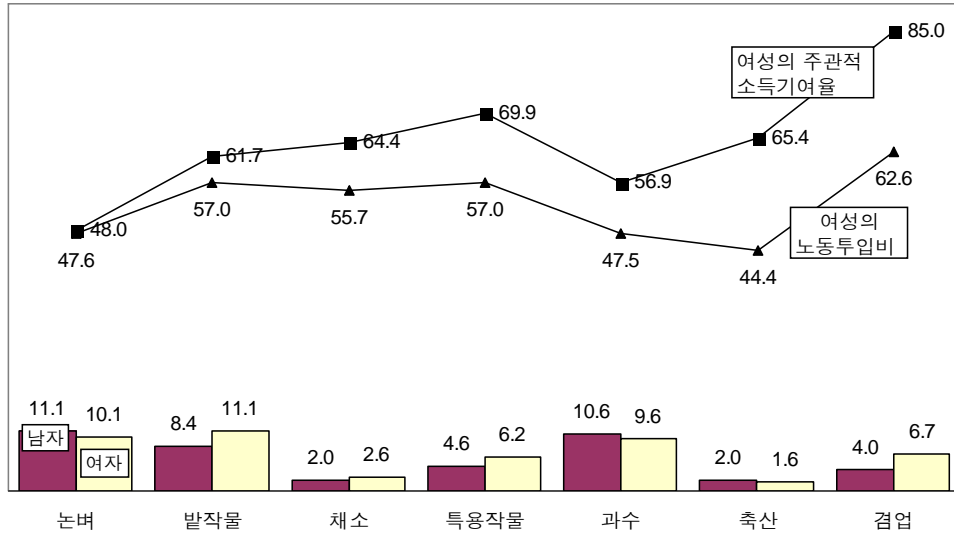


마. 여성농업인의 소득 및 그 구성

이제 여성농업인의 소득을 분석해볼 차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은 협업배우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영주가 되는 농업과 겸업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지 않지만, 중심인력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만큼, 여성농업인의 소득을 추정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농가경영체에서 가족종사자가 농가소득을 발생시키는데 기여한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투여한 노동의 시간 뿐 아니라 노동의 강도 및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투입시간수에 기초하였다. 추가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주관적 기여율도 조사하였다. 즉 작목별 소득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림 IV-7> 작목별 여성의 일일평균 노동투입시간수, 노동투입비

및 주관적 소득 기여율



주: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농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타 가구원의 노동투입시간수도 조사하였으나, 제반 영농활동이 대체로 부부노동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기타 가구원의 노동투입시간수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하였음.

<그림 IV-7>에서 농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작목경영과 겸업 각각에 대해 남성과 여성농업인의 노동투입시간수는 막대모양으로 나타난다. 여성농업인은 밭작물에 투여하는 노동시간이 일일평균 11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수도작, 과수, 특작의 순이었다. 남성은 수도작에 11시간을 투여하고, 그 다음으로 과수 및 밭작물의 순이었다. 농가별로 작물을 재배하는데 투여되는 총노동시간수에 대하여 여성농업인이 투여하는 시간의 비중은 선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50% 수준으로 여성이 명실상부하게 농업노동력의 절반임을 보여준다. 특히 밭작물, 특작 및 채소재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57% 수준에 이르러, 여성노동력이 주력인 작물임을 알 수 있다. 수도작, 과수, 축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47% 수준이었다. 여성은 농외 사업인 겸업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평균 6.7시간을 투여하는데 비해, 남성은 4.0시간으로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농작업과 겸업에서 여성역

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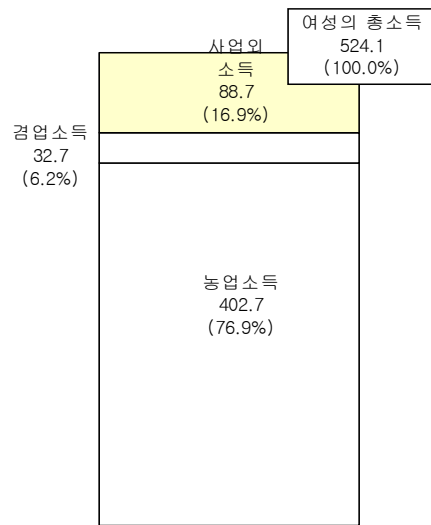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기여율은 이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림 IV-7>의 또 하나의 선그래프는 작목별 소득액을 질문한 후 이 소득액에 대해 본인의 기여율이 주관적으로 몇 %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다. 수도작에서만 노동시간에 비례한 기여율과 주관적 기여율이 근접할 뿐, 기타 작목에서는 주관적 기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축산, 겸업소득의 경우 양 수치간 괴리가 20% 포인트 수준으로, 여성농업인은 실제 투입하는 노동시간수 이상으로 본인의 기여도가 높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산출된 노동투입시간에 기초하여 여성농업인의 소득기여율을 추정하였다. 예컨대, 콩 재배 및 판매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소득은 여성농업인, 배우자, 기타 가구원이 콩재배에 투입한 1일 노동시간수를 조사하여 합계한 수, 여성농업인의 투입노동시간수를 나눔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소득 기여율을 추정한다. 이 여성농업인의 소득기여율을 콩재배로 인한 소득에 곱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농업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그런데 조사대상가구 중 남편이 없는 가구가 전체의 18.8%에 이르는데 이들 가구에서 여성의 노동기여는 거의 100%에 가까울 것이므로 전체 조사대상여성의 소득기여율은 <그림 IV-7>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여 추정된 여성농업인의 연평균 소득은 <그림 IV-8>과 같다. 여성농업인의 연소득은 524.1만원 수준이며, 이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76.9%를 차지하는 농업소득(402.7만원)이었고, 그 다음은 16.9%를 차지하는 사업외 소득(88.7만원)이었다. 연간 겸업소득은 32.7만원으로 총소득의 6.2%에 해당한다. <표 IV->은 가구소득중 여성농업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의 연소득은 524만원인데 이것은 총농가소득인 1,017만원의 51.5%에 해당한다. 개인에 따라 발생하기 보다는 가구별로 발생하는 이전수입을 제외한 가구소득중 차지하는 비율은 54%로 더 높아진다. 농가의 농업과 겸업소득의 절반 이상이(각각 52.3%, 53.3%) 여성농업인의 노동에 의해 발생하지만, 특히 농외취업으로 인한 소득중 여성이 버는 소득이 63.2%를 차지하여 여성은 주요한

농외소득원이기도 하였다.

<그림 IV-8> 여성농업인의 연평균 소득 및 구성



<표 IV-22> 가구소득, 여성농업인 소득 및 그 비중

	가구(만원, %)	본인(만원, %)	본인소득 비중(%)
농업소득	769.64 (75.7)	402.74 (76.9)	52.3
겸업소득	61.33 (6.0)	32.69 (6.2)	53.3
사업외의 소득	140.34 (13.8)	88.66 (16.9)	63.2
이전수입	45.92 (4.5)	-	-
가구/본인의 총 소득	1,017.23 (100.0)	524.08 (100.0)	51.5 ¹⁾ 54.0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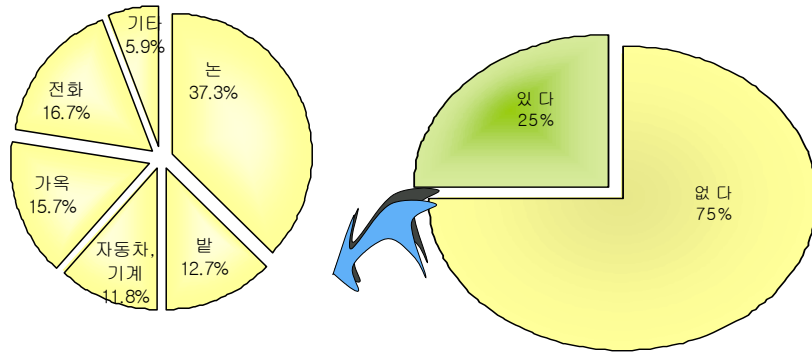
주: 1) 이전수입을 제외한 가구소득, 2) 이전수입을 포함시킨 가구소득 대비 본인소득의 비중임.

바. 여성농업인의 자산 소유 실태

여성농민의 재산소유 정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과 공동체에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명의의 자산이 있는 여성농업인이 <그림 IV-9>와 같이 전체의 23.3%인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신명의의 자산이 있는 여성중 논을 갖고 있는 여성이 37.3%로 가장 많았고, 전화기(16.7%), 가옥(15.7%), 밭(12.7%), 자동차 및 기계(11.8%)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자산의 종류별로 여성의 소유율을 보면, 논에 대해 자기명의의 소유지분이 있는 여성이 전체 여성중 13.2%로 자산 중에서 여성소유 비율이 유일하게 10%대를 넘었다(<그림 IV-10> 참조). 가옥이나 전화기를 소유한 여성은 5%대에 머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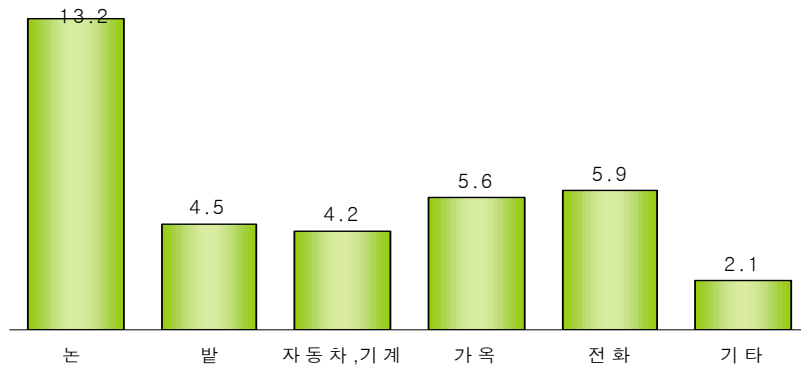
전술한 바 있는 경북여성농민회연합(2000)의 조사결과에서도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22.2%로 본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농민은 재산형성에서 ‘본인의 노력’ 2.2%, ‘본인이 더 많이 기여’ 2.8%, ‘본인과 남편의 기여도가 비슷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55.9%로 높았으며, ‘남편의 기여도가 더 크다’와 ‘전적으로 남편의 노력’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7.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농업생산 참여 및 재산형성 기여도와 실제 소유권간에는 그리 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보수적인 농촌사회에서의 장자상속과 같은 전통적 관행이 여성농민의 재산소유권을 제한, 배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결혼 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공동명의’나 ‘동등한 분할소유’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70.8%로 나타나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여성농업인의 의식을 바탕으로 할 때, 자신의 노동에 상응하는 재산소유권의 문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들의 전문인력화하는 동기부여로서도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9> 본인 명의 자산 소유 여부



주: 복수응답 문항임

<그림 IV-10> 자산종류별 여성농업인의 자산 소유 비율



4. 여성농업인의 소득추정 모형

가. 모형수립

여성농업인의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구명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소득모형’을 수립하여 추정하였다. 먼저 모형의 주요 변수는 학력, 연령, 직업 등 인적자본변수, 경작규모, 주 작목, 경영상 지위, 네트워크/조직

변수(법인, 생산자 조직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농촌가구의 빈곤요인을 추정한 시도로서 박순일(1995)은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의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선형 회귀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연령, 경지면적, 가구원수의 증대, 가구주의 학력, 연간노동시간, 비농업부문 종사자수의 순으로 농촌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가구의 빈곤정도(빈곤수준율)로서 빈곤선과 가구소득간 격차의 빈곤선에 대한 비율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농가의 소득과 소득결정요인간 관계가 선형이라고 가정하고, 가구특성과 개인특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함수식을 설정하여 OLS(Ordinary Least Square) 추정을 시도하였다.

$$Y(\text{House})_i = C_0 + C_1 \text{Age}_i + C_2 \text{Education}_i + C_3 \text{Type}_i + C_4 \text{Ln}(\text{Own})_i \\ + C_5 \text{Ln}(\text{Farmland})_i + C_6 \text{Nfarmer}_i + C_7 \text{Nworker}_i + e_i$$

여기서 $Y(\text{House})_i$ 는 i 농가의 연소득, Age 는 경영주의 연령, Education 은 학력, Type 은 영농형태로서 수도작인 경우 1인 더미변수이고, $\text{Ln}(\text{Own})$ 은 i 농가가 소유한 총경지면적(평), $\text{Ln}(\text{Farmland})$ 는 임차농지를 포함하여 i 농가가 경작하는 경지면적(평), Nfarmer 는 i 가구의 총영농인구수, Nworker 는 i 가구의 농외취업자수를 말한다.

농업소득 함수식은 위 식에서 총소유면적과 농외취업자수를 제하여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Y(\text{Agri})_i = C_0 + C_1 \text{Age}_i + C_2 \text{Education}_i + C_3 \text{Type}_i \\ + C_4 \text{Ln}(\text{Farmland})_i + C_5 \text{Nfarmer}_i + e_i$$

나. 추정결과

<표 IV-23>는 농가소득 함수식의 추정결과이다. 농가 경영주의 연령과 학력은 농가소득을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경영주가 젊을수록 농가의 소득은 높아지고 있어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추이가 농가의 빈곤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영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농가소득이 작아지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인데, 조사대상 남녀의 각각 70%, 80% 이상이 초졸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만큼, 저학력자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방향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가구변수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유경지면적과 경작면적, 그리고 영농인구수로 나타난다. 조사지역이 전형적인 수도작 지역으로서 소유면적과 경지면적은 농가소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농경지가 없거나, 경지규모가 영세한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도 농외취업 기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구의 총영농인구수도 농가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균 영농인구수가 2.05명으로 대부분의 농가는 부부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만큼, 배우자 일방의 부재는 농가소득을 상당히 줄인다.

영농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방향은 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농가의 주작목이 수도작일 때 농가소득은 감소하는 경향이 미약하게나마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WTO 추가협상에 따라 쌀가격 지지정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는 2002년부터는 좀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소득의 보장을 위해 환금성 작목, 소비자 수요에 맞는 기능성 식량의 재배 등으로 영농형태가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은 농작물재해보험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표 IV-24>는 농업소득의 추정결과인데, 농가소득 추정결과와 대동소이하다.

<표 IV-23> 농가소득 함수식과 추정 결과

변수명	변수 설명	B(t값)
Constant	상수	7.486(12.079)***
Age	경영주 연령 (세)	-0.042(-6.161)***
Education	경영주 학력(초졸=6, 중졸=9..)	-0.066(-2.121)*
Type	영농형태(수도작=1, 그외=0)	-0.044(-0.347)
Ln(Own)	소유경지면적의 로그값	0.600(3.163)***
Ln(Farmland)	총경작면적의 로그값	0.435(1.883)*
Nfarmer	영농인구수 (명)	0.332(3.381)***
Nworker	농외취업자수 (명)	0.072(0.428)
R2		0.453
Durbin-Watson		1.896

주: * p<0.1, ** p<0.05, *** p<0.01

<표 IV-24> 농업소득 함수식과 추정결과

변수명	변수 설명	B(t값)
Constant	상수	6.714(9.773)***
Age	경영주 연령 (세)	-0.041(-5.298)***
Education	경영주 학력(초졸=6, 중졸=9..)	-0.050(-1.399)
Type	영농형태(수도작=1, 그외=0)	-0.033(-0.227)
Ln(Farmland)	총경작면적의 로그값	1.217(7.351)***
Nfarmer	영농인구수 (명)	0.345(3.127)***
R2		0.467
Durbin-Watson		1.729

주: * p<0.1, ** p<0.05, *** p<0.01

여성농업인의 농업소득과 총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협업배우자로서 참가하는 여성의 농업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작목별로 가구의 총투입 노동시간수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투입노동시간수의 비율을 산정하여 작목별 농업소득에 여성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산출된 여성의 농업소득을 결정하는 주 요인은 <표 IV-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 연령 및 생산자조직의 가입여부

(작목반 또는 농협), 가구의 경작규모로 나타났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여성농업인의 고령화가 농업소득을 낮추는 요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농촌의 유지를 위해 일정한 규모의 중장년층의 확보가 선결과제라 하겠다.

이번 추정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여성의 생산자조직 가입여부가 농업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농협조합원과 작목반원인 여성농업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층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추정결과는 여성이 보조인력이 아니라 중심인력으로 참가하는 경우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여성농업인의 소득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할 정도로 여성의 전문인력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함과 농협과 작목반 등에 가입하고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리 하겠다.

여성농업인의 학력변수는 농가경영주의 학력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대와는 다른 방향을 나타냈다. 이는 여성의 80% 이상이 초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는 등 저학력자에 편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그 밖의 인적자본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방향은 일반적 기대와 일치한다. 즉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영농활동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여성이 경영주인 경우 미미하나마 여성의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26>은 여성의 연간 총소득함수식의 추정결과인데, <표 IV-25>의 추정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추가된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면, 농가의 주작목이 논벼일수록 여성의 연간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농업인과 농가의 소득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작 중심에서 영농형태가 다양화해져야 하며, 이 필요성은 쌀시장 개방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외취업 여부가 그다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조사지역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농가소득을 변화시킬 만큼 농외취업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것과 유관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25> 여성의 농업소득 함수식과 추정결과

변수명	변수 설명	B(t값)
Constant	상수	6.430(8.039)***
Age	본인의 연령 (세)	-0.437(-4.748)***
Education	본인의 학력(초졸=6, 중졸=9..)	-0.061(-1.127)
Dcerti	자격증 유무(자격증소지=1)	-0.060(-0.251)
Dcomputer	컴퓨터활용유무(활용=1)	0.210(0.527)
Dmember	생산자조직가입여부(가입=1)	0.549(3.074)***
Dhead	경영주 여부(경영주=1)	0.108(0.445)
Type	가구의 영농형태(수도작=1, 그외=0)	-0.055(-0.594)
Ln(Farmland)	총경작면적의 로그값	1.064(6.062)***
R2		0.380
Durbin-Watson		1.788

주: * p<0.1, ** p<0.05, *** p<0.01

<표 IV-26> 농가여성의 연간 소득 함수식과 추정결과

변수명	변수 설명	B(t값)
Constant	상수	6.613(8.604)***
Age	본인의 연령 (세)	-0.340(-4.052)***
Education	본인의 학력(초졸=6, 중졸=9..)	-0.021(-0.411)
Dcerti	자격증 유무(자격증소지=1)	0.259(1.121)
Dcomputer	컴퓨터활용유무(활용=1)	0.128(0.350)
Dmember	생산자조직가입여부(가입=1)	0.502(2.876)***
Offfarm	농업외 일 참여여부(참여=1)	-0.033(-0.135)
Dhead	경영주 여부(경영주=1)	0.174(0.789)
Type	가구의 영농형태(수도작=1, 그외=0)	-0.241(-2.502)**
Ln(Farmland)	총경작면적의 로그값	0.844(5.372)***
R2		0.344
Durbin-Watson		1.779

주: * p<0.1, ** p<0.05, *** p<0.01

V. 여성농업인의 소득에 관한 심층사례조사

제IV장에 이어 제V장도 본 연구가 직접 수행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농가여성의 소득제고의 한 축은 농업소득의 안정화이고 다른 한 축은 농외소득의 확보라는 견지에서,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접조사결과를 분석한다. 즉 과수·채소·화훼·축산농가 등에서 독자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농업 및 농외소득 내역과 농가소득 안정화 대책에 대한 의견 등을 분석하고 있다.

1. 조사방법론

설문조사방법은 비교적 규모가 큰 연구집단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가 가지고 있는 방법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통계와 논의에서 비가시화되고 가치가 부여되지 못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노동과 농가소득 기여도를 측정하기에는 몇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농가의 소득을 설문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객관적/통계화된 수치에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농사일은 똑같이 하더라도 추곡 수매나 판매를 남성농업인들이 대부분 알아서 하고, 모든 재산이 남성 소유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은 소득이나 전반적인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직접 자산관리를 하지 않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조사는 남성을 통한 보충조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둘째, 연구진들은 설문조사를 수행하면서 짧은 시간에 객관적 수치만을 물어보는 설문 방식이 답변자의 가치 판단에 따라 사실과는 반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러한 단점은 마을의 다른 여성들과 이야기를 함께 하는 상황을 이용하거나 이후 마을 이장을 통한 조사에서 보충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아가 본연구에서는 비교적 장시간을 투여함으로써 연구대상자와 면접자 간에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심층 면접을 추가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농사일이라는 것이 작업장이나 사무실에서 자기가 맡은 특정한 일을 단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수행자가 직접 자신의 노동시간과 그 내용에 대해 말한다 하더라도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정확히 산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밭농사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는 벼농사와 깨, 옥수수, 콩, 고추 등 밭농사를 동시에 짓기 때문에 하루에 단일 농작물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여하는지를 측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조사원들이 설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통해 볼 때 농촌의 노동, 특히 여성의 노동을 수치화한 설문지로만 담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여성의 노동은 단지 생산물을 현금으로 바꾸는 차원의 소득활동이 전부가 아니라 가사노동과 양육, 기타의 돌봄의 노동 또한 수행한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을 기존 경제의 소득 관점에서 평가하면 실제 여성들이 수행하는 수많은 노동량과 시간이 비가시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설문지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추가로 충청남·북도과 경기도 지역 여성농업인 14명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들 사례는 농촌진흥청, 도단위 농업기술원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특히 심층면접조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기여도를 파악하고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특작이나 일감갹기 사업 등으로 일정 정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문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내용과 시간이 설문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소득증대를 위해 여러 가지

품목재배를 시도하고 행정 당국과 만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의식이나 농정전반에 대한 자신 나름의 애로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심층사례 조사의 주요 내용은 <표 V-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1> 심층 사례 조사 내용

영역	주요내용
I. 인적사항, 가족관계	연령, 학력, 가족관계, 가족 취업현황
II. 취업경력	취업경력, 농업 취업 동기, 영농경력
III. 농업생산·유통현황	작부체계, 농업 경영규모, 노동력구성, 수확 및 판매 현황, 가공, 농업 채산성, 생활비, 부채
IV. 농업경영 참여 및 역할	농업노동, 농번기와 농한기의 일과, 경영결정, 정보 파악, 회계관리, 가사노동, 육·탁아, 자격증 및 컴퓨터 활용능력, 기타 농업기술교육 현황
V. 생산자조직 및 여성단체 활동	생산자조직·여성단체 가입여부, 활동의 적극성
VI. 농업만족도 및 전망	자신 명의의 자산 현황, 농업의 장단점,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직의사, 자녀의 영농승계에 대한 태도, 농정평가 및 제언

2. 심층사례 조사 결과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심층조사 대상여성들은 경영주인 남편이 농사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하는 일반적인 가족농 체제 하의 여성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면에서 많은 자율성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농촌여성 일감갓기사업’을 맡아서 해 나가고 있거나(이미경, 지순애, 전부용, 정경화, 김해원), 배우자 없이(혹은 배우자가 다른 직종에

종사) 독자경영을 하고 있어서(최용순, 오순임, 이옥심) 여성농업인 자신의 농가 소득 기여도나 자산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다수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생활개선회에서 임원을 맡거나, 대학의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연령대는 40대가 8명, 50대가 5명, 60대가 1명으로 전체 여성농업인의 평균 나이보다 젊은 편이다. 농촌여성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장년 여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도단위 농업기술원, 농협 등이 실시하는 ‘벤처농업 지원사업’이나 ‘농촌여성 일감갓기 사업’ 등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시설, 원예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첨단농업을 시도하는 것 또한 고령보다는 중장년 농업인 층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1) 전업 여성농업인 사례

이미경: 1992년도에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5가구가 사과 한과를 일감갓기 사업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2가구가 공동 관리, 운영한다. 처음 시작할 때 지원금이 너무 적어 마을회관을 전세내어 한과를 만들다가 95년도에 농촌지도소에 활성화 지원금을 요청하여 1500만원을 받고 40평 규모의 공장을 지었다. 하지만, 그것도 협소해서 98년도 다시 자금을 받고, 개인자금을 보태서 현재의 공장을(100평 규모) 지었다. 10년간 하다보니 농협이나 대기업 등 꾸준히 대규모 주문 판매가 확보되어 시장성은 있다고 보지만, 유사한 일감갓기 사업이 계속 지원되고 있어서 향후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 성수기인 봄가을에는 8-10명 정도로 마을 여성들을 고용하고, 명절 때는 20-30명을 고용한다. 논농사는 남편과 함께, 5천평 규모의 사과 과수원은 남편이, 그리고 한과 공장은 이미경이 전담하고 있다. 자신의 집에서 나는 사과를 가지고 한과에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 사과를 전량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밀가루나 깨 등의 공급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감갓기 사업이 농림

부 주관이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우리 농산물로 써야 하지만, 국산 밀가루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 구하기도 어렵고 수입산보다 가격이 5배나 높기 때문에 밀가루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고, 깨 등 기타 농산물에서도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순애: 남편과 함께 8500평 규모의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일감갓기 사업으로 과즙·사슴 육즙 가공 판매를 또 다른 가구원과 함께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일감갓기 사업을 개인적으로 신청하려고 하였지만, 공동 경영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다른 가구원과 함께 2,400만원씩 5,000여 만원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영과 소득 분배에 있어서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 어려움이 크다. 동업자가 엘크(사슴)를 키우고 있어 자신의 농가에서 나온 사과로 과즙을, 동업자의 집에서 사슴 육즙을 제공받아 경제적 이익이 크다. 인삼같은 한약재들도 근방 생산자에서 직접 구입하고 있다. 농협 차원에서 이러한 생산물 유통구조를 마련해 주면 농민끼리 저렴한 가격으로 가공 재료를 사고 팔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농사일도 힘들지만 지순애의 경우에는 몸을 전혀 운신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고3인 딸, 고1 아들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과중한 노동에 지쳐있었다. 과즙, 육즙을 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약 재료 연구도 필요하고 한의사 자격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농사일과 집안일, 가족원 돌보기 등 과중한 노동으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이영란: 생활개선회 간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3만평 규모의 토지에 오리농장과 사과, 배, 복숭아 과수원을 한다. 오리 농장 하나만으로도 일년에 8천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만큼 노동 강도가 매우 세다. 특히 남편은 트랙터 등의 농사 기계를 가지고 다른 집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농사일은 거의 이 여성이 담당한다. 이 집은 운도 많이 따라서 처음 농촌 생활은 소를 기르면서 시작했는데 소 값 파동이 나기 직전 한창 값이 높을 때 소를 팔아 그것으로 땅을 사고, 땅 옆으로 길이나면서 땅값이 높아져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자기 자금이 있어서 그렇

기도 하지만, 농림부의 지원을 받으면 원하는 대로 돈을 쓰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에 얽매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농사일 외에도 환경비누 만들어 팔기, 양말이나 각종 농사용품을 팔아 남는 돈으로 생활개선회 활동비에 쓰고 있는데, 이에 소용되는 활동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생활개선회 활동으로 농촌 여성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리더쉽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즐겁다고 하였다. 지금은 남편이 외부 활동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외부 활동을 전혀 못하게 했을 때는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민정임: 현재 논 30마지기, 고추 3천평, 담배 4천평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지만 실제 소유 토지는 1천평이고 나머지는 임대토지 이다. 담배를 딸 때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15명 규모의 일꾼들의 아침, 새참, 점심, 저녁을 준비해주고 틈틈이 농사와 가사일을 하는데, 12월 한 달만 조금 한가할 뿐 일년 내내 거의 하루 15시간 내외 노동한다. 하지만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득은 하나도 없고, 용돈을 남편에게 따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못했다.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서 규모를 줄이고 싶지만, 남편이 계속 같은 규모의 농사를 고집하여 어쩔 수 없이 농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역시 생활개선회 간부이기 때문에 도시 여성들과 만날 기회도 많고, 타지역 여성 간부들과 연계망이 있어 고추를 전량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김정수: 결혼한 지 23년이 되었는데, 시아버지 때부터 재배하던 방울토마토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 방울토마토를 시작한 거의 첫 세대이며 7천평 모두에 특수 하우스로 재배하고 있다. 최근 폭우, 폭설 등 기후 이상으로 하우스 관리와 유지가 힘들어서 작물을 바꿀 고민도 하지만 시설에 들인 돈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부채를 조금씩 갚아서 거의 부채가 없었는데, 작년(2000년) 겨울에 하우스가 무너져서 새로 공사하는데 든 1억 5천만원을 부채로 떠 안게 되었다. 김정수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이다. 채소라는 것이 빨리 신선하게 배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추나 과일처럼 2-3일의 배달 여유가 있는 직거래 택배를 방식으로 채택하기 힘들고, 채소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한다 해도 백화점에서 판매장소를 안주거나 조금 이익이 남으면 대기업에서 곧 따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매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밖에도 시부모님과 아들 형제, 남편 등 대가족 속에서 자신의 발언권이 거의 없는 것도 불만으로 지적되었다. 가령, 자신의 계산이 더 정확하고 시세가 좋은 시간과 장소에 물건을 대야 한다고 주장해도 남편이 일단 결정하면 아무런 발언권도 없기 때문에 소득에 손해를 볼 때도 있다고 한다.

박영숙: 고추 3천평, 대추 1,500평을 경작하는데 작년에 빗자루병으로 대추나무를 많이 캐내어서 8백평에 5백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 고추 농사는 친인척을 통해 전량 직거래로 판매하는데, 근당 5000원-5500원 정도의 값을 받는다. 4명의 자녀가 모두 성장하여 서울 등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 규모는 확장하지 못하지만 몸이 허락하는 만큼 꾸준히 현재와 같은 규모를 유지하려고 2천만원을 들여 고추건조기, 고추를 말리고 씻는 기계 등을 새로 장만하였다. 1968년도에 결혼한 이후 용자를 받아 73년도에 경운기를 사고 조금씩 토지를 확장해 갔는데, 20년 상환의 용자금은 현재 다 상환하였다. 중학교 때 정미소에서 손 절단 사고를 당한 남편과 동등한 농사일에 가사노동까지도 담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다. 그나마 남편 명의 외의 자산은 아들 앞으로 해놨는데, 딸들은 시집을 갈 것이기 때문에 아들 앞으로 해 놓았다고 한다.

<표 V-2> 전업 여성농업인의 특성 및 2000년 농업소득

	이름	나이	학력	재배 작물 및 식부면적	경영여부	농업소득	농외 소득	활동단체
1	이영란	43	고졸	복숭아, 배, 사과(3만평), 오리	부부경영	오리농장 한해 순수익 8천만원	없음	생활개선회
2	민정임	47	중졸	고추(3천평), 담배(4천평)	부부경영	총소득 5천만원, 순수입 2천만원	없음	생개회
3	김정수	51	고졸	방울토마토, 야채 (하우스시설 7천평)	부부경영	순수입 6천만원	없음	작목반, 농협주부대학, 생개회
4	박영숙	54	고졸	고추(3천평), 대추(1천5백평)	부부경영	남편이 관리하여 모름	없음	생개회
5	이복자	41	고졸	화훼(장미) (1천4백평)	부부경영	매출액 1억, 순수입 3천만원	없음	영농후계자
6	최용순	57	국졸	벼(12,000평), 김장무·배추· 감자 (밭 7,000평)	독자경영 (남편사망, 아들이 보조)	매출액 3천만원, 순수입 천만원	없음	생개회, 전여농
7	오순임	54	국졸	벼(3,000평), 한우(14마리), 표고(13,000분),	독자경영 (남편사망)	벼 830만원, 표고 1300만원, 한우 700만원	없음	생개회, 표고작목반, 한우발전협회
8	이옥심	42	고졸	벼(1,000평), 갯잎(600평)	독자경영 (남편농외 취업)	갯잎 1800만원	없음	영농후계자, 생개회
9	박민자	40	고졸	포도(3,500평: 500평 임대)	부부경영	매출액 6-7천만원 순수입 3천만원	없음	전여농

이복자: 본연구 사례 중 유일하게 경기도 금촌지역에 있을 뿐 아니라 농사 경력도 제일 짧은 도시 귀농 여성이다. 1998년 1월 남편이 IMF여파로 실직한 후 4개월 만인 5월에 현재 지역으로 이주하여 이미 장미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원을 인수하여 농사를 시작하였다. 귀농을 빨리 결정하게 된 이유로는 본인이 꽃을 좋아하고, 도매 꽃 판매를 하는 친구를 보면서 땅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식도 경험도 없이 농사를 시작하

였다. 처음에 남편의 퇴직금과 아파트 판매한 돈으로 아무런 부채도 없이 농사일을 시작하였지만, 그 해 8월 첫 수해를 비롯해서 3번의 물 피해를 당한 후 1억 5천만원의 농가 부채를 지게 되었다. 처음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으로 인한 몸이 힘든 것 보다 농촌 사람들의 타지역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 지역행정의 인맥, 자연 위주의 처리에 맘 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3년 정도 생활을 같이 하면서 차츰 얼굴도 익히고 교류도 하여 농촌 생활에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이 농가의 특징은 농작물의 생산 뿐 아니라 판매와 유통, 포장 등 세부적인 항목에까지 부부가 함께 신경 쓰면서 시장 조사를 하고 해외 화훼 경향도 살피는 등 끊임없는 연구를 한다는데 있다.

2) 겸업 여성농업인 사례

전부용: 1994년, 농촌지도소의 권유를 받고 8명이 공동으로 구기자한과를 일감갓기 사업으로 시작했으며 현재는 5인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공장도 없어서 비닐하우스에서 한과를 튀기고,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리저리 한과를 지고 다니며 팔아야 하는 등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금은 5-7명이 상시 고용되어 있고, 명절처럼 일손이 바쁠 때는 40-50명이 일해야 할 정도이고 연간 매출이 6억에 달하는 규모 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장 초기 설비 투자비로 조합원 개인당 1-2천만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다. 공장의 모든 사람들이 8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일한다. 거의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위험하고 5인 공동사업이라서 힘든 점도 많으며, 재료값이 자꾸 올라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구기자를 전량 구매하는 사업이고, 별다른 부업거리가 없는 마을 내 젊은 여성들에게 일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랑스럽다고 한다. 현재 시어머니, 우체국 공무원인 남편과 남매와 함께 살고 있으며, 논농사를 1,700평정도 짓고 있다.

<표 V-3> 겸업 여성농업인의 특성 및 2000년도 농업·농외소득

	이름	나이	학력	재배 작물 및 식부면적	경영여부	농업소득	농외소득	활동 단체
1	전부용	41	고졸	벼(1,700평)	부부경영	벼농사는 자급자족	일감갓기사업(구기 자 한과), 가구당 배당금 3천만원	-
2	정경화	65	국졸	벼(15,000평)	독자경영 (남편사망)	아들이 관리하여 모름	일감갓기사업(메주 공장), 가구당 배당금 400-500만원	생개회
3	이미경	51	고졸	벼, 사과(과수 원 5천평)	부부경영	남편이 관리하여 모름	일감갓기사업(한과) 매출 3억, 수익 8천만원, 가구당 배당금 4천만원	생개회
4	지순애	45	고졸	사과(8천5 백평)	부부경영	남편이 관리하여 모름	일감갓기사업(과즙, 사슴육골죽), 월 순수입 4백만원, 가구당 배당금 2백만원	영농후 계자, 생개회
5	김해원	41	고졸	벼(6,000평), 인삼(1,000 평)	부부경영	벼농사 순수입 2천만원	일감갓기사업(인삼 한과), 매출 2억, 순수입 8천만원	생개회

정경화: 1996년도에 전통 장류 만들기를 일감갓기 사업으로 받아서 '97년부터 3가구 공동으로 메주, 된장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 생산량에 욕심부리지 않고 딱 그 한 해에 팔 만큼만 만들어서 전량 판매한다. 그래서 가끔씩 생산량이 부족하기도 하다. 군청이나 농촌지도소에서 판로를 확보해 주고 홍보도 해 주기 때문에 판매에 큰 어려움은 없다. 보통 11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1월에 메주를 생산하고 7-9월에 된장을 내보낸다. 한참 바쁠 때는 일당 2만원을 주고 10여명의 사람을 고용해서 일한다. 재료는 모두 인근지역에서 나는 국산콩을 쓰고 있는데 올해는 콩값이 많이 오르고(작년에 비해 2배 가량 폭등), 인근에 전통 장류를 개인적으로 생산하는 가구가 늘어나서 올해는 작년 배당금 450만

원보다 훨씬 줄어들 것 같다. 현재 겨울철 부업거리로는 안성맞춤이어서 규모를 확장하고 싶다. 그래서 정부의 추가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또한 아들과 함께 만오천평의 논농사를 짓고 있다.

최용순: 현재 임대한 논 12,000평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고, 역시 임대한 밭 7,000평에서 봄감자와 가을 김장무를 하고 있다. 지금은 3교대로 직장을 다니는 아들이 힘든 일(트랙터로 밭갈기, 퇴비내기, 비닐 씌워주기 등)을 도와주고 있고, 가끔씩 품을 사기도 하지만, 본인이 농사를 전담하는 셈이다. 가장 바쁠 때는 밭에는 김장무나 감자를 심을 때, 그리고 쉼을 때, 복토(수확 후 땅을 갈아엎는 것)할 때이다. 이 지역은 경지정리도 안 되어 있으며 매해 수해지역으로 올 초에도 수해를 입어 아직도 논에 모래가 텅굴고 있다. 작년 벼 총 판매액이 3천여 만원이었는데, 이 중 임대료 1천여 만원과 농약값, 인건비 등을 제하고 1천만원 정도 남는다. 게다가 올해는 감자가 가물어서 수확량이 줄고 밭떼기로 한 계약이 파기되어서 겨우 200만원-300만원 정도 남았다. 농사지으면서 가장 힘든 점은 판로확보이며, 겨울 농한기 부업이 절실하다. 근처에 농공단지가 들어와 있지만 상시고용만 쓰기 때문에 모두 외지 사람이 취업해 있고, 지역 여성농업인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오순임: 현재 논 3천평에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한우 14마리, 표고버섯 1만3천 분을 키우고 있다. 표고버섯의 경우 평균 넣은 나무를 3천-3천5백원 정도에 사 와서 재배하는데, 첫해는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고 두 번째 해의 수확이 가장 좋다. 그 다음 3년이 되면 점점 줄어서 퇴목을 시켜야 한다. 작년에는 표고버섯 재배를 통해 1,300만원 수익을 올렸다. 표고버섯은 건조재배기 설치까지 합쳐서 초기투자비로 3,700만원이 들었으며 전액 자비로 충당했다. 한우는 요즘 마리당 350만원하고, 처음 산 값이랑 사육비 등을 제하면 1년 키운 현재 마리당 150만원 정도가 남는다. 한우는 축사 만들 때 5,000만원의 자금을 받아서 시작한 사람에게서 작년 인수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우 사육이 가장 많은 이윤이 남는다. 군에서 지원금이나 융

자를 받고 싶지만 생활개선회 임원을 하고 있는 현재는 직책을 이용한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보통 여자들이 잘하지 못하는 소 예방주사 놓기나 새끼 받기 등도 직접 하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농업에 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회·단체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협 여성이사까지 해 볼 생각이 있다. 현재 아들은 다른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혼자 살고 있다.

이옥심: 현재 논 1,000평과 깻잎 밭 600평(비닐하우스)을 경작하고 있으며 남편은 농협의 수송직에 취직해 있고, 농사는 이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 남편은 원래 영농후계자이고 적극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나 '84년 소 파동 이후 빚을 많이 지고 농사에 흥미를 잃었다. 벼농사는 자가소비를 하고 깻잎농사가 주 소득원이다. 이 지역은 깻잎 농사를 짓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로 깻잎이 유명한 지역으로 유달리 향이 좋고 뒷면이 보랏빛인 상등품 깻잎을 생산해 낸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2,400만원 정도 매출이 있었다. 깻잎농사는 모두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인건비이고, 비료값과 박스 값은 모두 합쳐 500만원이 채 들지 않는다. 깻잎농사는 잘 지으면 평당 9만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 땅이 모두 이 여성 명의로 되어 있어 깻잎농사로부터 나오는 소득 또한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간다. 시어머니가 고생해서 일군 땅을 농사도 짓지 않는 아들보다는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이 여성 앞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93년 당시 농협에서 주최한 농촌지도자 교육에 다녀오고 나서 “내가 밭농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래서 '94년 여성지도자로 선정되었고, 영농후계자도 되었다. 한국여성농업인회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는 시어머니, 남편, 남매와 살고 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이 영농후계자라는 점에 끌렸고, 지금도 돈 버는 것보다 심고 가꾸는 자체에 재미를 느낀다.

김해원: 95년부터 농촌지도소에서 사업보조금으로 800만원을 받고, 생활개선회 회원 등을 중심으로 3가구가 인삼한과를 시작했으나 이후 타산이 안

맞을 것이라며 2가구가 탈퇴하는 바람이 단독으로 경영하고 있다. 한과공장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고, 공장부지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현재 매출은 연간 2억 정도이다. 모두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매출 중 60%가 인건비로 나가고 그 중 40% 가까이가 순수익이다. 현재 마을 여성 13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일하고 명절 때는 30명 정도가 일하며 일당은 2만원이다. 명절 한 달 전이 가장 바쁠 때인데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새벽 6시에 와서 저녁 7시까지 일하고, 야근도 10시 30분 정도까지 한다. 야근수당은 만원이다. 남편은 6,000평의 논에서 벼농사를 짓고(물론 자신도 50%는 한다) 한과공장에 운송부문을 맡아한다. 남편은 그다지 바쁘지 않고, 많은 시간을 강가에 나가 거닐거나 시를 짓거나 하면서 보낸다. 남편의 수입은 연간 2,000만원 정도이다. 대중매체에 많이 출연하고 군에서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홍보나 판로에 어려움은 없다.

박민자: 남편이 직장 다니다가 포도를 전문적으로 지은 지 9년째다. 논농사는 짓지 않고, 비닐하우스에서 포도농사를 3,500평 짓는다. 이중 2,500평이 임대한 땅이다(임대료는 백평당 80kg 쌀 한 가마니다). 요즘은 농사도 전문적으로 대규모로 해야 이익이 남기 때문이다. 포도농사는 수확이 끝나고 이듬해 농사를 위해 거름주기 등 11월에 다시 포도농사를 시작한다. 가장 바쁠 때는 포도 눈이 나오기 시작하는 4월부터 수확철인 8월까지로 이 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남동생 결혼식에도 못 갔다. 너무 바쁘면 일꾼을 사서 하지만 대부분은 부부 두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새벽 5시나 6시쯤 날이 밝으면 일을 시작해서 깜깜해야 집에 들어간다. 연간 매출은 6,000만원 정도인데, 비닐값, 박스포장비, 농약값, 퇴비, 인건비 등을 빼면 얼추 50% 정도 남는다. 그리고 초기 시설투자비를 위해 1억 정도를 대출받았다. 전년도 여성농업인회 면 회장이었다.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포도농업에 대한 전문기술 정보의 부족이고, 대부분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하기 때문에 판로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현재 시어머니, 남편, 남매와 살고 있다.

나. 영농 형태별 농가소득 및 여성농업인 소득

심층 면접 연구를 위해 만난 여성 농업인들은 과수, 오리농장, 고추, 담배, 인삼, 포도, 깻잎, 표고, 한우 등의 특작을 주작목으로 하고 있었고, 일감갓기 사업 등의 농외 사업도 경영하고 있었다(<표 V-2>, <표 V-3>참조).

배우자 없이 독자경영을 하는 경우를 제외했을 때, ‘농촌여성 일감갓기 사업’과 부부 공동 경작을 하는 농가 사이에는 여성의 기여도와 소득과약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감갓기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남편과 함께 과수나 인삼, 벼농사 등의 농사일에도 참여하지만, 자신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그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 (이후 사용처와는 별도로) 여성 자산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이 농가소득에 어느 정도를 기여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가 소득에서 여성이 얼마만큼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경우 남편들이 경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농가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감갓기 사업을 하는 경우 자신이 농사일에 참여하면서도 일감갓기 사업 경영이 너무 바빠 나머지 농사일의 경제권은 남편이 담당하고 있어서 역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기도 했다.

- 이미경-사과 매출이 얼마인지는 내가 관리를 안해서 모른다.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하지 나는 신경쓰지 않는다.
- 민정임-작년에 담배에서 얼마 했는지 모르겠다.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하고 나는 용돈도 타서 쓴다.

이밖에도 여성들은 농사일과 함께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고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경우 노동의 강도는 훨씬 컸는데, 이러한 노동은 소득 산출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사에서 올린 소득의 절반만을 여성농업인의 소득이라고 산정하는 것은 실제 기여분에 비해 낮은 평가이다. 따라서 농가 소득에서의 여성 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고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의 기여도라는 문제를 별도로 하고 농가의 전체소득을 살펴본다면 1000만원 이하가 1명, 1000만원대가 2명, 2000만원대가 2명, 3천만원대가 3명, 4천만원대가 1명, 8천만원대가 2명이며, 여성 자신이 농가의 전체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3명이다.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자산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비교한다면 이들은 내부에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이 충남농업기술원과 각 군 단위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소개받은 ‘추천할 만한 여성농업인’이라는 점에서 연유하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의 상황이나 요구를 전체 여성농업인의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으로 농업에 임하고 있는 여성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이후 일반 여성농업인의 참여와 능동적인 농업경영 그리고 이를 통한 농가소득제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마련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의 소득을 파악함에 있어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이들의 연간 순수익의 액면가가 도시에서의 삶과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언급한 연간 순수익은 총 판매금액에서 가변비용만을 제한 부분으로, 이것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순소득이라기 보다는 이 소득에 전제되어 있는 초기 시설투자 등 고정비용에 대한 농가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들 여성농업인들의 소득상황과 소득증대의 요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감갓기 사업으로 한과 만들기를 하고 있는 이미경의 경우, 2000년도 한해 매출액이 3억 이상이고 순수익만 8천만원이었다(2가구가 공동으로 운영).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사과농장과 벼농사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농가의 소득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감갓기 사업으로 인삼한과 공장을 독자경영하고 있는 김해원 또한 연간 순수익이 8천만원에 이른다. 이 여성의 경우는 남편 소유의 논 6천평과 인삼밭 1천평에서 인삼한과에 주재료인 쌀과 인삼을 저가에 구입하고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오리농장을 하고 있는 이영란의 경우도 오리농장으로부터 산출되는 연간 순수익이 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5인이 조합형태로 구기자 한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부용의 연간 배당금은 3-4천만원 정도이다.

또 다른 일감갓기 사업 종사자인 지순애는 과즙과 사슴육즙을 가공·판매하는데 한달 순수익이 2백만원이고, 역시 남편과 함께 하는 과수농장의 소득을 합산한다면 그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97년부터 메주, 된장 공장을 3가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경화의 경우는 다른 사례들에 비해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연소득 또한 4-5백만원 수준으로 타 사례들에 비해 적다.

특작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일감갓기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보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게 나타났다(이영란은 제외).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일감갓기 사업은 농산물을 일정한 형태를 갖춘 공산품의 형태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농산물보다 저장, 유통에 유리하여 기후와 수확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에 비해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요인을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감갓기 사업의 경우 수요에 비해 한과나 과즙을 생산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아 비교적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농가는 일정한 소비시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사업을 늘릴 계획 중인데, 이들은 고소득을 올린다는 소문이 나서 유사 업종이 아무런 정책적 고려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때 농업인간의 갈등과 소득 저하가 나타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리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 역시 현재로서는 오리고기 생산 전문 업체에 전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오리 농가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균형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즉 수급조절 문제, 새 item 개발, niche market의 발굴

둘째,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되어 있다. 판로확보 방법은 크게 3가지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일감갓기 사업의 경우, 지역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의 대표적인 여성 소득증대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군에서 홍보나 판로개척 등의 부문에 대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과즙을 생산하고 있는 지순애의 경우는 9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여 95년 이전부터 사업을 해 온 다른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개인적으로 판로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미경, 전부용, 정경화, 김해원은 별 어려움이 없다.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 특산물이라서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로 일년 생산량이 전량 판매되는 경우이다. 깻잎농사를 하는 이옥심의 경우는 농협에서 하루에 한번씩 농협 차가 와서 싣고 가고 판매액은 통장으로 자동입금되기 때문에 판로가 아주 잘 개발되어 있는 경우다.

세 번째는 개인적 관계망을 통한 판로확보이다. 고추를 대량으로 경작하는 민정임, 박영숙의 경우, 서울에 사는 친인척이나 교회 등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매년 고추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것이 농가 수입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었다. 이들 가구는 장기간에 걸친 판로의 확보를 통해 판매의 고민 없이 질 좋은 고추 생산에 전념하였고, 이렇게 쌓은 신용으로 부족한 양은 주변에서 구해서 판매를 하였다. 그러나 친분을 이용한 직거래의 경우 모든 농가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이의 대안으로 고안된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 판매망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사례들은 모두 판로확보가 농업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농간 직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수요 조사결과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농작물의 질적 개선, 유통·판매에 대한 농업인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다. 화훼농가인 이복자의 경우 1998년에 귀농하여 3년만에 총 매

출액 1억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이것은 장미의 품종개량과 유통·판매에 대한 초보 농업인의 부단한 연구의 결과였다. 부부가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귀농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자체적으로 장미 품종 연구를 하여 농장 토질에 제일 적합한 장미를 발굴해내고, 생산에만 신경 쓰는 다른 농가와는 달리 포장과 꽃바구니 개발 등에도 신경을 써서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동일 품질임에도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전문적으로 포도농사만을 하고 있는 박민자의 경우 기술정보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교육을 실시하지만 포도가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들은 개인적으로 포도연구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옥천, 입장, 영동, 천안 등지를 찾아다니며 좋은 품질의 포도, 저농약 유기물 재배 등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배워 오는 데 열심이다. 이러한 특징은 물론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언급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례에서도 공통적이다.

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수요

1) 농가소득 안정과 직결되는 정책 수요

가) 농업인 중심의 정책

모든 정책에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 자세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이 정책 대상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농업은 경제의 1차적 기반 사업인 만큼 더욱 많은 투자와 고려가 있어야 하지만 현대화 산업화 물결 속에서 가장 낙후되고 원시적 노동으로 치부되기 일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농사에 전념하는 농민들조차 자신의 노력에 대해 자신없어 하거나,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고(이미징), 이것은 그들의 향후 농업 계획이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김정

수의 경우 생활개선회 간부로 유럽지역 견학을 갔다온 경험이 있는데, 유럽 농업 행정에서 농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태도에서 감동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농민을 우대하는 정책을 한다면 농사짓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미경-농사를 짓겠다는 자녀가 없다. 하나는 물려받아야 할텐데, 한다고 해도 농사짓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애가 불쌍하다.
- 김정수-유럽은 우리나라하고 모든 게 다르다. 말하자면 모든 정책이 농민을 위하고, 거기선 제일 좋은 직업도 농민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고, 농사도 아무나 농사를 짓는게 아니고 농민학교 졸업하고 농가에 들어가서 몇 년 경험을 쌓고 그래야 자격증이 주어져서 농사를 짓지 아무나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든 말하자면 직불제기 때문에 농민이 판매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을 안 쓴다. 다 정부 차원에서 직불제로 돈을 준다. 그것도 지도소나 어디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한테 직접 해당하는 돈을 준다..... 평당 수입은 우리보다 적지만, 우리나라는 소작이고 땅도 좁고 거기서 워낙 많은 땅이고 정부에서 다 보장을 해주니까, 농민을 우습게 알고 그런게 없다.

기초 산업인 농업을 살리겠다는 기본 인식 없이 농촌도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자유경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농민의 의지만 꺾을 뿐 아니라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일궈낸 노력의 결과물이 엉뚱하게 대기업 등 농촌 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가령 김정수가 예로 든 대추차 상품화의 경우에, 농민들이 과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추차를 대안 음료로 만들어냈지만, 이것이 상품화가 되자 대기업이 곧 시판에 착수하여 시장을 장악해 버렸다.

- 김정수-판로가 현재 없고 또 백화점 같은 데서 자리 배당도 안 해 준다. 내 준다고 해도 그게 판매가 안되면 안된다. 그게 좀 잘 팔린다 하면 대기업에서 그 사본을 내보내고, 그러면 큰 회사에서 하는

게 나가는 거다. 우리 농민이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나가지 않는다. 하다 못해 농민이 대추차를 만들었다. 근데 대기업에서 대추차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캔으로. 그러면 농민이 만드는 것은 죽는다. 뭐 술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농민이 개발한 가공품이 팔리는 듯하면 대기업에서 먹어 버리고, 안 팔리면 농민은 망해버리고...

심층 사례 중에는 일감갓기 사업으로 한과, 구기자차, 농산물 식품 개발 연구를 자체적으로 하는 여성 농업인들도 이와 비슷한 우려를 많이 나타내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에서 농민 중심의 정책 마련과 지원, 가령 같은 사업을 하면 농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농민이 직접 물건을 만들게 한다든지, 규모 있게 생산량을 정해서 그것만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고, 유사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참여 규제, 농협의 조직적인 생산과 유통판매 정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나) 실사에 기본적인 정책

정책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정책 방향이 어떠한지 하는지 정해지면 다음으로 할 것은 대상자에 대한 실제 상황 파악이다. 심층 사례에서 만난 여성농업인들은 행정적인 원리원칙에 근거하여 오히려 소득 증대를 위한 여성들의 사업 계획과 추진을 방해하거나, 농산물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물의 건축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이미경의 경우에는 처음에 공장을 확장할 필요성을 느껴 자신의 논에다가 확장하려고 하였지만, 논이라서 농지 전용이 안되고, 마을에 있는 땅이라고는 이웃 주민이 소유한 토막 땅이어서 일단 그곳에 공장을 지었지만 결과적으로 계획보다 너무 규모가 작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복자의 경우에도 농민 후계자가 되면 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여서 이 돈으로 농지를 사는데 쓰려고 했는데, 막상 나온 금액은 3천 5백만원이어서 계획대로 농지를 살 수 없게 된 점을 불만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농촌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 이미경-일감깎기 사업을 시작할 때 문제가 많았다. 정부에서는 7인 이상 그 미만은 안된다고 하는데, 노력을 하는 사람만 하고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은 한다고 해놓고 따라와 주지도 않았다.....그리고 지금 우리 공장 규모가 작아서 물건이 들어오면 비좁아서 애로점이 많다. 원래 토지를 크게 잡았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눈에다 공장을 세우려니까 농림부 자금을 받으면 눈에다 공장을 지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유는 모르겠고 아무튼 안된다고 해서, 이 동네는 다 논이라 여기밖에 없어서 갑자기 이리로 들어온 건데, 땅 주인은 더 이상 땅을 안 판다고 하고 그래서 확장도 못한다. 차라리 용자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애로점도 없을 텐데. 정부나 농림부가 일을 너무 행정적으로만 하는 것 같다. 지금 공장을 옮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쪽 공장(95년에 지원금 받아서 지은 40평 규모) 것을 이쪽(현재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100평 규모의 공장)으로 이동하려니 이중 노동을 하는 거다. 거리로는 5-10분 정도지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 번거롭다.
- 이복자-지금 하우스 서 있는 땅이 남의 땅이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우리가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에게 땅을 팔 수 없겠느냐"고 내가 그랬다. 갑자기 귀농했기 때문에 정리하지 못한 서울의 재산을 처분하면 구입할 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고 싶었다. 우리가 시설 투자한 것도 많고 해서. 근데 땅 주인이 안판다고 한다. 안판다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언제 또 땅을 내놓으라고 할 지 모르니까 땅을 사야 하잖아요.....내가 농민 후계자인데, 담당자가 말하기를 농민 후계자는 조금만 뽑기 때문에 5천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3천5백만 원을 준다는 거다. 그래서 "5천만원을 준다고 하고 3천5백이 뭐냐, 이것가지고 어떻게 땅을 사냐"고 담당자에게 얘기했더니 자기들끼리 "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는 5천만원씩 주라고 올렸는데" 그랬다.

또한 관련 기관에서 홍수, 폭설,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

상으로 하는 지원금 체제가 실제 농사규모나 피해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농가를 많이 낳기도 한다(김정수). 포도를 시설 재배하는 박민자는 올초 인근 마을이 모두 폭설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자신의 경우 지원금을 받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 있다고 전했다. 보조금 지급 자격기준을 엄밀하게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형식적 절차들이 실제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옥심은 작목마다 효과적인 비닐하우스 규격이 조금씩 다르다는 농업현실을 보조금 지원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깎은 하우스를 1채씩 따로 짓는 단동농법이 작물재배에 효과적이고, 방울토마토와 오이는 하우스를 연달아서 짓는 연동농법이 효과적이데 정책자금 지급규정에는 하우스 구조의 면적과 구조에 대한 제한까지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결국 부족한 시설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특정 농작물의 생육조건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역효과가 생기게 된다.

- 김정수-그게 형평성이 안맞는 게 뭐냐면, 우리 경우는 하우스가 한 동당 4-5백만원 들어서 지은거다. 호박은 8백만원 들였고. 그랬는데 그 8백만원 들인 하우스는 이 밑 동네에 10-20년 되어서 파이프 하나 꺾혀 있는거가 (폭설에) 넘어진데 대한 보상가하고 똑같이 나왔다. 보상가가 아니고 하우스 복구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8백만원 들인 하우스나 그냥 다 무너져버린 철거되는 하우스나 돈이 똑같이 나와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갔다....그러니까 어차피 평당가로 돈이 나오니까 어차피 철거할 하우스는 돈을 벌은 거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다 내 돈 들어서 복구했다.
- 박민자-우리 집도 올해 폭설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장기저리로 지원금을 받았다. 우리는 크게 하니까 지원을 받아서 올해는 좀 나아졌지만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해서 다 포기해 버렸다. 그러니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융통성있게 했으면 좋겠다.

- 이옥심-정부 정책자금의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잘못 쓰여서 한참 말이 많았는데 그렇게 전시 농정 해서는 안 된다. 깻잎도 단동농법(하우스1채로 하는 것)하는 것이 좋다. 깻잎은 열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방울토마토나 오이는 키를 키우고 세워야 하니까 연동(하우스를 이어서 짓는 것)이 좋다. 작물마다 하우스 구조가 다 틀린데 정부에서 정책 자금 줄 때는 제한구조가 있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

농사를 짓거나 일감깎기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 필요한 기계를 추천받아 구입하게 된다. 그러나 기계와 기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파악이 없이 이루어지는 업체추천 때문에 큰 빚을 안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박민자는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구기자 한과 조합의 경우 1억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튀김기계를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썩히고 있다고 했다. 박민자는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계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들이 구입한 기계는 라면 튀김기계였는데 한과를 생산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과는 손으로 튀겨야 예쁘게 일어나고, 기름도 많이 먹지 않아 느끼한 맛을 없앨 수 있는데 라면 튀김기계로는 어렵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전 과정을 모두 수작업으로 하고 떡 써는 일만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자신들도 그런 경험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몰랐고, 정부에서 추천받은 이름있는 회사라서 믿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민자는 “군에서 서류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뭘 알아요?”하며 그 결정을 무척 후회스러워 했다. 5명의 조합원이 기계구입비로 개인당 2천만원씩 빚을 지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보상책이나 부채감면 등의 후속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 박민자-그 때는 정부에서 '이런 기계가 있어야한다' 는 게 있었다.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 지금 같으면 차라리 포장기계 같은 것을 들여놓았을 것이다... 처음이고, 뭘 몰라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었다. '그 기계를 꼭 놔야한다'고 해서 튀김기계를 놔는데, 생각지 않게 그 튀김기계가 속을 썩혔다. 한과 튀기는데 필요한 온도조절이 라면튀김기계로는 되지 않았고, 또 한과는 속은 빈채로 결만 부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안 일어나고 죽고 된다. 그러니까 상품 가격까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었고 이 기계를 지금은 완전히 놓리고 있다. 그냥 묵히는 거다.

이미경과 김정수도 지방행정이 체계적인 계획없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나 기계를 들여놓는데 대해 지적했다.

- 이미경-기술센터에 가공실이 있어 그곳에 1억원 정도 기계를 들여놨는데, 우리는 우리 기계가 있으니까 이용하지 않는다. 마을별로 이용하려고 해도 기계를 옮길 수 없으니까 무용지물인 셈이다.
- 김정수-공무원들은 왜 냉동창고를 이용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냉동창고를 구입하려면 이것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조사한 후에 설치해야 하는 거다. 고구마나 감자, 사과, 배 등 저장할 수 있는 과일이 있는 곳에 냉동창고를 해줘야 하고, 우리가 하는 야채는 오늘 따서 오늘 나가는데 냉동창고가 필요하지 않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지적 당하니깐 공무원들은 예산이 나오는 대로 냉동창고를 지어라, 판매대를 지어라 한다. 담당관이 그러니까 하세요, 하세요, 그러는 거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아무도 냉동창고, 판매대 설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의 말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농촌여성 일감맞기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물어봤을 때에도 공무원은 예산이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한바 있다. 이것은 농정이 현실에 기반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산에 맞는 사업을 짜 맞추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다) 도·농 직거래 사업과 농촌 체험단의 내실화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도·농간 직거래를 통해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싸고 질높은 농산물을 매매한다는 의도로 각 도에서는 도시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의 시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으려 하고 있다. 분명히 이러한 의도는 긍정적이고 농민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밀한 준비가 없고 거래처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농민들 개별적으로 해결하게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거래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 김정수-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판로도 확보해주고 직거래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직거래를 해도 우리가 가서 직접 팔아야 되더라. 그걸 누가 가서 팔고 있겠는가. 이것 저것 다 수매를 해서 자기들이 팔아주면 좀 좋아. 근데 아파트 앞이나 행사장이나 가면 앉아서 다 팔아야 한다. 우리같은 사람은 내가 팔러 가면 누가 일해. 서울은 전부 배달을 원하는데, 근데 배달도 배달이지만, 아파트 같은 데서 나도 해봤는데, 4kg 그거 무겁지도 않다. 그것도 갖다 달라고 한다. 나는 배달은 안된다고 한다. 여기 팔기도 바쁘는데 누가 배달을 하겠는가.

조사 지역인 청양은 고추가 유명한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직거래의 허술함에 대해 지적하였다. 고된 농사일에, 가사노동에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일당 2만5천원이 아까워서 사람을 쓰지 않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운송비, 배달비, 농협에 수수료 까지 쥐가면서 직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실정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농민들이 직거래를 확보해 줘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촌 체험단 역시 도시민들을 농민 집에 초청하여 1-2일 정도 머무르면서 인맥을 쌓게 하여 향후 직거래로 이어지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효과를 거두려면 체험단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주의가 필

요하다. 가령 김정수는 살림도 하지 않는 60-70대 할머니들로 이뤄진 체험 단들이 오는 것은 할 일 없는 도시 노인들 나들이로서의 역할만 할 뿐 직거래나 기타 도·농 연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김정수-우리 집에도 어제 도시 주부들이 왔다 갔다. △△구 부녀회 장들하고 단체들에서 와서 농민들 집에서 자고 먹고 체험하는 것을 매년 한다. 부탁을 하면 이것 저것 주기도 하곤 하지만,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살만해서 먹고 놀고 시간나는 사람들만 온다. 나이 많고 60-70된 노인들이 와서 보고 가면 직거래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

라) 영농 정책의 일관성

농정의 목적은 단기적이고 이벤트성으로 효과를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장기적으로 검토, 시행되어야 한다. 심층 사례 뿐 아니라 설문조사를 하면서 만나본 대다수의 여성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산물 정책, 특히 수입 농산물과 정부 수매가 불안정에 대한 불신이 컸다. 또한 동일한 작물에 대해서도 지원과 규제라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이미경-농림부 지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한과 재료에 우리 깨, 우리 밀만 써야 된다고 지정했는데, 지금 국산만으로 하면 재료가 너무 모자란다. 특히 우리 밀은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수입 밀 가격의 5배나 된다. 농림부가 우리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 지원금을 주고 사업을 시작하게 했는데,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없는 밀을 어떻게 구할 건지, 그건 농림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입 밀을 아무도 안 먹으면 모르는데, 한과만 우리 밀을 쓰라고 하지 시중에서 모든 국민이 수입 밀을 먹고 있는 현실이다.
- 지순애-(과즙과 사슴육즙에) 나는 한국산을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 그리고 중국산이 많아서 아무리 한국산을 쓰려고 해도 가격이 안맞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우리도 사실 다 한국산이지만 1-2가지 한약은 중국산이다. 일감깎기 사업에서 검사 나오면, 국산 아닌 것은 지적한다 해도, 뭐 그걸 다 재료 항목에 적지 않으니까 모른다. 그리고 검사 나와도 모르는 척 하기도 한다.

농민들의 농작물이나 일감깎기 사업 결정이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작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순식간에 동일 품목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이 때문에 농림부가 전체 농작물의 수요 공급이 적정선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조정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이런 관리 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과잉 작물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농민들 사이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 이복자-화훼농가가 전국에 1,800개다. 근데 왜 나라에서 지금 현재도 과잉인데 왜 새로 신설되는 걸 갖다가 보조를 해주면서 하는지.. 열심히 하는 농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은 시설 개발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런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다.....그리고 화환 규제는 왜하는가. 솔직히 꽃을 아주 많이 쓰는 곳은 빼더라도, 그냥 꽃을 몇 송이만 꽃병에 있어도 사람들 마음이 즐겁게 된다. 이게 왜 과소비고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다.

마) 고용기회 확대와 남녀평등한 품값

소득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부업거리의 마련이다. 하우스나 특작을 하는 경우 겨울에도 농한기가 없을 정도로 바쁘지만, 시설재배를 하지 않고 논·밭농사만을 하는 많은 여성 농업인들은 12-2월 농한기에 부업이 필요하며 이것이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에 세워진 농공단지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농공단지는 1년 내내 상시고용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여성 농업인들은 3-4개월간의 농한기 동안 일한 부업거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결국 농공단지가 세워질 초기에는 현지 농업인들을 고용했지만 차츰 외지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최용순은 여성 농업인들에게 허용되는 농한기 부업거리는 읍내 식당에서의 설거지나 하루종일 일해도 고작 몇 천원을 벌 수 있는 향주머니 만들기 사업 등인 실정이라고 했다.

- 최용순-젊은 사람층은 다 회사로 간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이 한 40 넘어서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천상 남의집 가서 설거지 같은 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못하는 거다. 근처에 농공단지가 있다. 근데 농공단지는 부업이 아니라 거의가 회사를 정식으로 다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삼교천 횡집 같은 데서 설거지나 하고 그러는 거지. 지난 번에는 기술센터에서 향주머니 만드는 것을 해 보라고 했다. 그거라고 해 불려고 했는데 너무 가격이 약해서 아무래도 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수가 놓여진 삼베를 따로 사다가 잘라서 만드는 거였는데 하나에 50원이라 하던가...얼마 안 됐다. 한달에 가만히 앉아서 그 일만 하면 40-50만원은 되어 하는데 한달에 많이 한다 해도 소득이 얼마 안 되었다. 더구나 돌보기 볼 정도로 해야 하는데.

농촌여성의 부업거리 마련을 위해 제기된 일감갓기 사업의 경우도 많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이 연구에서 만난 사례들은 대부분 성공한 일감갓기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 또한 판로나 중복투자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관광농원도 마찬가지여서, 초기 시설투자비의 규모는 크지만 제대로 교통편이 불편한 시골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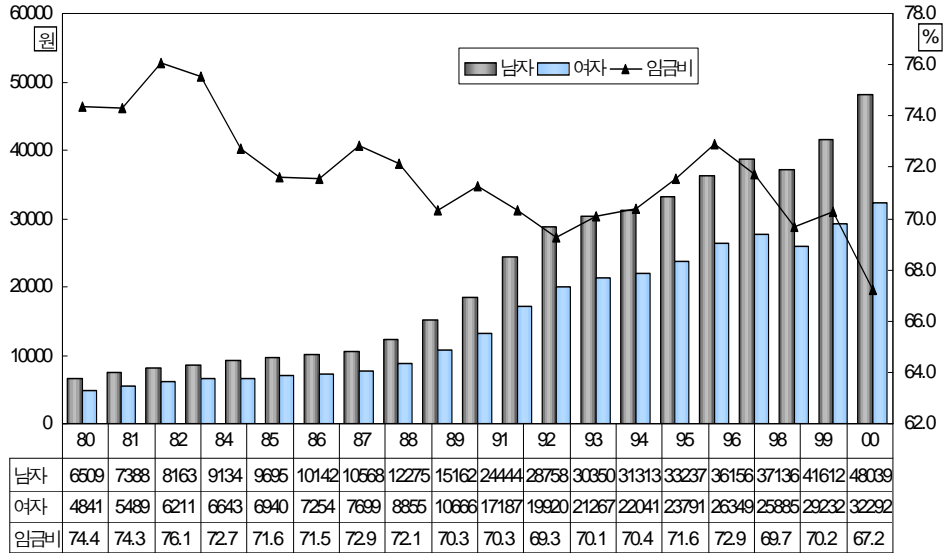
- 최용순-현재 일감갓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아무리 기술적으로 하거나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지금은 날고 간다는 사람도 많은데...판로가 제일 문제다. 옆동네 김치공장

이 있는데 별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관광농원 같은 걸 한다 해도 내가 보는 안목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 다 빚더미 속에 있다. 관광농원에 한두 번 가지 굳이 여러 번 안 가기 때문이다. 내가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관광농원이 잘 안 되니까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다. 또, 그게 지원 받은 게 그냥 받은 건가? 조금 있으면 다 갚아야 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다들 빚더미 속에 있다. 그냥 몇 억씩을 안고 있다.

여성의 부업거리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 외에 실제 농촌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감 사업에서의 남녀 불평등한 가치 평가와 지급의 문제도 여성농업인의 소득을 낮추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는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조금 소유한 사람들이 농업노동자로 일하게 된다. 많은 여성들 역시 가계소득을 올리기 위해 품을 판다. 심층 사례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품을 팔기보다는 대규모로 일군들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대규모 농장이나 일감갓기 사업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고용기회가 발생한다. 하지만 다른 사회분야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남녀 사이에 일당 차가 존재한다. 보통 여성은 2만원-2만5천원이고, 남성은 3만원-5만원 정도이다.

거시통계자료에서도 남녀간 농업노임의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그림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임금에 대한 여성임금비는 '92년에 69.3%의 저점에 이르기까지 하락추이를 보이다가 이후 증가세로 전환한다. 상대임금비는 1996년에 72.9% 까지 육박했으나, IMF 위기를 겪으면서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여 2000년 현재 여성의 농업노임은 남성노임의 67.2%으로 1980년 이래 최저수준이다.

<그림 V-3> 성별 농업노임의 추이



출처: 농협중앙회, 농가통계자료집

- 오순임-우리 동네의 경우 남자는 하루 오만원이고 여자는 이만원이다. 그런데 보통 남자 일당은 사만원씩 해도 되지만 우리는 표고도 해야하니까 오만원에 쓰고 여자는 이만원에 쓴다. 그리고 밥값을 치면 여자는 이만오천원이고 남자는 오만원에서 반찬 술값해서 육만원정도 가져야 한다. 왜냐면 무겁고 힘들어서 여자가 못하는 것은 남자가 하니까. 그렇게 줘도 어떨 때 내가 해보면 그것이 아깝지 않았다.
- 이미경-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다. 일당은 2만원씩 준다. 남자들은 한달에 2백만원 준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아주머니들이야 부업이지만 남자들은 생활을 꾸려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품값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임금노동에서의 성별 임금

차의 근거로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가 무거운 것을 들기 때문’ ‘남자가 생계 부양자’라는 관습적인 가치 때문이다. 하지만 오순임은 남자가 무거운 짐을 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자들이 앉아서 하는 발일이니까 힘은 덜 들지만 어렵기는 무척 어려운 일을 한다고 말하며, “그래도 남자는 값 때문인가 항상 남자가 더 받더라구요”, 민정임은 “남자나 여자나 (담배) 따느라고 힘든데 똑같이 줘야지” 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성별 품삯차이는 농촌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듯이 50% 이상 농업기여도를 보이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과소평가하여 여성농업인의 자긍심과 의욕을 꺾어놓게 만들 수밖에 없다.

바) 여성농업인의 현실에 기반한 정책

농정이 특정 지역이나 인물, 그리고 남녀간에 차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농민들에 똑같은 정책이 적용될 수는 없다. 특작을 하는 농가와 일반 수도작 농가, 귀농을 하여 의욕적인 젊은 세대와 60-70대의 노부부가 농사를 짓는 농가, 여성 단독 농가 등에는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의욕이나 필요로 하는 정책이 각기 다를 것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정책과 투자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투자, 의욕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져 결국은 농민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순애는 자신의 몸까지 망가지면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홍보, 교육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이복자는 실제 일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면서 자신처럼 열심히 일하려고 귀농한 사람들은 인맥, 학연, 지연 등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지순애-처음에 두 집에서 2천 4백만원씩 거의 5천만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것도 빠듯했다. 물론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시골에서 그건 큰 돈이다. 처음에 고생이 많았지만 나는 자신있었다.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한약방 개업할 생각을 했다. 너무 일이 고되서 몸이 따

라주지 않을 정도로 일했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한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인데 너무 힘들다.

- 이복자-막말로 말해서 돈 빼 쓸 사람은 다 빼서 쓴다. 열심히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도 다 빼서 쓴다. 난 그게 제일 불만이다. 진짜 열심히 농사를 지려고 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돈을 내줄거 같으면 그 사람이 얼마큼 농사를 짓고 있나, 그 집이 소득이 어떻게 되나 그런거 봐 가지고 돈을 줘야 한다. 일어날 사람도 아닌 걸 갖다가 무조건 돈 대주고 나중에는 진짜 그 사람 "빵" 나자빠지면은 그거 다 나라에서 빚지는 거 아닌가. 국민 세금 아닌가 정작 일어날 사람한테 밀어주라 이거다. 농사 열심히, 땅만 파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머리를 써가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밀어줘야 한다.

농사의 경험이 없는 젊은 귀농 세대들이 농촌에 적응하는데 드는 어려움도 크지만, 남성 부계 중심의 농촌 사회에서 여성이 경영주가 되어 독자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토지의 소유와 운영, 관리는 개별농가의 몫이지만 실제 농사는 지역 공동체의 협동이나 관련기관의 지원없이 진행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협동은 상당 부분 남성경영주를 전제로 하고 있거나 남성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 독자경영의 경우 농사에 필수적인 지원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최용순, 오순임은 모두 남편이 사망하여 현재 독자경영하고 있으며 그래서 농업자금을 대출할 때 남성이 아니라 힘들다고 했다. 대출금은 대부분의 시설투자나 새로운 작물재배 시도에 필요한 자금보다 적게 나오기 마련인데 남성이 경영주인 경우는 역시 남성인 다른 농가 경영주를 통해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3만원 이상 낸다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하는데 임대농 여성인 경우 유일한 자산인 자택만으로는 그 요건을 채우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 서로가 농가경영주이며 돈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남성들인 경우는 서로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기도 훨씬 쉽다.

- 최용순-어려운 점이 뭐냐면 농협 같은 데나 신협이나 금융기관에 가면 지금은 뭐 보증인 안 세우고 재산증명서를 달라고 한다. 재산세 3만원 이상 내는 증명서를 가져오라 한다. 그러면 5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까지는 무보증으로 빼 주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집 하나뿐이 없으니 재산세가 그렇게 안 된다. 안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서 사정해서 보증 좀 서 주소 해야 하는데 절 안 서 준다. 아무래도 아저씨 계셨을 때는 누구라도 붙잡고서는 사정을 해서라도 하겠지만, 지금은 뭐 여자 혼자니까 얘기하기도 힘들다.
- 오순임-대출금이 모자랄 때, 내가 어려우니 이런 것들 좀 더 써야 겠다 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안 된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의해서 쓰는 것처럼 하는데, 만약에 내가 300만원이 필요한데 배정이 200만원 밖에 안되면 100만원이 부족하면 다른 남자분에게 술이라도 사주고 그 분이 쓰는 것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하는데 남자끼리라서 그런지 몰라도....그런 게 참 불만이다.

여성은 현재 농업인구의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농촌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정책이 여성 농업인은 남성 경영주의 관리나 결정의 보조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독자경영주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복자의 경우는 1998년 귀농하면서 남편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으면 남자들간의 의리 등으로 빚 보증 서줄 것을 염려하여 모든 재산을 자신이 앞으로 해놓고 농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원 등을 위해 서류를 가지고 공무원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한다. 오순임은 비공식적 남성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힘든 여성 독자경영주에 대한 우선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복자-많이 힘들다. 여자로 되어 있으면...서울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 계획서라든가 다른 거 보일 때 그런걸 남자들이 본다. 지금 현재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장미 작목반도 맡고 있지만 활동은 남편이 한다. 왜그러냐 하면

뭐든지 만나는 사람이 다 남자고, 모든일을 하는 것이 남자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게 잘 안된다. 또 같이 식사를 한끼 하더라도, 시골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그런게 있어서 "아 저번에 누구랑 밥 먹데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일을 못하겠더라. 명의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다 남편이 활동을 하게 된다. 내가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더라.

- 오순임-농촌이 전부 고령화, 여성화되고 있다. 우리 마을만 해도 나 같이 혼자 사는 사람이 몇 된다. 그런 분들을 위한 농기계 보조같은 것이 부족하다. 농기계 지원이 있어서 선밭을 할 때 여성 혼자 사는 분에게 그런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혼자 살면서 일을 할려면 이양기 같은 기계가 누구보다도 필요하다.

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린투어 정책

최근 농가 소득 증대의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정책 중 하나가 그린투어이다. 농장과 특산물, 자연 환경을 관광특화 시켜서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 그린투어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 농촌 상황에서 그린투어의 전망이 그리 밝다고 볼 수 없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5일제 근무만 하더라도 경영계의 반발로 무산되고 있듯이, 도시민의 여가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농민들 역시 농사일을 제쳐두고 비정기적으로 언제 올지 모를 도시 관광객을 위한 준비에만 신경을 쏟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정부측에서도 실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데, 생활개선회 간부로 유럽 농가들을 들러본 김정수의 말에서도 우리나라의 그린투어 준비 상황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 김정수-거기(유럽)는 관광사업 같은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토지가꾸는 거 나무 한그루 있는거에 대해서도 다 보상해 준다. 우리나라처럼 관광농지 만들어 가지고 뚝뚝뚝 하는게 아니고. 토지에 나무 한그루가 있어서 농민이 그 나무를 베고 싶은데도 못낸다. 그러

면 그 나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 나무 하나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초지도 굉장히 많은 땅인데, 소를 먹이는 데도 초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일하기 좋은데는 좀 적게, 꼭대기 높은 곳의 초지는 더 많이 보상을 해주고. 우리나라 관광농업은 정부에서 돈을 대주기는 대주는데, 해놓고도 활성화가 안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투자하는 것은 활성화가 안된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신경을 쓸 정도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광농업을 장려만 할 뿐 이후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관광 홍보를 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농민에게 전달시키는 정책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 지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농원 실태와 문제점 파악에 기반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아) 공공근로 및 농가 일손 돕기 사업의 효율성 제고

많은 여성들은 공공 근로 제도가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공공근로의 경우 일당 2만 2천원을 받고 하루에 정해진 8시간만 채우고 오면 되는 데 비해, 농사일에 품을 파는 경우 일이 훨씬 어려운데도 여성의 경우 2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사람을 쓸 수가 없다고 한다. 최용순은 때때로 공공근로에 채용된 사람들이 수해지역에 복구 작업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지만 몇 명이 와도 제대로 된 일꾼 한 사람 몫을 하지 못하고 신경만 쓰이기 때문에 차라리 품을 사서 하는게 속 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민자는 일손 돕기 제도가 농업노동이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 최용순-공공근로는 8시간도 안한다. 저녁에 5시까지 해야되는데 어떨 때 보면 3시에 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하러 시골일 가서 돈 조금 몇천원 더받고 그거하겠는가? 어떨 때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차라리 (공공근로자의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한다. 괜히 신경쓰이

고..사람 몇 명 사다 쓰는 게 낫지 사람 열받아서 못 한다.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몇 명이) 종일 해보야 사람 하나 몫도 안한다(최용순).

- 박민자-농사도 이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옛날처럼 '할 것 없으면 농사나 짓지'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 같은 경우 포도 일도 안 해본 사람은 오히려 한해 농사를 망가뜨린다. 깎아도 안 따 본 사람이 따면 순 나오는 것을 보존해야하는 데 그것을 다 따서 망가뜨리니 농사도우미(공공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단순히 농사가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기술에 비해서 아주 전문이 되었다. 말 못하는 식물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라 전문적인 것이고 한두번 봐서 되는 일도 아니다. 힘으로 하는 퇴비 작업이나 박스작업 같은 단순작업은 모를까 사실상 도움이 안 된다. 우리 같은 경우도 겨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퇴비 넣을 때나 쓰지 다른 때는 못한다.

실제로 농업노동은 살아있는 생물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후와 땅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므로 다년간 숙련된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나온 기술·지식이 필요한 전문노동이다. 게다가 농가에서 일손이 필요한 때는 일년 농사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농번기 때이므로 농가도우미 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농가 도우미등 공공근로 노동력 투입이 도시의 실업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농가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자) 기타

포도농사를 하는 박민자의 경우 비싼 임대료도 문제지만 효과적으로 농업경영을 하기 힘든 임대기간 또한 매우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포도농사는 과수나무를 심고나서 바로 수확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년 지어서 3년째 되는 해부터 정상적인 수확을 볼 수 있고 과수나무는 보통

10년을 보고 재배한다. 하지만 임대농인 경우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10년 계약을 맺지 않아서 장기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박민자의 경우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자신도 젊기 때문에 농사규모를 늘리고 싶지만 땅주인과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보통 임대료는 100평당 쌀 80kg 한 가마니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 년도의 쌀 시세에 맞추어서 지불하게 되므로 박민자의 경우 3600평 포도농사를 짓는데 일년에 400-500만원 정도의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 및 임대기간이 실질적으로 땅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임대농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 박민자-우리 땅이 없으니 임대를 해야하는데 요즘은 소유주들이 장기임대를 안 해줘요. 그런데 과수 수확은 삼년째부터 정상적인 수확을 보고 첫 번은 아무런 수확도 못하고, 우리도 이년째부터 조금씩 그러다 삼년째부터 따니까 아무리 적게 한다고 해도 나무가 십년은 가야 한다. 그런데 주인이 땅을 십년 임대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년 임대를 하면 자신의 소유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이다. 재산상으로 언제 이것을 팔고자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되니까 안 준다. 그러니 늘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땅이 있으면 몰라도 대부분 농민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설사 임대를 했다고 해도 임대료가 비싸니 그런 것들이 힘들다.

표고농사를 짓는 오순임의 경우 표고종균회사와의 마찰이 큰 어려움이 있다. 종균을 심은 나무를 3500원에 사와서 키워서 수확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한 나무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절반에도 못 미치게 버섯이 나왔다. 그 일로 표고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농가가 피해를 봤지만 종균을 제공하는 회사는 ‘버섯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야 보상할 수 있다. 거기서 3분의 1일이라도 나오면 관리나 기후조건의 문제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오순임의 경우 주부대학의 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별 진전이 없다. 이런 경우 기술제공업체와 농가 사이의 정부 중개자, 혹은 중개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지원책이나 교육내용

중에 각종 생활정보나 기술정보뿐 아니라 법률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 오순임-중균 문제로 모두들 불만이고... 정부 조합원 전체가 대들어서 해야 된다. 지난 번에 주부대학의 000라는 분이 농업에 대한 법률상담도 많이 하시고 변호사신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러 와서 그 말을 했더니 '그 회사가 탄탄하냐?'고 물어보고 참고로 적어갔는데, 연락을 해 준다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피해보면 나만 어렵다.

한과를 하는 김해원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다양한 지원으로 판로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박스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원은 생산된 인삼 한과를 도시의 백화점이나 농산물 유통센터 등에 공급하고 있다. 물론 물건을 좋은 값에 팔기 위해서 상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상품포장이나 외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박스디자인을 개선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자금이 필요해서 엄두를 못 낸다고 했다. 한과뿐 아니라 농촌의 생산물을 이용한 상품의 경우 디자인 문제를 개별농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 김해원-기술센터나 충남도에서 박스 디자인을 해 주었으면 한다. 서울 분들이 맛은 훌륭한데 포장이 세련되지 못 하다고 한다. 그런데 시골에서 디자인에 몇백씩 투자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많은 사례들이 쌀을 이용한 생산품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했다. 쌀라면이나 쌀과자 등 전량수매되지 않는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소비구조를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최용순-우선은 나도 하나의 경영주로서 농사짓는 데 문제가 쌀값안정이다. 이게 진짜 농림부에서 정부에서 안 해 주면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절할라구 해도 정부에서 수매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 줘야지. 먼 재료를 쓰지 말고 쌀로 과자 같은 것도 만들고, 쌀로 라면같은 것도 만들고 하면 좋은데, 굳이 밀가루를 수입하고 우리가 지은 쌀은 이렇게 창고마다 쟁여놓고 갈 데가 없게 만드는지 대체 이해가 안가요.

- 오순임-정부 돈이 없어선지 쌀금(정부 수매가)이 준다. 또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수매량을 늘어야 한다. 이제는 꼭 밥먹는 것만으로 생산된 쌀을 다 소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해 내야 한다. 지금도 빵, 피자를 접은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쌀을 이용해서 피자도 만들고, 쌀 떡 만드는 일감잡기 사업안을 올렸다. 먼저 농민을 살리고 쌀을 살리기 위해서 쌀 소비하는 사업이 올라가면 무조건 우선권으로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사업도 해야되지만 쌀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2) 주소득원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관련 정책수요

가) 공동경영주로 여성을 인정하는 세제 개편

우리나라 남성가구주 중심의 가족농 체계에서 농지와 자산은 남성에게 상속되어 왔다. 이것은 개별농가의 남성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간혹 과세체제가 남성만을 상속자 혹은 경영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은 영농 1자녀이고, 여성은 영농 2자녀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체제는 여성에게 상속되는 농지나 자산에 대해 과도한 증여세를 부과한다.

- 이옥심-곶잎하우스 시설이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있었는데, 내가 영농후계자로 일하니까 내게 증여해 주셨다. 취득세는 내가 결혼 후 18년 동안 시부모 봉양을 했기 때문에 50%감면 받았고, 농토는 6천만원까지 증여 받으면 세금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

서에서 300만원 가까운 증여세 고지서가 나왔다. 영농1자녀로 아들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항의했더니, 농민자격이 있으면 또 면제가 된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땅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빠진 준농림, 즉 농사를 안 지어도 이용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가 안 된다고 한다....시어머니간고생해서 일꾼 재산인데 아들을 믿지 못하겠다 하여 내게 물려준 것인데 이걸 줄 알았으면 왜 내 명의로 했겠는가?

심층 사례 대상자들은 일감깎기 사업이나 독자 경영으로 소득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남편과 동등하게 농사일을 하고도 자신 명의로 된 자산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 허무감을 표시했다. 대다수의 대상자들이 결혼과 동시에 농사일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집안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한다는 태도 때문에 너무 나 일이 힘들었고, 아무런 보답이 없다는 데에 대한 항의와 분노, 허무함 때문에 공동명의를 주장하였지만, 증여세 등을 과중하게 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이옥심의 경우는 마침 영농후계자였기 때문에 항의할 만한 근거라도 가지고 있지만, 고령이거나 선정조건에 미달해서 영농후계자로 선정되지 못한 대부분의 여성 농업인은 평생 농사를 짓고도 농업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몇 백만원에 달하는 증여세가 현금수입이 많지 않은 농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며, 이것은 다시 남성에게 농지 및 농가를 상속하고 여성을 부수적인 농가 도우미로 인식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 이미경-재산중에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때만 해도 집, 논, 밭 모두 당연히 남편 명의로 했다. 근데 이 한과공장은 내 명의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공장 땅이 내 앞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장을 내 앞으로 하는 것도 안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포기했다. 이제 앞으로의 재산은 내 앞으로 할거다.

- 민정임-지금은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다. 먼 사람들은 여자 앞으로 많이 해 놓고 그랬다는데, 그런 것 좀 본받아서 땅 사면 내 앞으로 해놓으라고 그랬다.
- 김정수-내 앞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는데, 내 앞으로 할려고 하니까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더라. 하고 싶어도 세금 관계 때문에 못하고 농지 구입할 때 내 앞으로 하니까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온다.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금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나) 여성의 리더쉽 개발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심층사례 여성 14명 중 2명을 제외하고 12명이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의 간부로 매우 적극적으로 농업경영, 농업정책이나 혹은 여성농업인 문제에 관여할 뿐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기도 한다. 이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것은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삶의 경험이 주요한 동인이겠으나 좀더 본격적인 계기가 된 것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이기도 했다.

- 이옥심-내가 배움이 짧은데, 93년에 농협이 농업교육원으로 4백5일 교육을 가보라고 하길래 참여했다. 나는 부녀회장 자격으로 갔는데 거기서 교육받고 내가 깨달았다. 농촌지도자 교육이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발농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옥심은 그 이후 교육이란 교육은 약착같이 쫓아다녔으며, 여성지도자로 선정되고 00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졸업하고 일본연수도 다녀왔다고 했다. 이 여성은 자신의 활동력을 확장시키고 리더쉽을 개발할 적절한 장

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잠재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계발한 기회가 없었던 여성들에게 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연수기회의 확충은 여성농업인 현실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이들 스스로 마련하고 제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이영란-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여기 와서 한 21년 살았는데, 엄한 시아버지 밑에서 살다보니까 내가 보기에든 내가 너무 무식해졌다. 사회 활동을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모른다. 이렇게 외부에 나가보면 우리 여성들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다. 나는 무식하니깐 맨날 가만히 듣기만 하지만, 그래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면 배워야 되고.... 그래서 교육을 많이 다니는 편이다. 현재 00대 최고 경영자 과정 6기인데, 일년을 다니니까 교수님들도 많이 사귀고, 같은 道내 경영인들끼리 많이 복습을 한다.
- 이복자-농촌 최고 경영자 과정은 올해, 그러니까 3월 달에 2년 과정으로 시작했다. 그거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무엇보다도 컴맹에서 탈출했고, 또 근시적으로 안일하게만 생각하기 보다 다른 농가의 어려움이라든가 뭐 다른 거를 접할 수 있었다...뭐 그 집의 농사 경험 이런 거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내가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거에 활력소가 생긴 것 같다. 다른 거 할 때도 "아, 나도 공부도 할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다. 난 이제 못 할게 없어" 이제 모든지 다 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 트랙터 같은 거는 우리 농장에 필요하지 않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면 자격증까지 내가 다 딸 자신이 생겼다.
- 민정임-내가 생활개선회 활동을 하니까 도회지 여성하고 우리하고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 갈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고추 농사를 하니까 택배도 보내주고 팔아달라고 전화번호도 주고 하니까 직거래가 트이는 거다.

여성 농업인들에게 외부 활동은 자신감과 농가 경영의 주체라는 인식을

현저하게 높여주는 동시에 타 지역의 여성간의 연계를 통해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 농촌 여성 지도자 육성 방안과 관련되어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나 시부모님 등 주변인의 인식이 여성의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농업정책 결정 단위에서의 여성 참여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농협의 경우 여성조합원이 수적인 면에서는 많지만 여성이사가 되기는 힘들고, 여성이사가 있더라도 구색을 맞추기 위한 선택일 경우가 허다하다.

- 이영란-우리 남편은 보수적이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대고 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여자가 나돌아 다니고 맘대로 한다고 매도 맞았어요. 지금은 바뀌었죠. 처음에 여자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일만하고, 엄격한 시아버지 밑에서 살다보니까.... 근데 어찌다 보니 변화가 많이 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되었고.....
- 이옥심-적목반, 농협대의원, 농협에서도 여성농업인이 50%가 넘고 농협을 이용하는 것은 여자가 더 많은 데 대의원은 다 남자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성이사도 두라고 해서 선임제로 관심도 없는 부녀회장들을 선임제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는 그런 점이 싫다. 당당히 이사로 출마해서 대의원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되어야지, 이번에 내가 출마할 것이다. 남편은 이런 나를 지지해주지만, 또 한편으로 그 동안 많이 했으니 이젠 그만 하라고 한다. 시어머니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신다.

김정수의 경우에는 생활개선회 간부로 유럽과 일본 2차례 농업 시찰도 다녀오고 각종 교육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인터뷰 과정에서 다양한 농업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여성들의 경험과 지식은 향후 농정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김정수, 이복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대기업의 홈페이지에 광고할 계획, 시장 조사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고안 중인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 공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은 개별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김정수-이번에 일본의 생활개선회를 가봤는데, 거기는 농협에서 모든 주관을 다 해가지고 그 작목을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해서 한 집에서 많이도 안하고, 한 것은 거의 다 수매를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만 하지 가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는 편이다. 그리고 딱거는 그 현장에서 가공을 한다..... 우리 아들 친구가 회사에 다니는데 그 애가 인터넷에 띄워서 상품주문을 따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도 회사의 홈페이지마다 들어가서 주문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궁리중이다.
- 이복자-다른 사람들은 꽃이 좋다 나쁘다로만 구분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여섯 가지 표정으로 꽃을 구분해서 묶기 때문에 인력 소모가 많다. 하지만 결과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효과적으로 돈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우리 방식을 많이 따라 한다.... 묶는 것도 우리는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야 꽃을 더 이쁘게 묶을까, 포장지에 싸여 있는 방식에 따라 같은 물건도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

다) 현실적인 교육 일정과 모듈 개발

한편, 조직면에서의 리더십 개발뿐 아니라 농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개발자나 경영자로서의 여성 리더십 개발 또한 절실하다. 전통적으로 기술과 기계에 대한 정보 획득과 개발은 남성의 영역이라고 인식되기 쉽지만 젊은 여성들의 경우 기술획득이나 컴퓨터 교육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박민자는 인터넷을 배워 포도 판로에 활용하고 싶다는 희망을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하는 기술교육은 주로 농번기에 행해지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교육기간이 너무 짧아서 항상 자판 배우다가 끝난다고 했다.

현재의 교육들은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도시적 생활구조를 모델로 한

다. 하지만 농민들이 가장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겨울 농한기인 12월-1월 안팎의 저녁 7시-8시쯤이다. 교육뿐 아니라 농업인 대회 등의 농업인 관련행사 또한 늘 최고의 농번기에 있어 참석하기가 어렵다. 관련 부서의 예산, 집행, 결산 등의 연간 일정을 고려하고 지역공무원의 출·퇴근 시간 또한 배려해야 하지만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 나올 수 있는 시간의 책정이 필요하다. 지역공무원의 시간 외 근로가 문제된다면 지역의 사설하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고, 특정 지역에 컴퓨터나 일감갓기 사업 관련 교육 요청이 있다면 면 단위로 마을 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 박민자-군이나 기술센터 등에서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1주일 배워서 아무 것도 못 한다. 나도 일주일 배워봤지만 컴퓨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좌판 익히는 것 하니까 끝이다. 그런 교육도 다 낮에 한다. 자기네들이 낮에 일해야 하니까... 전시행정이다. 형식상 갖추기 위해서 해주는 것 같고, 아무런 필요가 없다. 사실 한다면 저녁 7시부터 해야 하고 몇 달 장기간으로 해야 한다. 신문에 정보교육이라고 해서 크게 나오기도 하지만 솔직히 이틀 정도 하니까 남자들도 못 한다. 사실 일주일 열흘해도 못 배운다. 우리가 머리 잘 돌아가는 어린 애도 아니고 사십이 넘은 사람들이 그것을 할라니깐 어렵다.
- 지순애-과즙과 사슴 육골즙은 약이 아니고 건강 보조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 한의학 관련 책을 보고. 기술센터 같은 곳에 교육은 전혀 없다. 그런게 있으면 좋겠다. 홍보도 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컴퓨터를 배우긴 하는데, 나가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도청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긴 했는데, 쓸모가 솔직히 별로 없다. 그런 것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

Ⅵ. 여성농업인의 소득안정 방안

제Ⅵ장은 여성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본고가 개발한 정책안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농업구조를 전망하고, 농업 및 농외소득 안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농가여성의 농업소득 제고방안과 농외소득 제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1. 주요 분석결과

가. 농가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2.81명으로, 2000년도 「농가경제조사」에서의 평균가구원수인 2.91명에 비해 약간 적다. 동거자녀수는 0.64명으로 농가인구의 고령화 및 열악한 농촌의 교육 및 취업환경으로 인해 많은 자녀가 진학 및 취업을 위해 농촌을 떠나는 추이를 반영한다. 한편 농가의 평균 영농인구수는 2.05명이고 여성 영농인구수가 1.08명, 남성 영농인구수가 0.96명으로 여성 영농인구가 더 많아 영농인구의 여성화 추이를 뒷받침하고, 대부분의 농가가 부부단위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보여준다.

농가가 소유한 농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소유지가 없는 농가가 25가구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조사대상 농가에서 가장 보편적인 소유형태는 논과 밭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 전체가구의 41.7%가 이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논만을 소유한 농가가 30.6%이었고, 논, 밭, 과수원 등 복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가도 14.1%에 이르렀다.

농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총 소유면적은 가구당 3,641평이며, 총 경작면

적은 5,029평으로 약 1,400평 정도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 가장 판매금액이 많은 작목을 조사한 결과, 논벼가구가 가장 많아 50.0%이었고, 그 다음으로 채소, 특용작물, 축산의 순이었다. 수도작 농가가 절반에 해당함으로써 향후 쌀시장 개방압력이 거세짐에 따른 대응전략의 모색이 매우 시급하다. 과수농가가 적은 것은 조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나. 여성농업인의 인적 자본

농가여성의 1/3이 60대이고, 평균연령이 57.4세로(배우자의 평균연령은 59.6세) 농업인력의 고령화 추이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40세 미만 여성은 전체의 11.1%에 그치고, 40대 연령층의 비중이 13.9%이다. 학력을 보면 초졸 이하가 81.6%이고 중졸과 고졸이 각각 9.2%, 8.8%이다. 또한 조사지역 내 여성은 모두 기혼여성인데, 이 중 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18.8%이고 나머지 81.3%는 유배우 상태이다. 이로서 조사대상 지역내 대다수 여성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수도작 지역의 고령, 저학력 여성이며 1/5에 가까운 여성은 배우자가 사망한 고령노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대다수는 결혼과정을 통해 농업으로 편입해 들어가는데, 이러한 진입 과정은 인해 여성농업인이 지역공동체에서나 농업경영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농업관련 결정사항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개입시키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표 IV-9> 참조).

특수한 인적자본의 하나인 기능의 습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 보유 여부를 질문한 결과, 자격증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13.9%에 그친다. 이들이 소유한 자격증의 종류를 보면 오토바이 운행 자격증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운전면허증과 원동기면허증이 각각 28.3%, 13.0%이었다. 간호조무사, 정보처리 자격증, 식당면허증,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각각 1명씩 있었다.

조사대상 농가중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가 총 66가구로 22.6%를 차지한

다. 이중 여성농업인이 컴퓨터를 활용해 본 여성은 12명으로 전체 여성의 4.2%에 그친다. 어떤 용도로 컴퓨터를 활용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5명은 농업정보를 활용하는데 그리고 2명은 회계장부 등 영농경영관련 작업을 위해, 1명은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중 농업과 관련하여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해본 여성은 8명이었고, 홈페이지가 개설된 농가는 3가구에 그쳤다. 영농활동을 위한 정보화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수준은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여성농업인의 영농 특성

농가여성의 89.9%는 지난 1년간 3개월 이상 영농활동을 한 농업주종사자이다. 배우자의 경우 주종사비율은 94.9%로 더 높다. 1개월 이상 농업의 일에 종사한 여성은 35명으로 전체 여성의 12.2%를 차지한다. 이들 농외취업 여성중 46.9%는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고, 31.3%는 농업의 자영업에 종사하였다. 사무직 및 서비스직에 종사한 여성의 비율은 각각 9.4%이었고, 판매직 비율은 3.1%이었다. 배우자중 농외취업자 비율은 여성에 비해 떨어지지만, 취업내용은 거의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 여성의 90%는 농업주종사자이고 1개월 이상 농외취업자 비율은 12%로서 농가의 농업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가 여성중 경영주는 13.5%인데 이들의 대다수는 고령이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경영주가 된 경우로서 진정한 경영주로 보기 어렵다. 남성의 경우 93.8%가 경영주이었고 경영주이면서 영농승계자인 경우가 2.7%로 여성과 정반대 그림을 그린다. 여성농업인의 절대 다수는 가구원으로서 농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평균 영농했수는 무려 36.2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조사대상여성이자 전반적인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추이를 반영함과 동시에 농촌거주의 특성상 타 직종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다른 직종에서의 근속년수와 평면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비농업부문에서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긴 근속연수이다. 장구한 근속연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화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며, 농업직이 단순생산직이 아니라 영농했수에 따라 숙련이 향상되는 전문직일 때 비로서 신규노동인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농업인중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전체의 71.5%에 이르지만, 부녀회,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등에서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고, 작목반이나 농협과 같은 직능단체에서의 참여 정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총 288명의 여성중 작목반원 및 농협조합원인 여성의 비율이 각각 13.2%에 그친다. 농가여성은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만이 생산자단체에 참여하는 등 아직 대다수 여성은 농업생산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 네트워크시대에 돌입하면서 각종 생산, 판매, 유통관련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고, 정보가 곧 자산이 되고 있으므로 여성의 생산자 네트워크의 참여는 전략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라. 농가소득 및 그 구성

농가소득은 크게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및 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농업외소득은 다시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으로 나뉜다. 조사대상 여성의 가구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모두 있다는 가구가 4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농업소득만 있다는 비율로 41.0%이다. 농업소득이 없고 농외소득만 있는 가구가 10.1%이었고, 이전수입만으로 생활하거나 아예 가구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5%, 2.7%이었다. 이번 조사대상자중 농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83.7%에 이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농촌은 크든 작든 농업소득이 여전히 중요소득원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외소득이 있는 경우가 52.8%로서 절반 이상의 농가가 농외취업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수입만으로 생활하는 농가는 전체의 3.5%에 불과하지만, 이전수입이 있는 농가는 총 112가구로서 38.9%에 이른다. 이전수입원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있는 농가중 %에 해당하는 농가가 자녀송금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가장 흔한 이전수입원은 자녀송금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수당 및 교통비를 받는 여성이 23명이었고, 연금 및 정부의 영농관련 지원금이 그 뒤를 잇는다.

2000년도 연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농가가 농업과 농외소득이 모두 있는 겸업농(123가구)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농가의 연소득은 1,208만원이었다. 농업소득이 주소득원인 전업농(118가구)의 소득은 1,105만원으로 그 다음이다. 농외소득만 있는 가구의 소득은 456만원으로 나타났고, 최저소득을 갖는 가구는 이전수입만 있는 경우로, 연평균 소득이 71만원에 그쳤다.

전체 조사대상가구(288가구)의 연소득은 평균 1,017.2만원으로 나타난다. 농가소득을 분해해보면, 농업소득이 769.6만원으로 총농가소득의 75.7%를 차지한다. 농외소득은 201.7만원으로 19.8%를 차지하고, 이전수입은 45.9만원으로 4.5%에 해당한다. 농외소득의 ⅔이상이 사업외의 소득이었고, 나머지가 겸업소득이었다. 이로써 본 조사대상 가구는 농업소득이 총가구소득의 ⅔에 해당하는 아직은 전업농에 가까운 농가가 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가 농외소득인데, 농외소득에서는 자영업보다는 농외취업을 통한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결과는 향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몇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농가소득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므로 농가소득 제고방안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농업소득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겸업농의 가구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므로, 농가소득의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소득을 안정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농외소득원 발굴이 필요하며, 셋째, 다양한 농외소득원 중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원을 발굴하되 사업외 소득원의 발굴이 보다 현실성있다는 것이다.

마. 여성농업인의 소득 및 그 구성

여성농업인은 협업배우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영주가 되는 농업과 겸업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지 않지만, 중심인력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만큼, 여성농업인의 소득을 추정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농가가 수행하는 작목별로 다양한 영농과 겸업사업 각각에 대해 농가단위의 총노동투입시간과 여성농업인의 노동투입시간을 조사하였다. 노동투입시간에 기초하여 여성농업인의 소득기여율을 추정하였다. 예컨대, 콩 재배 및 판매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소득은 여성농업인, 배우자, 기타 가구원이 콩재배에 투입한 1일 노동시간수를 조사하여 합계한 수, 여성농업인의 투입노동시간수를 나눔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소득기여율을 추정한다. 이 여성농업인의 소득기여율을 콩재배로 인한 소득에 곱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농업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그 결과,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투입시간수는 총투입시간수의 6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성농업인의 참여도는 여성농업인이 더 이상 농업의 보조자가 아니라 농업생산의 한 축임을 여실히 증명한다. 특히 밭작물과 특용작물에서 여성노동의 기여율은 70%에 근접함으로써, 여성이 주력노동력인 작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축산농가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조사지역에서는 노동시간 면에서 볼 때, 여성의 기여율이 7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농작업에서 여성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바. 여성농업인의 자산 소유 실태

여성농업인의 재산소유권을 보면 여성농민의 재산소유 정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과 공동체에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명의의 자산이 있는 여성농업인이 전체의 23.3%인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신명의의 자산이 있는 여성중 논을 갖고 있는 여성이 37.3%로 가장 많았고, 전화기(16.7%), 가옥(15.7%), 밭(12.7%), 자동차 및 기계(11.8%)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자산의 종류별로 여성의 소유비율, 즉 논에 대해 자기명의의 소유지분이 있는 여성이 전체 여성중 13.2%로 자산 중에서 여성소유비율이 유일하게 10%대를 넘었다. 가옥이나 전화기를 소유한 여성은 5%대에 머문다.

사. 여성농업인 소득추정 결과

여성의 농업소득을 결정하는 주 요인은 여성의 연령 및 생산자조직의 가입여부(작목반 또는 농협), 가구의 경작규모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고령화가 농업소득을 낮추는 요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농촌의 유지를 위해 일정한 규모의 중장년층의 확보가 선결과제라 하겠다.

이번 추정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여성의 생산자조직 가입여부가 농업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농협조합원과 작목반원인 여성농업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층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추정결과는 여성이 보조인력이 아니라 중심인력으로 참가하는 경우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여성농업인의 소득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할 정도로 여성의 전문인력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함과 농협과 작목반 등에 가입하고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여성농업인의 학력변수는 농가경영주의 학력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대와는 다른 방향을 나타냈다. 이는 여성의 80% 이상이 초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는 등 저학력자에 편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그 밖의 인적자본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방향은 일반적 기대와 일치한다. 즉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영농활동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여성이 경영주인 경우 미미하나마 여성의 농업소득이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연간 총소득함수식의 추정결과는 농업소득 추정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추가된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면, 농가의 주작목이 논벼일수록 여성의 연간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농업인과 농가의 소득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작 중심에서 영농형태가 다양화해져야 하며, 이 필요성은 쌀시장 개방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외취업 여부가 그다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조사지역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농가소득을 변화시킬 만큼 농외취업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것과 유관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 심층면접조사 결과

심층 면접대상 여성 농업인들은 과수, 오리농장, 고추, 담배, 인삼, 포도, 깻잎, 표고, 한우 등의 특작을 주작목으로 하고 있었고, 일감깎기 사업 등의 농외 사업도 경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생활개선회에서 임원을 맡거나, 대학의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40대가 8명, 50대가 5명, 60대가 1명으로 분포함으로써 일반 여성농업인 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다. 농촌여성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장년 여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하겠다.

2. 향후 농업구조의 전망

가. 세계 농정의 변화 동향

농업생산은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풍흉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생산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시장물량이 조금만 변하여도 가격이 크게 변동한다는 점에서 가격위험이 높다. 이러한 생산위험과 가격위험으로 인해 농업인은 소득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각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농업기반 정비, 품종의 연구개발 등을 통해 농업생산의 위험을 낮추는 데 노력하는 한편, 농산물의 가격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매, 비축, 방출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왔다. 또한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직접지불제 등 소득 보조방식과 작물 및 소득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등의 방식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농업생산과 시장의 특성에 기인하는 농업인의 생산, 가격, 소득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넓은 의미에서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에 포함된다.²⁶⁾

1995년의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은 각국의 농업정책을 감축대상정책과 감축면제정책(또는 허용정책)으로 구분하고, 감축대상정책을 매년 일정 비율만큼 감축해 나갈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농업생산과 농산물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은 감축대상정책으로 분류되며, 여기에는 정부수매 등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조는 물론 영농자재에 대한 가격보조와 저리의 영농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전통적 방식의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이 감축되어 각국의 농업인은 보다 높은 소득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WTO 협정은 농업생산과 농산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는 방식의 농업정책들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접지불정책, 농업보험, 소득안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다. 또한 WTO가 허용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과 영세민 구호를 위한 국내식량원조 등의 정책수단들도 제한적이거나 시장수급안정을 통한 소득안전망 정책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WTO 협정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정책을 통해 농가소득의 안전망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26) 이하 세계농정의 동향부분은 신기업(2001)에서 요약·정리함.

미국은 수출 지향적인 대규모 상업농들이 많으며, 전통적으로 가격지지, 식부제한, 수출지원, 국내식량보조 등의 방식으로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왔다. 그런데 1996년에 새로운 농업법을 제정하여 식부제한정책을 폐지하고 가격지지정책을 감하는 대신 직접지불정책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농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직접지불 보조금은 2002년까지 확정된 매년도 예산으로 지급되며 보조금 규모는 작물 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직접지불제 예산은 1995년의 73억 달러(농업소득의 20%)에서 2000년에는 229억 달러(농업소득의 51%)로 늘어났다. 또한 쌀 재배농가의 경우 정부의 소득보조금은 1995년의 ha당 383달러에서 2000년에는 989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EU는 1992년에 농정개혁을 통해 종전의 가격지지수준을 인하하고 일정면적의 휴경을 조건으로 농가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직접지불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였다. 1999년에는 제2차 농정개혁을 단행하여 농산물 지지가격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직접지불 보조금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의 안전망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EU 농업예산의 77%가 직접지불예산이며, 이러한 소득보조금이 농업소득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직접지불 방식의 소득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WTO 체제 하에서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나. 향후 농업구조의 전망

■ 농업구조의 고도화

- 1990년대 추진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 투융자 확대에 따른 생산잠재력 증가로 농산물은 전반적인 과잉기조에 진입. 축산, 과수, 채소 등 종래 「농업 성장의 엔진」이 약화되고 근년에는 쌀 재고과잉 문

제에 봉착.

- 따라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체질 강한 농업으로 변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를 위해 국민식량의 자급목표 설정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 농업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대비한 지식농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투자 등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 또한 수확 이후 관리기술의 개발에 의한 고부가가치화 및 상품성 제고, 농산물 품질인증제의 확대 시행과 국제수준의 규격지침의 마련 등으로 품질고급화와 품질인증제를 정착.
- 농산물·농식품 수요패턴과 소비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농업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신선·저칼로리·건강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가공식품 및 외식 소비가 확대되는 등 고급농식품 중심으로 소비구조 변화.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 고부가가치 농식품 수요창출 및 수출시장 확대와 IT·BT를 활용한 새로운 농업동력의 발굴이 농업성장의 관건.
- 첨단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 초고속정보통신망(ADSL), PC 보급 등 정보인프라 확충과 정보화 교육확대로 정보활용 능력을 제고. 농림업 부문의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축, 농자재관리·회계 등의 전산화와 산지 생산자 조직의 정보화를 지원하여 농업경영의 효율성 증대.

■ 농업의 복합산업화

-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소비자 지향적 식품생산과 유통체계의 구축 및 생산·가공·유통·투입재 분야까지 포괄하는 농식품 복합산업화. 이를 위해 정보화시대의 신유통·신물류 체계의 구축, 농산물 가공 및 식품안전 관리 등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친환경농업

- 그동안 증산위주의 농업정책 기조하에서 화학비료·농약의 과다사

용,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농업 생산의 환경오염 부하가 증가. 따라서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고 자연순환 농업을 확산하여 흙·물·공기 등 생태보전을 강화해야 함.

-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화학비료·농약사용의 감축계획 조기 실천, 직접지불제에 의한 친환경 영농의 무조건 강화, 가축분뇨 총량규제 도입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또한 경작·축산·임업을 연계하는 지역내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심화

- 각종 공해와 도시문제의 심화에 따라 관광·휴양지 및 전원생활의 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따라서 농촌이 타산업 및 도시인구와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산업·생활의 공간이 되도록 종합적인 농촌지역정책을 추진.
- 전원생활, 관광·휴양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소비자 수요도 증가. 농어촌 지역 관광객이 1999년 1억6700만명에서 2010년에 3억 2800만명으로 연평균 6.3%씩 증가될 전망. 자연환경·농촌경관·전통문화의 가치증진을 통해 관광자원화 하고,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여 소득원 창출

■ 농가 경영안정 및 위험관리 강화

- 향후 농업여건으로 예견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불확실성의 증대를 들 수 있음. 농산물 시장개방이 진전되면서 수입농산물에 의한 국내시장의 교란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관측을 강화하고 가격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조금 조성 등의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장치를 마련. 안정영농을 위한 생산기반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해·재난 대비시설의 정비 및 현대화 지원을 강화

- 농산물 수급불안 및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농가소득안정 직불·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 세계곡물 수급상황에 대하여 주기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용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하도록 노력

3. 농가소득 안정의 기본방향

가. 안정적 농업소득의 확보

첫째로 농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농특사업, 복합영농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유통개선 등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경영규모는 영세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지난 30년간 농업생산성의 증대가 상당히 완만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때문이기도 하나 비교적 균형개발을 한 다른 나라에서도 농업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소농체제 하에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기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에 봉착한다.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농산물 가격수준을 유지해야 하나 이 또한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의 농산물 가격이 국제경쟁력을 잃은 상태이고 또 농산물 가격인상은 일반물가 불안정으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이 요구된다. 선진국들은 직접지불 방식의 소득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WTO 체제하에서도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논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이 2001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WTO협정에 따른 정부수매 감축을 보상하고 논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1년도 논농업 보조금은 ha당 20-25만원에 불과하여 농가소득 안정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농가별로 보조금 지급대상이 최대한 2ha에 불과하여 영농규모화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 WTO 협정 이후 쌀에 대한 국내보조가 매년 750억원씩 감축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은 증액될 필요가 있다.

밭농업의 경우에도 농산물 수입의 확대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위험이 매우 높다. 이 경우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도 중요하지만 WTO 협정에 따른 시장개방과 보조감축으로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밭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나 밭작물은 지역별 품목별로 수익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논농업처럼 단순한 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활성화, 친환경농업, 영농기반정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사과와 배에 한정하여 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정부의 농업보험전담기구가 없고 농가 보험료에 대한 정부보조가 30%에 불과하여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대상 작물을 확대하고 보험료 보조수준을 상향조정하여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망된다. 아울러 재해농가에 대한 장기 저리의 재해융자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나. 다양한 농외소득원의 발굴

농업정책의 변화나 제도개선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존 규모를 기초로 한 농가소득 증대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소득은 농업생산성, 농산물가격 및 농업경영비 등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들 모두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농업소득만으로 농가의 가계비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다양한 농업외 소득원의 발굴이 요구된다.

농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중 비중이 큰 것은 특히 노임수입으로 농업노임은 자가노동력 투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내부에서든 도시에서든 근로자를 영농활동에 고용하고 그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대만과 일본에서 농외소득 중 급성장한 부분은 비 농업 부문의 노임수입이다. 공업화의 지방분산, 도로교통망 개발, 통근거리내 식품가공공장 등이 분산위치해 있다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관광농원, 특산단지 등 농외소득원 개발사업들은 농촌지역의 고용과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참여한 업체 중 상당수가 부실화되었고 최근에는 정책사업 추진 자체가 지지부진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외소득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노임 및 지가의 상승에 따른 농촌입지의 유리함 감소, 자본·정보 집약적 기술 변화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참여 업체의 경영방식이 변화되는 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그간 농외소득이 증대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농촌지역내 가내수공업 개발의 저조이다. 현재 실시중인 가내수공업은 농가의 부업으로는 개발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 지역에 발생한 가내수공업은 그 지역의 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 향후 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금융서비스, 유통시설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앞으로 지역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외소득 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겠지만 사업여건은 지금보다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촌의 임금·지가 상승과 무역자유화를 감안할 때 가격경쟁력에 의존한 저품질의 제품, 서비스로는 경영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높은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유무형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후방 연관효과를 높임으로써 종합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

4. 여성농업인 소득제고 방안

가. 여성의 농업소득 제고방안

1) 복합영농 및 기술영농의 주역으로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여성에게 상속되는 농지나 자산에 대해 과도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는 개편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작목반 및 농협조합 등의 가입은 여성의 소득을 제고시키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생산자로서 직능단체에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생산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 요건이 된다. 따라서 현재 13% 수준에 그치는 생산자 단체에의 가입률이 제고되어야 한다. EU의 여성농업인 정책도 이제 농가가구원의 일원으로 대우하는 차원에서 여성농업인 개개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가족농내 가구원으로 보기 보다는 개별 농업인으로 대접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가 인터뷰한 전문 여성농업인의 상당수는 새로운 기술과 컴퓨터 교육에 대해 적극성을 나타낸다. 예컨대 포도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은 인터넷을 배워 포도 관로에 활용하고 싶다는 희망을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하는 기술교육은 주로 농번기에 행해지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고 교육기간이 너무 짧아서 항상 자판 배우다가 끝난다고 한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도 양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여성농업인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추어 모듈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2) 여성농업인의 IT능력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ILO는 정보접근 제고가 농업·농촌문제와 같이 대안이 많지 않은 곳에

서 최고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Hafkin, N. & N. Taggart, 2001). 여성농업인은 중요인력임에도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기여를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은 가장 부족한 집단이다. 농촌여성에게 가용한 정보자원이 부족함을 감안하면, 정보교환의 가장 빠르고 또 저렴한 수단인 IT는 여성농업인의 요구를 맞추고 또 농촌사회에 도움을 줄 잠재력이 크다. 신작물 재배기술, 판매, 새시장, 친환경 재배기법, 식품저장 및 보관, 상거래법 등에 대해 정보와 지침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정보화 추이 속에서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전체 인터넷거래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²⁷⁾ 여성농업인도 이런 추세에 편승할 수 있도록 개별 홈페이지를 개발·구축하여 농산물 사이버마켓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홈페이지 구축 농가간의 지역별, 품목별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 농업인 사이버동호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3) 여성 농업인의 기여도 측정과 보상체계 마련

여성농업인의 기여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마련은 그 자체로 여성농업인의 소득제고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농업인들의 농업 참여는 남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고, 가사노동과 노약자 돌봄 등을 고려할 때 현금화 할 수 없는 소득 기여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자산이 여성농업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결혼으로 농사에 진입하게 된 여성농업인들은 처음에는 농촌 전체에 팽배한 가부장적 사고로 이러한 자산의 남성 세습을 당연히 여기다가도 20-30년 동안 농사를 짓고도 자신의 기여도가 아무런 형태로도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허무하게 여긴다.

27)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는 ('99) 250 → (2000) 500 → (2001)1,000 → (2002) 2,1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농업인 여성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와 여성 기여도를 측정할 평가 방식의 부재로 인해, 농촌의 남성 중심적 사고 방식은 이들의 절망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 협정”을 정부 기관이 장려하여 가족 구성원간에 평등한 소득 분배와 가사노동 분담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모범 사례의 검토와 세제 정책의 개선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기여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제공될 때 여성농업인들의 농업 참여는 더욱 확대,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연금제도와 같이 여성농업인이 남성의 피부양자 지위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지금의 모델을 유지하면 상당수의 여성노인이 (많은 노동기여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협업배우자이지만 즉 여성의 수급권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주로 규정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았을 때만 기본연금액의 12-18%에 불과한 유족연금을 받는다. 이혼후 혼인기간에 대한 수급권은 인정되지만 이혼후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의 분할청구권도 상실된다. 또 재혼해도 청구권이 제한된다.

여성농업인의 연금수급권을 제고하는 방안은 두가지이다. 첫째, 최근 유럽국가에서 나타나는 수급권의 개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여성농업인에게 개별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임의가입을 촉진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 크레딧(출산육아등 경제활동 못한 자에게 일정기간 연금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등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석재은, 2001).

둘째, 파생수급권을 유지하면서도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①퇴직연금이나 연금수급권을 부부가 분할할 수 있도록 하거나, ②육아, 출산등 가족보호활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하거나(독일은 1992년 연금개혁법에 의해, 10세 이하 부양아동을 가진 여성은 아동양육에 근거한 연금수급권을 가짐. 자녀가 1991년까지 출생한 경우에 1년, 1992년부터 출생한 경우 3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마치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인정받음. 즉 아동의 출산, 육아 및 수발노동을 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연금관리공단이나 일반조세에서 대납해 줌), ③이혼이나 별거때 뿐 아니라 결혼기간

에도 연금수급권을 부부가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재훈, 2001).

4) 여성 농업인 소득제고를 위한 농정 평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사례조사를 통해 만난 여성 농업인들은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하여 현재 어떠한 사업이 효과적이며, 무엇이 소득 제고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의견은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그리고 농업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본인들의 생활 스케줄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농번기에 교육 시간을 잡는 것과 같은 비효율적인 시간 설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작정 예산에 근거한 정책 마련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농산물에 따라, 농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심층 사례 여성 중 상당수는 생활개선회의 임원으로 일본, 유럽 등지의 견학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외국과 우리나라 농정을 비교하면서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직거래를 스스로 개척하거나 타지역 여성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발전 프로그램을, 경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지역 여성들의 의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이런 해외 견학의 기회를 갖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활동 역시 남편, 가족 구성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리더쉽을 교육하는 것은 개별 여성의 능력 개발 뿐 아니라 그 여성을 통해 새롭고 농촌 소득 향상 정책이 나온다는 점에서 전체 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아직까지 여성이 남성의 보조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촌에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리더쉽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5) 영농담당 공무원의 젠더교육

여성농업인에 대한 과도한 세계 문제라든지 기여도 측정 방식의 부재 등은 아직까지 여성농업인을 농업의 부차적인 인력으로 보는 농정 관련 담당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독자 경영자나 적극적으로 공무원에게 찾아가 자신의 요구 사항을 협상해야 하는 여성농업인들은 남자끼리 술을 사준다거나 인맥을 이용하여 지원금을 배당하는 등의 남성 중심적 농정 수행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불편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협소한 농정 수립과 시행으로는 현재 농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적극적으로 농촌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의욕마저 꺾는 결과를 초래한다. 농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 그리고 지역 남성 농업인들에 대한 젠더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농업인 역시 농업 생산의 일차적 주체자로서 농업 정책의 평등한 수혜자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6) 언론 보도의 개선

언론의 과장, 허위보도가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농민들의 의욕을 상실시키기도 하고(김정수), 도시민들에게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도·농간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이영란).

- 김정수-어느 날 보니까 어디서 이것을 했는데 소득이 굉장히 좋다, 농민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다. 그래서 진짜 그게 잘 되나보다 했는데, 몇 개월 못 가서 하나도 우리 현실에 맞지도 않고, 소비도 안되고 판매도 안되더라. 결과는 해보지도 않고, 농민들에게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신문에 다 나가고.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줘야 한다.

- 이영관-내가 처음 사과 농사를 지을 때는 농약값 2천원 할 때 사과 한 짝이 만원 했다. 근데 지금은 농약값이 7-8천원 하지만 사과 값은 2만-2만 5천원이다. 그전으로 따지면 사과 가격이 몇 배나 떨어진 것이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안하고 만원 가지고 시장 나가면 살 거 없다고 그런 얘기만 신문에서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농정 수립의 기본은 농민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그만 언론 보도 한 줄이라도 이것이 농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금만 신경쓰면 언론이 농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적절한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 박영숙을 인터뷰 하던 과정에서도 지역 신문에서 고추 직거래 광고를 보았다면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언론이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화훼 농가를 하는 이복자도 언론의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 이복자-크게 보도를 안 해줘도 텔레비전에서 대통령 담화문 같은 거 발표할 때, 무슨 행사 할때 그 앞에 꽃을 놓은 것을 자주 보여주고 하면 사람들 기분도 좋아지고 이게 다 홍보가 되는 거다. 다른 게 홍보가 아니다.

나. 여성의 농외소득 제고방안

1) (가칭) 농촌여성취업센터의 설치

- 다양한 취업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알선 보도기능
- (가칭)“농촌여성취업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정보, 직업상담, 직업훈련 관련 정보제공.
- 도시의 “일하는 여성의 집”과 같은 기능.

- 읍면사무소, 농촌의 여성회관 등 기존시설 이용

2) 수공업 창업기회의 활성화

- 독일의 경우 여성자영자의 상당수가 수공업 창업자임.
- 정부는 농촌의 전통문화 및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하고, 개발된 상품의 포장, 디자인 등의 인프라 지원
- 지방정부는 홍보 및 판로 개척
- 상품화 과정에 농촌여성이 개입하여 자영자 또는 근로자로 참여

3) 농공단지 활용에 대한 실사와 개선 필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84년부터 추진된 농공단지는 2000.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295개가 조성되어 약 3천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최경환, 2001).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에 포함된 농공단지는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에 있는 애경 산업단지 한곳에 불과하지만, 청양군에만 하더라도 이외에도 운곡 농공단지, 비봉 농공단지, 화성 농공단지 등 50여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최경환은 위의 글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농공단지 개발에 대한 검토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청양군의 “청양통계연보”(1999)를 인용하여 현지인의 농공단지 취업자수가 67.9%에 이른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해당지역 관공서 직원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통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초기에는 현지 주민들이 애경 공단에 취업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근무 연수가 5년이 지나면서 수당 지급 등의 문제로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고, 그 자리를 도시에서 이주해온 젊은 여성들이 메꾸었다고 한다. 현재 사례조사 지역의 바로 옆동네인 애경 사원 아파트에는 2001년 8월 현재 44가구 123명이 거주하고 있다.

농공단지에 대한 최경환의 연구와 실제 지역의 평가가 다른 것은 2001년 8월 현재 시점에서 참고자료의 통계가 상당히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른 지역의 농공단지 현실 역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농공단지는 일거리가 없는 농촌에 소득원을 제공하고, 기업측에는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Win-Win 전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애경 공단이 사례에서처럼 기업이 농촌의 값싼 노동력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농촌 주민들을 고용, 해고시킨다면 농공단지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고, 농촌 소득 향상이라는 초기의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농업인들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일감 제공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농업 종사와 병행할 수 있는 일감이다. 가령 농번기에 아무리 많은 일감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아무런 소득 증대 기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농공단지를 비롯한 농외소득 사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활용도와 소득 기여도를 측정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생활 일정에 부합한 일감갓기 사업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봉균. 2001. 6. 22. “한국 농업발전의 장기비전.” 농협 최고경영자 아카데미
강연원고.
- 김영옥·김이선. 1999.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
국여성개발원.
- 김영옥·양승주. 2000.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시안)」. 농림부.
- 김영옥. 2000.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복지방안,” 「농촌사회」 11집. 농촌사회학
회.
- 김이선. 1997.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충청남도 3개
마을 사례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주숙. 1996. “농촌여성 문제와 정책과제, 21세기를 향한 농업인의 역할.” 「21
세기를 향한 농업인의 역할」.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 기념 국제학술
대회 기념논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정정길. 2001. “일본과 대만의 농외소득정책의 실태와 시사점.” 『농촌
경제』 24권 2호, 2001년 여름호, 농촌경제연구원
- 박순일. 1995.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서울: 일신사.
- 반성환. 1979. “농가소득의 결정요인과 소득분배”. 주학중. 「한국의 소득분배
와 결정요인 (상)」. 한국개발연구원.
- 석재은. 2001.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여성단체연
합, “양성평등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 세계농업뉴스 제 10호(2001. 6) “EU 여성농업인의 취업동향”
- 신기엽. 2001.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편), 「농업기술회보」 2001년 12월호, 12-15쪽.
- 유병서. 1983. “농가소득구조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한국개발연구」, 5권 1
호
- 유병서. 1991. “농가소득분포와 부문간 소득격차,” 「농업정책연구」 18(1) :
63-77.
- 오내원·김은순. 2001. “농외소득의 실태와 정책방향.” 「농촌경제」, 제2호.
2001 여름

- 이병기. 2000. “한국경제위기 전후 농가소득불균등 변화와 정책과제.” 「농업 정책연구」.농업정책학회.
- 이은우. 1995. “도농간 소득격차의 실태와 원인,” 「경제발전연구」 : 249-267.
- 이장영. 1997. “시군 지역 소득불평등의 비교연구,” 「농촌사회」 7: 217-245.
- 이호철·최수영. 2001. “지역 여성농민의 실태와 정책적 대안 제시,” 경북대 경제경영연구소(편), 경상논집, 제29권 제1권, 2001. 6.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여성농민연구소. 1997. 「‘97 대선 여성농민 정책 과제」. 토론회 자료.
- 정기환. 1992. “농촌빈곤가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부권 4개 마을의 사례,” 「농촌사회」 2: 235-257.
- 정기환. 1997.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재훈. 2001. “국민연금제도와 성인지적 관점,” 여성단체연합, “양성평등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 주학중. 1981 “도·농간 소득격차의 재고”, 「한국개발연구」 13(3): 2-22.
- 최경환. 2001.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농촌경제」, 2001년 여름호(제24권 2호)
- 한국여성농민연구소. 1997. 「21세기 한국농업과 여성농민」.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 여성농업인 심포지엄 자료.
- 農村生活綜合研究センタ. 1999. 『女性の 能力發揮による 魅力ある 畜産經營の 確立』.
- 農村生活綜合研究センタ. 1999. 『農業經營体の發展と その要因に 關する 調査研究』.
- 農村生活綜合研究センタ. 2000. 3. 『酪農經營・果樹作經營における 女性の 資産形成』.
- 農村生活綜合研究センタ. 2001.3. 『家族經營協定の 實效性と 今後の 推進に 向けて』.
- 마쓰오카 고우메이. 2000. 일본 월간 JA. 2000. 8월호.
(<http://www.coops.or.kr/ja-6.html>).

Alston, Margaret. 1995. “Women and Their Work on Australian Farms.” Rural

- Sociology 60(3) : 521-532.
- Chapman, P. & Lloyd, S (eds.). 1994. *Women and Access in Rural Areas*. Aldershot : Avebury.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2000. *Women active in rural development: Assuring the future of rural Europe*.
- EU Common Agricultural Policy Studies. 1999. *Labor situation and strategies of farm women in diversified rural area of Europe*.
- Fremont, Jean-Marc. 2001. "Agriculture in Europe: the spotlight on women." *Statistics in focus*. 2001. 5-7
- Gasson, Ruth. 1984. "Farm Women in Europe : Their Need for Off-Farm Employment." *Sociologia Ruralis*. Vol. XXX-3/4 : 216-227.
- Hafkin, N. & N. Taggart. 2001. *Gender,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veloping Countries: An Analytic Study*. USAID. 2001 June.
- Keating, Norah C. and Little, Heather M.. 1994. "Getting Into It : Roles and Careers of New Zealand Women." *Rural Sociology*. 59(4) : 720-736.
- Liepins, Ruth. 1998. "Fields of Action: Australian Women's Agricultural Activism in the 1990s." *Rural Sociology*. 63(1): 128-156
- Meares, Alison. 1997. "Making the Transition from Conventional to Sustainable Agriculture: Gender,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on the Family Farm." *Rural Sociology*. 62(1): 21-47
- Oldrup, Helene. 1999. "Women Working off the Farm: Reconstructing Gender Identity in Danish Agriculture." *Sociologia Ruralis*. 39(3)
- Reimer, Bill. 1986. "Women as Farm Labor." *Rural Sociology*. 51(2) : 143-155.
- Sachs, Carolyn E. 1983. *The Invisible Farmers*. NJ : Rowman and Allanheld.
- Schmitt, Mathilde. 1994. "Women Farmers and the Influence of Ecofeminism on the Greening of German Agriculture". in Chapman, P. & Lloyd, S (eds.).
- Shortall, Sally. 1996. "Training to be Farmers or Wives? Agricultural Training for Women in Northern Ireland." *Sociologia Ruralis*. 36(3): 269-285
- Walter, Garry and Suzanne, Willson. 1996. "Silent Partners: Women in Farm Magazine Success Stories, 1934-1991." *Rural Sociology*. 61(2): 227-248.

부 록

마을조사표

마을 주소:	군(시)	면(구)	리(동)	부락
이장(통장)님 성함:	(전화:)

1. 생활 여건 및 유관기관 현황

1-1. 마을의 위치 개관 (산, 강, 저수지 등 지리적 특성, 지도 등 첨부)

1-2. 도로 및 대중교통/ 자동차 보유 현황 및 변화상

- 버스노선 횡수, 편이성.

1-3. 주된 농업형태 (농업지대, 영농현황, 주작목 및 그 변화 등)

-> 성별/연령 등에 따른 차이 기재

1-4. 마을의 농외소득자원 (농공단지, 일감갓기사업, 관광농원, 녹색체험등 녹색관광, 인근 공장 또는 관광지 등) -> 성별/연령 등에 따른 차이 기재

1-5. 일반시설 현황 (관리 정도, 이용실태, 운영비, 정부지원금 정도 등)

-교육시설: 유치원(놀이방), 탁아시설, 초중고등학교

-의료시설: 약국, 보건소, 병원(의원)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시중은행

-공동시설: 문화시설, 마을회관, 여성회관, 노인정 등

-유통·판매시설: 시장, 공동적재장소, 공동판매소 등

1-6. 생산자 조직의 유무와 이용실태(농민단체, 농협, 영농기술센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 성별/연령 등에 따른 차이 기재

2. 가구 및 인구 현황(2001년 8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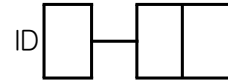
2-1.

가구수	총 _____가구 농가: _____가구 비농가: _____가구 독거가구: _____가구
-----	---

2-2. 인구구조

연령구분	남자(명)			여자(명)			합계
	계	결혼	비혼	계	결혼	비혼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2-3. 마을의 전반적인 생활형편(논밭 소유면적, 연간소득, 생활보호 대상자 등)
-> 성별/연령 등에 따른 차이 기재



여성농업인의 취업유형별 소득전망과 정책개발

< 여성농업인 설문지 >

2000년도 농가소득이 1997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농가소득의 안정문제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체 농업인력의 51%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소득증대는 여성자신과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성농업인의 소득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전무했습니다. 이에 여성농업인의 소득을 추정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자 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8월

연구책임자: 김영옥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탁기관: 농림부

조사문의: ☎ 02-356-0070 (교환. 326), 011-9701-3734

1. 가구사항: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현황

성명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만)	학력	지난 1년간 농업에 얼마 동안 종사하였습니까? ①없음 ②3개월미만 ③3개월이상	지난 1년간 농업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하였습니까?		경영주(①) 및 영농 승계자(②) 여부 (번호기재)
						①1개월미만 (없다포함) ②1개월이상	①자영업 () ②생산직 () ③사무직 ④서비스직 ⑤판매직 ⑥기타()	
	본인	여						

1-1. **영농인구수** 총 _____명 남자: _____명 여자: _____명

2. 귀하께서 농사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3. 귀하가 농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결혼을 하여 ②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하고자
- ③ 도시생활이 어려워서 ④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 ⑤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구체적으로 _____)
- ⑥ 농사를 짓고 싶어서(구체적으로 _____)
- ⑦ 기타(_____)

4. 농지 소유 및 작년 한해(2000년)의 경작현황

(단위: 평)

구분	소유면적				빌린 것	총경작면적 (지난 1년간)
	총소유면적	휴·폐경면적	빌려준 것	경작면적		
논						
밭						
과수원						
초지·임야						
기타						

5. 작물별 수확 및 판매 현황

5-1. 작년 한해(2000년) '노지에서' 수확한 작물의 면적과 소득을 작물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작물명	식부 면적 (평)	판매 총금액 (A)	농업경영비(B) (기계임차료, 농약, 비료, 종자, 인건비등)	농업소득액 (A-B)	본인의 기여율 (%)	하루투입 노동시간		
						본인	배우자	기타
01 논벼								
02 보리								
03 옥수수(식용)								
04 콩								
05 팥								
06 감자								
07 고구마								
08 김장무								
09 김장배추								
10 고추								
11 양파								
12 대파								
13 마늘								
14 참깨								
15 인삼								
16 기타								
계(01+..+16)								

- ▶ 모든 작물의 수확여부와 면적 등을 순서대로 확인
- ▶ 작은 면적도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5-2. 작년 한해(2000년) '노지에서' 수확한 채소의 면적과 소득을 작물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작물명	식부면적 (평)	판매총금액 (A)	농업경영비(B) (기계임차료, 농약, 비료, 종자, 인건비등)	농업소득액 (A-B)	본인의 기여율 (%)	하루투입 노동시간		
						본인	배우자	기타
01 상추								
02 쪽갓								
03 시금치								
04 당근								
05 토마토								
06 오이								
07 들깨								
08 땅콩								
09 기타								
계(01+.+09)								

5-3. 작년 한해(2000년) '시설에서' 수확한 채소의 면적과 소득을 작물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작물명	식부면적 (평)	판매총금액 (A)	농업경영비(B) (토지·기계임차료,농약, 비료, 종자, 인건비등)	농업소득액 (A-B)	본인의 기여율 (%)	하루투입 노동시간		
						본인	배우자	기타
계								
30무 31배추 32시금치 33상추 34토마토 35오이 36딸기 37수박 38참외 39고추 40양채류 41포도 42감귤 43메론 44화훼 45버섯 46기타작물								

- ▶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을 말함.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건조장, 창고등)은 제외
- ▶ 같은 작물을 연2회 이상 수확한 경우는 모두 합한 면적을 조사

5-4. 작년 한해(2000년) 사육한 가축과 소득을 종류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가축명	마리	판매총금액 (A)	경영비(B) (시설·기계임차료, 사료, 약, 인건비등)	농업 소득액 (A-B)	본인의 기여율 (%)	하루투입 노동시간		
						본인	배우자	기타
01 한·육류(젓소수컷포함)								
02 젓소암컷								
03 돼지								
04 닭								
05 젓산양								
06 염소								
07 사슴								
08 토끼								
09 오리								
10 꿀벌(통)								
11 기타(개, 면양등)								
계(01+..+11)								

▶ 애완용이나 관상용 가축은 제외

6. (영농형태)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농사는 무엇입니까?

(판매가 없는 농가는 수확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비교)

- ①논벼 ②과수 ③특용작물 ④채소(시설 및 노지) ⑤화훼 ⑥일반밭작물 ⑦축산
⑧양잠 ⑨기타()

7. 앞으로 영농규모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각각의 응답에 대한 구체적 이유 기재)

- ①현재규모 유지 ②확대 ③축소 ④잘모르겠다
- 

7-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각의 응답에 대한 구체적 이유 기재)

8. 귀댁이 작년 한해(2000년) 동안 농업외 소득과 이전수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8-1. 농업외소득중 겸업소득

어떤 사업 (상공업, 서비스업, 산나물 채취, 일감깎기사업, 관광농원 등)	수입 총액 (A)	경영·유지비(B) (시설·기계임차료, 재료비, 인건비등)	소득액 (A-B)	본인의 기여율 (%)	하루투입 노동시간		
					본인	배우자	기타

8-2. 농업외소득중 사업이외 소득

누가	어떤 일로 (노임, 급료, 임대료, 배당이자, 폐품판매수입 등)	얼마동안 일해서 (몇개월 또는 몇일)	얼마나 벌었습니까? _____만원
본인			

▶ 한사람이 여러 가지를 한 경우 모두 적을 것

8-3. 이전수입

이전수입 (사례금, 공·사적 보조금, 경조금, 자녀송금 등)	무엇? _____	총 _____만원
--------------------------------------	-----------	-----------

9. 다음의 생산자조직 중 귀하가 작년에 참여한 조직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종류	작목반						법인		농업 협동 조합	생활 개선회	농가 주부 모임	기타()
	논벼	과수	채소	특용 작물	화훼	기타	영농 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활동 횟수												
활동 내용												

▶ 활동횟수는 작년(2000년)에 활동한 총횟수를 말함)

9-1. 다음의 생산자조직 중 귀하의 남편이 작년에 참여한 조직을 모두 표시
해 주십시오.

종류	작목반						법인		농업 협동 조합	생활 개선회	농가 주부 모임	기타()
	논벼	과수	채소	특용 작물	화훼	기타	영농 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활동횟수												
활동내용												

10. 운전면허증등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으시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11. 현재 댁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보유

②미보유



11-1. 귀하는 농업에 조금이라도 컴퓨터를 활용하였습니까?

①활용

②미활용



11-2. 귀하는 농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였습니까?

①농업정보 수집 ②전자상거래 ③시설자동화 ④농업경영관련

⑤기타()

11-3. 귀하는 농업과 관련하여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였습니까?

①사용

②미사용

11-4. 귀하는 농업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까?

①사용

②미사용

12. 귀하 명의의 농지나 기타 자산이 있으십니까?(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

①논 ②밭 ③과수원 ④자동차나 기계 및 시설 ⑤집 ⑥전화기 ⑦기타()

13.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평소에 생각하신 바를 자세히 제안해주시오.

♣ 귀하의 의견은 농가소득 안정 방안수립에 귀히 쓰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